

인권정보자료실
R1.1.9

인권하루소식

합본9호
(97년 하반기)

.....



인권운동사랑방

인권하루소식 ● 합본9호 (97년 하반기)

인
기
인권정보자료실
R1.1.9
사
랑
방



인권운동사랑방 110-522 서울시 종로구 명륜2가 8-29 (4층) 전화 741-5363 팩스 741-5364

<인권하루소식> 97년 8월분 총목차 (937-957호)

호	월일	면	기 사 제 목
948	8/19	1	한국타이어 취재기자 보복조치, <말>지 보도트집 명예훼손 혐의 고발/한국후꼬꾸 단식농성 34일째, "용역장패 철수" 촉구/새책소개- [빛장을 여는 사람들] 여성장애인을 위한 최초의 여성잡지
		2	이철용씨 간병인 공무방해 구속, 전농동 책임규명 요구 철거민 10명도 구속/주요공판안내/주간인권흐름
		3	<인권시평> 왜곡된 인식-반인권의 주범(김동한 광주여대 교수)
949	8/20	1	극에 치달은 경찰 과잉감제수사, 농성 방문자 알몸조사·집시법 적용/대우조선노동자 직업병 무방비 노출
		2	전국각지 노동인권 몸살, 고용·임금문제에 폭력·구속 잇따라/이랜드 노조 59일만에 파업투쟁 승리/주요공판안내
950	8/21	1	한총련 사냥엔 인권무시·법무시, 수배자 애인 불법연행 뒤 밀고 강요/알아들시다-경찰관 직무집행법
		2	제2회 인권영화제 화제작-쇼아/한국타이어 고발기자 경찰 소환/주요공판 안내
951	8/22	1	전농동사건 원인·책임자 규명됐전, 피해주민 등 철거민 구속자만 잇따라/정동근 씨 안기부 연행, 범민련·통일운동 관련인 등/행사와 동정
		2	한국후꼬꾸 단식농성 34일만에 교섭재개, 2차 단식자 등 명동농성 계속/열사·희생자 명예회복 촉구, 합동추모제 9월 1~7일/제2회 인권영화제 화제작 2편 <호남호녀> <루치아>
952	8/23	1	경찰과잉수사 갈수록 가관/"노동권 생존권 압살", 현재판결 전면 백지화 촉구/우리땅 되찾기 전국 공대위 출범
		2	<출범선언문> 우리땅 미군기지 되찾기 전국공동대책위원회/헌법재판관 지명 비합리적, 참여연대 인사청문회 도입 주장/전자주민카드 반대운동 재개
953	8/24	1	한국타이어 '울며 겨자먹기식' 타결... 해고자 7명 복직, 손배소송 철회/전·노 사면 저지 캠페인, 첨가대학생 불법연행/양대 노총·여연 등 '퇴직금 우선 변제 위원결정' 현재 판결 백지화 촉구/명성평신도회 후꼬꾸 텐트철거, 이승진 씨 16일째 단식농성
		2	국제장애여성 리더쉽 포럼 보고대회 "장애여성들이여 자신의 목소리를 갖자"/주요공판안내/주간인권흐름 (97년 8월18일부터 24일까지)
954	8/27	1	"퇴직금도 임금이다"... 정부 '노조죽이기'에 맞서 투쟁결의/국민승리 21, 현재 판결 백지화/관변단체 국고지원 50% 증액 "대선앞둔 의도적 편성"/노동자 단식투쟁 중(한국후꼬꾸 등)
		2	안산 민주청년회 회장등 3명 연행, 국보법 상 이적단체 가입혐의/제2회 인권영화제 '아동' 영화 2편<눈물의 사슬> <히틀러와 아브라함>/서울국제노동자 미디어 발족식/주요공판안내
955	8/28	1	경기도경, 민주청년단체 죽이기 혈안...회사 찾아가 협박, 해고당할 판/김진성 씨, 이적단체 혐의 빠진채 기소 "이적표현물 본 적도 없다"
		2	<세계의 인권 17> 연재를 마치며 "20세기말의 우울한 인권성적표"
956	8/29	1	'구국선봉대 청년' 이적단체 혐의 벗을 듯, 재판서 무리한 적용 드러나/새책소개 <대한변협 1996년도 인권보고서> (11집) "96년 신매카시즘으로 양심수 급증"
		2	병역면제 규탄, 의문사 진상규명 촉구, 유기협 31일까지 명동성당 농성/한국타이어 보도기자 출두거부 "성폭력 피해사건 아직 수사중"/민주노총 하반기총력투쟁 결의 "퇴직금 해결·정리해고 저지"/국민승리21 "택시노동자 완전월급제 지지"
957	8/30	1	김수환 추기경, 페스카마호 사형 집행정지 요청/하루소식 만평 고정 게재, 만화가 이동수 씨가 하루소식 독자에게
		2·3	<인권하루소식> 97년 8월분 총목차 (937-957호)

<인권하루소식> 합본8호(97년 상반기) 발행, 가격 1만원(우송료 별도)

인권하루소식

97년 9월

(제958호 - 제975호)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interpia.net • http://www.interpia.net/~rights

1997년 9월 2 일(화)

제 958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광주·대구 “전·노 사면 반대”

정략적 사면 주장에 각계 반발

정치권의 전두환·노태우 씨 사면론이 본격화되고 있다. 그러나, 광주지역은 물론 전·노 사면운동의 근원지로 알려진 대구지역 일각에서도 현 정치권의 사면논의에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 30일 김대중 국민회의 총재가 주간지<뉴스메이커>와의 인터뷰에서 “광주지역 사람들도 사면에 이견 없다”고 언급한 것과는 달리, 광주 각계에서는 “전·노 씨의 사면은 지역 여론이 아님”을 명백하게 표명하고 있다.

광주 경실련측은 “사면론은 국민합의가 가능한 시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며 “선거를 앞두고 정치지도자들이 이를 정략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광주시민연대 모임의 박재만 씨도 “대선을 전제로 한 사면엔 반대”임을 확인했다.

5·18 유관단체들의 반응은 더욱 단호하다. 8·15 사면설이 나돌던 지난 달 11일 5·18유족회, 부상자회, 구속자회 등은 공동성명을 통해 ‘사면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으며, 1일 구속자회의 김호동 사무처장은 “김 총재가 누구의 의견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지역 여론은 전·노 씨의 사면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사무처장은 “5공 군사법정에서 내란죄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들에 대한 제심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전·노 사면론은 거론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뿐만 아니라, 사면운동이 활발한 것으로 알려진 불교계나 대구·경북지역의 여론도 사면론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불교교육원의 강명호 사무국장은 “공식 의견이 정리된 것은 아니나, 광주학살의 진상규명 등이 제

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면은 불가하다는 것이 대체적 입장”이라고 밝혔으며, 대구 경실련의 조광현 정책실장은 “불교계 일부와 이룸도 처음 듣는 단체들이 사면운동을 벌였을 뿐, 대구지역 대부분의 시민·사회단체쪽은 사면 반대 입장”이라고 밝혔다.

대구 사원주지연합회의 이수찬 과장 역시 “지역여론이 현 정권에 대한 불만 때문에 사면을 원하고 있기는 하나, 정략적인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사견임을 전제로 “두 사람의 처리는 법대로 해야 하며, 사면을 한다고 해서 동서화합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대중·이회창 씨의 사면주장이 알려진 뒤, 각계에서는 즉각 반박성명과 논평이 잇따랐다. 권영길(민주노총 위원장) 씨를 대통령 후보로 옹립한 국민승리21(가칭)을 비롯해 과거 청산국민위원회(상임대표 김상근 등),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상임의장이창복), 통일시대민주주의국민회의(사무총장 이문령), 참여민주사회시민

연대(공동대표 김중배, 김창국) 등은 전·노 씨 사면론에 대해 “알파한 정치논리” “정략적 주장”이라고 일제히 비난했다.

기아정상화 촉구 단식자 연행 자동차연맹 위원장 등 25명

기아그룹 정상화를 촉구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하려던 조준호 자동차연맹(전국자동차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등 25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조 위원장 등 자동차연맹 간부와 기아자동차 노조간부들은 31일 오전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아 및 협력업체 정상화 촉구 및 정리해고제 도입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마친 뒤, 여의도 기아그룹 본사 앞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하려다, 불법집회라는 이유로 경찰에 전원 연행됐다.

연행자들은 1일 현재 면회가 허용되지 않는 가운데 영등포, 남부, 양천, 구로, 강서경찰서 등에 분산 구금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

민주노총은 조 위원장 등의 연행에 대해 “기아정상화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짓밟는 것이며, 임시국회시 정치권의 비판분위기 고양을 두려워한 계획적 탄압”이라고 비난했다.

인권하루소식이 새단장을 합니다

- 인권의 평 필진이 바뀝니다. 이석태 변호사와 장호순 교수(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가 앞으로 6개월 동안 인권의 평을 맡아 다음주부터 격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 ‘만화사랑방’이 신설됩니다. 시사만화가 이동수(우리만화발전을 위한 연대모임 사무국장) 씨의 날카로운 풍자와 해학이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인권만평을 통해 선보입니다.
- ‘인권영화제 상영작’ 소개가 계속됩니다. 제2회 인권영화제 기간(9/27-10/4)까지 영화제 상영작들에 대한 소개가 매주 두 차례씩 이어집니다.

거리선포식·학술회의·범국민추모제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 및 기념주간

올해로 두번째를 맞는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 및 기념주간'을 알리는 선포식이 1일 오후 3시 명동성당 입구에서 유가족·철거민·노동자 등 7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전국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기념) 단체연대회의(상임의장 이창복)는 "조국의 자주, 민주, 통일 도상에서 자신의 목숨을 초개처럼 바친 3백21명의 열사·희생자들을 기리며 이들의 정신계승을 위해 추모 및 기념주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부영(민주당 부총재) 의원은 "세상이 얼마나 변했다고 정치지도자들은 전·노 사면을 얘기하나. 이젠 (전·노가) 반성하지 않더라도 추석전에 무조건 사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그러면서도 왜 민주화와 평화를 외치다 감옥에 들어간 이들에 대해선 한마디 말도 없느냐"고 비판했다. 또 이 의원은 일본의 과거 왜곡과 부정을 언급하며, "우리의 역사를 허술히 여기고, 범죄자들에게는 관심을 가지면서 양심수에겐 무관심하다면, 일본의 태도를 비판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선포식에 이어 3시30분경부터는 88년 5월15일 명동성당 교육관 옥상에서 '공동올림픽 개최와 미군철수'를 외치며 투신·사망한 조성만 열사의 거리 선포식이 있었다. 또한 이날 오후 5시부터는 가톨릭회관 3층에서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제3차 학술회의가 마련되었다.

제8회 범국민추모제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 및 기념주간은 7일까지 열리는데, 2일 오후 5시 동대문운동장 앞에서 전태일거리 선포식, 3일 오후 3시 잠실교통회관 앞에서 택시노동열사거리 선포식, 4일 오후 5시30분 인천 경동산업 앞에서 김종하·강현중·최용거거리선포식이 있다. 또 6일 오후 2시에는 제8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제가 서대문 독립공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주요 공판 안내

- ▶2일 (화) 최영철 (한총련,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오전 10시, 319호, 합의23부, 속행
- 오경만 (한총련, 국보법등) 오전 10시, 311호, 합의21부, 속행
- 장윤영 (국보법등) 오전 10시, 522호, 8단독, 신건
- ▶3일 (수) 유병서 (한총련, 국보법등) 오전 11시, 319호, 합의22부, 속행
- ▶4일 (목) 이명박외3 (선거법 위반), 이성혜외4 (한총련,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 등) 오전 10시, 319호, 합의23부, 선고
- ▶5일 (금) 전은영 외3, 홍연아 외1, 오진석 외8 (국보법 위반 등), 오후 2시, 319호, 합의22부, 신건

주/간/인/권/호/름

(97년 8월 25일부터 31일까지)

◆ 25일(월) 재경원,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등 관련단체에 대한 정부지원규모를 올해의 1백10억원에서 98년 1백65억원으로 50% 증액 밝혀/금속연맹, 소속사업장 16곳의 노동자 1백36명에 대해 건강 검진 결과 89.5%가 각종 근골격계 질병 시달려/미국 인터넷 뉴스서비스인 <MSNBC> 보도, 미국은 한반도의 비무장지대 일대에 약 1백만 개의 병어리 지뢰를 묻어 놓았다고

◆ 26일(화) 언론노련과 한국기자협회 등, 국방부의 <한겨레> 기사 출입금지 및 취재 불허 조처 철회 요구/민주노총, 서울역 광장서 '퇴직금 우선변제 위한 결성 백지화 및 생존권 사수대회' 열어/보건복지부, 98년부터 에이즈 감염자와 환자들의 임시보호소인 에이즈 감염자 쉼터 운영 예정/대법원 민사1부(주심 정귀호 대법관), "불법채류 노동자 모하메드 압둘칼렐(방글라데시) 씨에게 퇴직금 지급하라"고 판결/<다켄스 니헤데르>지, 1935-75년까지 시력장애인, 정신박약자 등 6만 명의 스웨덴인들이 불임시술 받았다고 폭로/국제적십자위원회, 지뢰금지조약의 조속한 타결을 지지하는 세계 1백여 개국에 지뢰의 예외 없는 전면금지를 적극 밀고 나갈 것 촉구

◆ 27일(수)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영모 재판관), 삼정피해자동지회 대표 이택승 씨가 "재정신청 대상을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입법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합헌 결정/대기업 연쇄부도와 경기침체의 여파로 밀린 임금이 사상최대인 1943억원에 이르러/재경원 등, 내년 근로자주택 건설 국고지원금을 당초 4천5백억원에서 3천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이는 예산편성 잠정안 합의

◆ 28일(목) 교육방송 노조 전면파업 돌입/녹색교통운동 발표, 우리나라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 스웨덴에 비해 12배가 높은 등 선진국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 29일(금) 일본 최고재판소, 일본군의 생화학부대인 731부대의 생체실험 등에 관한 기술을 교과서에서 삭제토록 한 문부성의 결정은 잘못이라고 판결/유가협 의문사지회 소속 유가족, 강제징집돼 의문사한 자식들의 죽음에 대한 진상 규명 요구하며 31일까지 명동성당 농성

◆ 30일(토) 공보처, 언론사에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는 정간법 개정안 입법예고 예정

◆ 31일(일) 이회창 신한국당 대표, 전·노 전직 대통령을 추석 전에 사면하도록 김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서울지법 민사합의11부(재판장 김기수 부장판사), 신변에 위협을 느낀 사람이 신변보호를 요청했는데도 경찰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살해했다면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interpia.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7년 9월 3일(수)

제 959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과거청산 공세 가능할까 사면론 일단 제동...향후 사회단체 활동 주목

2일 김영삼 대통령이 "추석전 사면 불가"의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전두환·노태우 씨의 사면논의가 일단 주춤거리게 됐다. 그러나 전·노 사면에 반대해 온 시민·사회 단체들은 사면 불가의 원칙을 계속 확인하며 예정된 집회와 토론회 등을 이어갈 방침이다. 우선 과거청산국민위원회(상임대표 김삼근)와 민주노총, 전국연합 등은 예정대로 3일 오후 2시 여의도에서 '정략적 전·노 사면 기도 규탄대회'를 갖고 신한국당과 국민회의를 항의방문하기로 했다. 또한 「국민승리21(가칭)」(대표 권영길, 이창복)도 4일 오전 10시 '전·노 사면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진정한 과거청산없는 전두환·노태우 씨 사면불가" 원칙을 재확인할 예정이다. 국민승리21측은 당초 4일 기자회견을 통해 전·노사면에 반대하는 모든 정치세력과 시민 단체에 대한 비상시국연석회의를 제안할 예정이었으나, '추석전 사면론'이 물 건너감에 따라 제안은 유보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점에서 5일 '전·노 사면 문제의 바람직한 처리방향'이라는 주제로 과거청산국민위가 주최하는 긴급토론회는 향후 시민·사회 단체들의 행동방향을 예측케 한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자리다. 이날 토론회는 당초 '추석전 사면 저지' 운동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으나, 제 민주단체 및 각계의 전문가들과 함께 전·노 사면과 과거청산운동에 대한 포괄적 논의를 펼치는 장으로 그 성격이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토론 결과에 따라 정치권의 '사면 공세'에 방어적으로 대응하던 제민주세력이 공세적인 과거청산투쟁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택시사업자 수납거부, 정부 방관 민주택시연맹, 20일 총력 투쟁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민주택시연맹)은 2일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택시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가 사업자의 수납거부와 건설교통부의 방관으로 인해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비난성명을 발표했다. 첫날 민주택시연맹 산하 7개 지역본부와 5개 지역추진위 4만 여명의 조합원 중 90% 이상이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박복규) 등 사업자들이 수납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택시연맹은 "정부가 20일까지 법시행을 포기한 채 사태를 방치할 경우 총력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대선 때까지 사면 문제 거론 그러나 국민승리21측은 "대통령선거 때까지 전·노 씨의 사면문제를 풀고 갈 것"이라는 입장인바, 대선 기간 동안 전·노 사면문제를 통해 권영길 후보와 보수정당 후보들 간의 차별화를 시도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김 대통령의 입장 표명으로 정치권 내에서 전·노 사면론은 일단 수면 아래로 내려갈 전망이지만, 민주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한 진보진영에게는 전·노 사면론이 과거청산의 과제를 세삼 강조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국민의 기본권 신장 기여도 평가 참여연대, 대법관 후보자 평가서 제출

0오는 11일 박만호 대법관의 임기 만료로 인해 1인의 대법관 선출을 앞둔 시점에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박은정 교수, 참여연대)는 2일 대법관 후보자 9명에 대한 평가 의견서를 대법원장 앞으로 우편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는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한 바'를 우선적인 판단기준으로 삼았으며, '사법의 독립'과 '법률가로서 양심에 부합하였는가' 등을 고려해 작성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인준청문회제도 등을 도입하여 국민들에 의해 평가·검증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대법관 후보자는 가재환, 이철환, 정지형, 서성, 안문태, 양인평, 강철구, 이동락, 안석태 부장판사이다.

부천시 성고문 사건, 김근태 고문 은폐 사건

가재환 사법연수원장에 대해 참여연대는 "5공 시절 갑박적인 통치에 사법부가 예측되는 역사의 현장에서 변혁의 사퇴권고를 받기까지 한 유대홍 대법원장의 비서실장 재직 당시의 사법부 독립을 저해하는 여러 행적에 비추어 볼 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최고 법원의 구성원으로서 자격을 갖추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평했다.

이철환 광주 고등법원장은 86년 부천시 성고문사건 재정신청 기각 결정, 김근태 고문사건에서의 재정신청 결정을 회피한 반면, 91년 수서비리사건에서 정태수 씨를 비롯한 피고인들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96, 97년 한총련 사건

정지형 서울 지방법원장에 대해 참여연대는 "96년 한총련 연쇄대 사태 피고인 전원을 합의부에 배당한 결정이나, 97년 한총련 사건 재판에 앞서 신건수 서울지검 공안2부장을 불러들여 '한총련의 실체와 최근 학생운동의 성격'이라는 공안감좌를 듣게 한 점 등 법관으로서의 균형감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평가했다.

서성 법원행정처 차장은 85년 김근태 씨 고문은폐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접견금지 신청을 받아들였는데, 이는 "형사 사법절차의 이념을 완전히 무시한 전근대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안문태 가정법원장은 85년 민주화운동청년연합 김병곤 씨 사건, 89년 문정현 신부 출국금지 사건 등으로, "국가권력의 입장에서 국민기본권을 제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문옥 전 감사관 복직판결

강철구 전주지방법원장이 내린 판결 가운데 노동사건으로 사망원인을 알 수 없는 돌연사도 평소의 과로와 인과관계가 있다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판결이 눈에 띈다. (1994. 10. 5) 또 양인평 춘천지방법원장은 공무원의 직무상 양심을 존중한 획기적인 판결인 이문옥 전 감사관 복직판결을 내린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 (서울고법 특별5부 1994. 4. 27)

제2회 인권영화제 '환경' 영화 2편

<미나마타>

<미나마타>는 집요하게 '미나마타'병을 고발하는 미나마타 시리즈 최초의 작품이자 최고의 명작으로 꼽힌다. 1950년대 미나마타병은 전염병인지 중독인지도 알 수 없는 '기병'으로 인식되고 있었는데, 이 '기병'의 원인이 공식 발표된 것은 1969년이였다.

<미나마타>는 1969년 일본 최대의 화학공장 '짓소'(질소)를 상대로 소송을 시작한 29세대를 중심으로 잠재환자 발굴과정을 그린 영화이다. 영화는 재판을 계기로 한 고발운동의 조직과 지원세력의 확대, 재판 투쟁과 모금운동, '짓소' 주주총회에서의 숨막히는 대결을 감동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특히 카메라는 태아성 환자를 주목한다. 그 속에는 병원이 포기한 미나마타병 환자를 지켜보는 가족들의 모습과 빛나는 '인간'의 삶이 형상화되었다.

-일본·1971년·쵸찌모토 노리아키 감독·120분·흑백·다규-

<델타포스 Delta Force>

<델타포스>는 나이지리아의 환경과제를 충격적으로 고발한 'Drilling Field'의 완결편으로 제작된 것이다. 영화는 기름진 땅과 풍부한 자원을 갖고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던 나이지리아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델타포스>는 전편에서 활약한 환경운동가 켄 사로 위외의 체포로부터 시작된다. 위외는 나이지리아 소수민족인 오고니족의 작가이자 인권운동가이다. 영화는 지난 35년 동안 그 어느 곳보다도 풍요롭고 평온하던 이 지역이 세상에서 가장 저주받은 땅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제앙의 동기가 된 것은 바로 그 곳에 풍부하게 묻혀 있던 석유였다. 영국의 다국적 기업 쉘은 나이지리아 군사정권과 결탁해서 수십년 동안 이 지역의 석유를 캐내고 있었다. 그들이 석유판매 수익으로 3백50억 달러를 거두어갈 동안 이들의 땅은 극심한 환경과피로 인해 농사를 지을 수도 없게 되었고, 생명을 위협하는 폭발물들이 난무하는 땅으로 변해 갔다.

비폭력운동으로 나이지리아 군사정권과 다국적기업 쉘에 저항하던 켄 사로 위외는 전세계적의 지지를 얻었으며, 나이지리아 정권에 의해 95년 사형당했다.

-영국·1995년·글렌 엘스 감독·52분·컬러·다규-

인권하루소식 일본8호 출간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97년 상반기(1-6월) <인권하루소식>이 한권의 책으로 묶여 나왔습니다. 이번 합본 8호에는 상반기 인권 상황에 대한 정리글이 실렸습니다. 지금 신청하십시오. 가격 1만원(우송료 별도) 구독신청 741-5363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interpia.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7년 9월 4 일(목)

제 960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김 대통령 임기내 사면도 안돼

사회단체, 신한국당·국민회의 항의 방문

김영삼 대통령이 '추석전 사면'을 유보하면서도 "임기내 사면"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각계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3일 [국민승리21(가칭)](대표 권영길, 이창복)은 논평을 통해 "김 대통령의 '임기내 사면' 발언으로 전·노 사면문제는 여전히 엄청난 불씨를 안고 있다"며 "전·노 사면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과 힘을 합쳐 국민의 편에서 끝까지 싸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국민승리21은 "이회창, 김대중, 조순 씨 등 각 당 대선주자들은 국민의 의사에 따라 정략적 전·노 사면론을 취소하고, 국민들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전국연합)도 "추석전 사면불가 방침은 환영하지만, 몇 개월 남지 않은 대통령 임기내에 사면을 추진하는 것은 이 문제의 역사적 중대성에 비해 그 근거가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다. 전국연합은 "전·노 씨에 대한 사면은 이들에 의해 피해를 받은 피해자들과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대

의 명분이 있을 때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김동완) 역시 "정치권의 사면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5·6공 시절의 수많은 인권유린의 실상을 밝히는 실질적인 과거청산 작업에 매진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민주노총과 과거청산국민위원회 등 10여 개 사회단체 회원 40여 명은 3일 오후 2시 여의도 신한국당사 국민회의 당사 앞에서 각각 집회를 열고 양당의 사면주장을 규탄했다.

이들은 집회에 이어 신한국당에 항의 서한을 보내 "김 대통령의 임기내 사면 입장은 또 하나의 역사적 과오를 저지르는 것으로,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새정치국민회의에 대해서도 "김 총재의 '조건없는 사면' 주장은 보수층의 지지를 얻두에 둔 정략적 발상"이라고 비판하며, "충분한 역사적 전제가 마련되었을 때 사면문제가 논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전·노 사면반대에 한 뜻을 모으고 있는 학계·법조계·시민사회운동계 등 각계 인사들은 5일 오전 8시 참여연대 회의실에서 '전·노 사면 문제의 바람직한 처리 방향'이라는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갖고 향후 사면반대 운동의 진로를 모색하게 된다.

인권하루소식 일본8호 출간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97년 상반기(1-6월) <인권하루소식>이 한권의 책으로 묶여 나왔습니다. 이번 합본 8호에는 상반기 인권 상황에 대한 정리글이 실렸습니다. 지금 신청하십시오. 가격 1만원(우송료 별도) 구독신청 741-5363

지역연맹은 1일 정동근(한국기독교노동자총연맹) 의장의 구속에 대해 항의성명을 발표했다.

한국기독교노동자총연맹은 "지난 8월 21일 정동근 의장의 연행 당시, 구속영장과 신문을 밝힐 것을 요구하였으나 인천 안기부라고 적힌 쪽지만 보여 주며 위압적 분위기에서 폭력연행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모든 양심수 석방과 수배자 해제 및 국가보안법 철폐, 안기부 해제 등을 주장했다.

행사와 동정

□ 노동자투쟁 10주년 기념사업 자문위원들과의 만남의 밤

- 때: 4일(목) 오후 6시30분-9시
- 곳: 프레스센터 9층 카페테리아
- 주최: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 (765-2010)

□ 한총련과 학생운동의 과제 토론회

- 때: 5일(금) 오후 2시-5시
- 곳: 종로성당 3층 강당
- 발표: 김영규(민교협/인하대 행정학과) 박수근 변호사(민변)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522-7284)/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888-3683)

□ 97 대통령선거에 즈음한 민주인사 간담회

- 때: 12일(금) 오후 2시-4시30분
- 곳: 종로성당 3층 회의실
- 초청인: 김관석·박순경·박영숙·변형윤·이돈명(☎362-6086~8)

■ 김정희·조영국 씨의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인권운동사랑방 총무를 지낸 김정희 씨가 드디어 새 동지를 틉니다. 6일(토) 오후 3시 어린이회관 문화관입니다. (지하철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 하차 2번 출구)

정동근 의장 불법 연행 항의

한국기독교노동자총연맹 등

한국기독교노동자총연맹·한국기독교노동자서울지역연맹·한국기독교노동자인천

헌법소원 현재 결정(오지) 상 제한 합헌 결정

지난 8월 27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영모 재판관)는 삼청피해자동지회 대표 이택승 씨가 낸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입법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삼청교육대 문제의 법적인 구제수단을 봉쇄했다는 의미에서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이다. 그 결정 요지를 싣는다. <편집자주>

사건 94헌바2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소원 청구인 이택승 당해사건 대법원 93모45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주문>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1973. 1. 25. 법률 제2450호로 개정된 것) 중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죄에 대하여"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삼청피해자동지회 대표로서 1980. 8.경부터 1981. 1. 25.경까지 집행된 삼청계획과 관련하여 청구의 최규하·전두환·이회성·김만기를 직권남용, 불법체포, 감금, 폭행 및 가혹행위, 살인 및 살인교사죄로 1989. 12. 27. 서울지방법검찰청에 고소하였으나 서울지방법검찰청 검사는 1992. 12. 26.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93초12 재정신청) 등 법원은 이 사건 피의사실 중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와 제124조의 불법체포·감금죄, 제125조의 폭행·가혹행위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만료되었으며 살인 및 살인교사죄는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에 규정된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범죄가 아니라는 이유로 1993. 4. 28. 등 재정신청을 기각하였다. 청구인은 이 결정에 대하여 대법원에 재항고를 하면서(대법원 93모45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이 재정신청대상을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에 한정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93초129 위헌제청신청), 대법원이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은 헌법위반의 법률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견해라는 이유로 1993. 12. 27. 동 신청을 기각하자 1994. 1. 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1973. 1. 25. 법률 제2450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법률조항'이라 한다) 중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죄에 대하여" 부분의 위헌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60조(재정신청) ①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죄에 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을 한 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청구인의 주장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쟁타)
3. 판단

나. 본안에 대한 판단

(2) 이 법률조항은 재정신청의 대상범위를 일정 범위로 한정함으로써 그 범죄 이외의 범죄에 대한 고소·고발인의 재판청구권과 특히 고소인인 경우 범죄의 피해자로서 재판절차진술권 등에서 차별대우를 받는 것이 되므로 이것이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등의 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고 따라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차별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중략)

이 법률조항은 형사소송법상의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그 남용을 억제함과 아울러 고소·고발인의 이익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입법자가 예외를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이 법률조항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중에서 주로 수사기관 등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인권침해 유형의 범죄에 속하는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 제125조(폭행, 가혹행위)의 죄의 경우에는 기소편의주의가 남용될 소지가 많고 검찰자체의 시정제도에 의하여서는 부당한 불기소처분에 대한 구제를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 또한 없지 아니하므로 그 통제의 객관적인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히 이들 범죄를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사법부인 법원에 의한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3) 따라서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법률조항이 재정신청의 대상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중에서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인권침해 유형의 범죄에 한정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이라 할 것이므로 비록 형사소송법이 재정신청의 대상범위를 제한하여 재정신청의 대상이 아닌 범죄에 대한 고소·고발인이 검사의 기소편의주의의 남용에 따른 사법적 통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막혀있다 하더라도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재판청구권에 대한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중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이영모를 제외한 나머지 재판관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8. 21.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황도연 이재화 조승형 정경식 고중석 신청인 이영모(주심)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interpia.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7년 9월 5일 (금)

제 961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눈과 귀 차단당한 장애인 참정권

수화자막 방송, 1층 투표소 마련해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치열한 정치권의 움직임에 반해 철저히 소외당하는 사람들이 있다. 정치참여의 유일한 수단이라 할 수 있는 참정권 행사에 있어 외면당해 오던 장애인들에게 올해도 상황은 별반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소장 김정열, 연구소)는 4일 각 방송사에 수화자막 방송을 요청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장애인 선거 참여 방안과 관련한 공문을 보냈다. 앞서 8월 21일에는 장애인 관련 대선정책자료집을 각 정당 정책실에 발송했다.

선관위 대안마련 '시큰둥'

이미 지난 8월 중순 연구소는 선관위 측에 ▲전국 투표소 현황과 투표소의 편의시설에 관한 대책 ▲시각장애인용 점자투표용지 활용 방법 및 홍보 ▲TV 토론회 및 합동·개인 유세시 수화통역사 배치 ▲거동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위해 부제자 투표에 대한 결정 여부와 홍보 활동 등에 대한 질의서를 보낸 바 있다.

이에 선관위는 8월 19일 보낸 답변서에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투표 편의를 위해 가능한 투표소를 1층에 설치하되, 부득이 1층이 아닌 곳에 설치할 경우 안내 요원을 배치하도록 하겠다고 ▲시각장애인의 투표 편의를 위해 선거 때마다 시각장애인용 점자 투표절차안내문을 제작 및 각종 매체를 통해 홍보활동을 벌여왔다고 말했다. 또 방송사 및 정당 등에 TV 토론회나 정당 후보자 연설회 개최시 수화통역이나 지막방송을 실시할 것을 요청하겠다고 답변했다.

사랑방만평

이동수



거 경선 후보자들의 정책 토론 때 단 한번이라도 수화통역이나 자막으로 방송된 적은 없다"고 지적했다.

정책 마련에 앞서 참정권 보장해야 또한 연구소측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 총선에서 투표소가 2층에 있거나 지하에 자리한 경우가 28.1%로 휠체어 장애인들은 투표참여에 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열 소장은 "후보들에 대한 정보가 차단되어 있고, 물리적 환경으로 인해 투표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장애인들의 정치 참여는 저조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즉 스스로에 의한 선택이 아닌 주위 환경에 의해 참정권의 박탈을 감당하는 셈이다. 대선주자 및 각 정당은 장애인 분야를 비롯한 사회복지분야의 선거공약을 마련하기에 앞서 선행 조건으로 장애인들이 선거 참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터뷰> 5·18 계엄법 위반죄 무죄 선고받은 신종권 교사 “아이들에게 사회 정의를 보여주고 싶었다”

5·18 당시 계엄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다가 지난 3일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신종권(44·부산 내성중 교사) 씨는 “오랜 짐을 벗은 것 같아 기쁘다”는 말로 인터뷰를 시작했다. 신 교사는 영남상업고등학교에 재직 중이던 80년 5월 17일, 전국에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민주인사들이 구속되기 시작하자, 5월 21일 대학 시절의 동료들과 ‘정치 일정 단축과 계엄령 해제’를 위한 유인물 작성·배포를 논의했다가 발각돼 계엄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심을 청구하게 된 까닭은
당하는 사람은 계속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살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싶었다. 또 광주항쟁을 광주만의 문제로 바라보는 시각을 깨고 싶었다. 학교 선생으로서 아이들에게 사회의식과 정의감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재심 청구에 어려움은 없었나
작년 1월 초 서울고등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려 갔지만 소관이 아니라며 접수를 거부했고, 부산으로 내려가니 또 서로 소관을 미뤘다. 이렇게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쉽게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는 절차가 마련되었으면 한다.

-구속된 뒤 겪은 피해라면
보안대 지하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동안 학교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학교 측은 아내를 통해 사직서를 강제로 제출받았다. 이후 취업이 잘 안돼 술장사, 시험지 장사 등을 해보다가 학원 강사 생활로 생계를 유지하게 되었다. 민주화 운동 관련 북역자들이 그러하듯 일상 생활에서도 지장을 받았다.

-어떻게 복직하게 되었나
93년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 대한 복지 조치가 내려지게 되면서, 복직을 결심하게 되었다. 하지만 학교측에서 “스스로 사직서를 내지 않았냐”며 거부해서 1년이 넘게 힘든 노력을 기울였다. 청와대를 비롯해 교육부, 정당 등을 찾아다녔고, “민주화운동 관련자라

는 확인을 받아오라”는 교육청의 요구 때문에 광주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확인’을 받아오기도 했지만, 당국은 또 전교조 활동을 시비 걸고 나섰다. 10여 년간의 호봉을 인정하지 않는 특별 채용이라는 형식의 굴욕적인 조건이었지만, 주변의 권유로 일단 복직부터 하게 되었다.

-5·18 또는 5·6공 인권피해자들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는가
남아공의 진실화해위원회 같은 국민 위원회를 설치해서 과거의 죄를 모두 드러내고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구속되지 않았던 하더라도 연행·수사 과정에서

고문 등에 의해 고통받은 사람들이 많은데, 이들에 대한 구제 조치는 없다.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많은 비용이 들겠지만,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우고 ‘내 나라가 좋은 나라다’는 생각을 갖도록 할 수 있다면, 그 비용은 결코 아까운 것이 아니다. 피해자 스스로도 권리를 찾기 위해 싸워야 한다.

-직접적인 피해자로서 정치권의 전·노 사면 논의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가
과거의 일을 그렇게 쉽게 잊을 수가 있는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도 안된 상황에서 가해자를 용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상황에서 전·노 씨가 사면된다면 법이나 사회정의·양심은 다 소용없는 것이다.

신 교사는 “아직도 읍지에서 열심히 운동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늘 마음의 빛을 지고 있는 기분”이라며 인터뷰를 마쳤다.

제2회 인권영화제 상영작 소개

‘학살’ - 그 책임자는 누구인가

< 퓨마의 딸 Daughter of Puma >

· 과테말라 · 1994 · 감독 울프 헬트버그 · 85분 · 컬러 · 극영화

멕시코 남쪽 국경에 위치하고 있는 과테말라는 30년 동안 내전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으며 특히 폭압적인 과테말라의 군사정권으로 인해 수많은 마야 부족들이 대량학살·실종되고 있다. 울프 헬트버그 감독의 이 작품은 무려 2백53개에 달하는 마야 마을이 소각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1982년 대학살을 배경으로 삼고 있다. 이 작품은 1992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리고벌터 멘추 여사의 투쟁을 극화한 것이기도 하다.

주인공인 마야 소녀 에슬롭은 학살이 있던 그날 오후 마테오를 현장에서 실종당하고 마을에서 쫓겨나 멕시코 피난민촌으로 이주한다. 그녀는 이웃마을의 무참한 학살 현장을 목격한 유일한 목격자이기도 했다. 마야의 신앙에 따르면 그녀의 정령은 퓨마이며 마테오의 정령은 퓨마의 인도자인 부엉이. 그녀는 오후가 죽지 않았다는 신념과 정령신앙의 용기를 받아 마테오의 아들이 태어나던 날 마테오를 찾으러 길을 떠난다.

< 르완다 대학살 Chronicle of a Genocide Foretold >

· 캐나다 · 1996 · 감독 다니엘 라코셰/이반 패트리 · 164분 · 컬러 · 다큐멘터리

94년 봄 무려 50만명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의 무고한 사람들이 짐승처럼 죽어간 르완다 학살에 대한 시리즈이다.

르완다 학살은 투치족과 후투족 간의 내전으로 알려져 있다. 대부분의 투치족은 후투족에게 무자비하게 몰살되었다. 그러나 이 무시무시한 학살을 예고해 온 연대기에 대해 전세계는 의외로 무지하다. 이 영화는 학살의 배경을 차근차근 되짚어가는 방법으로 르완다 학살을 분석하고 있으며 동시에 끔찍한 살인극에 대해 무관심한 서방의 무책임함을 질타하고 있다.

치열한 살육전에서 살아남은 자들의 증언과 유엔 평화유지군, 인권운동가의 인터뷰를 통해 내전의 참상과 발생의 배경을 이야기한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interpia.net · http://www.interpia.net/~rights

1997년 9월 6일 (토)

제 962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학생운동 희생할 수 있다”

민변·민교협, ‘한총련’ 토론회

공안당국의 탄압, 국민들의 외면, 학생대중의 무관심 속에 위기를 맞고 있는 한총련. 이러한 학생운동의 위기를 극복하고 그 앞길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5일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공동대표 유초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은 각 사회단체 활동가들과 함께 종로성당 3층에서 ‘한총련과 학생운동의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 참석단체는 전국연합, 참여연대, 경실련, 민운탄원대위, 인권운동사랑방, 그리고 한총련내 비주류로 분류되는 서울대총학생회와 전국학생운동추진본부 준비위원회 등이다. 그러나 한총련 주류의 경우, 지도부 전원이 수배 중인 상황으로 인해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했다.

학생운동의 위기진단

현 학생운동의 위기를 진단하는 토론자들의 시각은 대체로 “학생대중으로

부터 유리된 지도부 및 한총련 지도부의 주관적 정세 인식에 그 원인이 있다”는 것이었다. 김선웅 서울대 부총학생회장은 “한총련이 상층부 중심의 통일운동을 벌여온 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며, 강현욱(국민대) 전학추본 임시대표와 박수근 변호사 등은 “한총련이 주관적 정세 인식 하에 전민항쟁 노선을 채택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국민과 학생대중 속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지적이었다.

대중 속으로

한총련 탄압의 대표적 구실이었던 ‘이적성과 폭력성’ 여부에 대해선 미묘한 시각차가 비치기도 했다.

박수근 변호사는 “정권의 원인 제공과 과장·왜곡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폭력성이 국민대중으로부터 이해받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고 진단한 반면, 김영규(인하대) 교수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억압받고 있는 현실에서 운동의 대의와 대중공간을 지켜내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학생폭력을 폭력일반의 문제로 비화시켜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주종세력이라는 비난과 관련해, 이태호 참여연대 기획부장, 강현욱 대표 등은 “한총련이 북한정권에 대한 비판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최규업 전국연합 정책위원장은 “북한에 대한 시각은 사상의 자유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적·폭력성 여부, 미묘한 이견

한총련 주류의 비참성으로 인해 원론적인 토론에 그치는 한계를 나타내면서도, 한총련의 개혁과 학생운동의 회복에 대한 예정어린 주문은 계속됐다.

민운탄원대위의 전용석(노동정치연대의장) 씨는 “노동자와 민중들의 생생한 목소리에 적극적으로 결합하는 것”을 강조했다. 이태호 기획실장은 “사회운동과의 구체적인 연대 속에서 학생운동 출신이 사회운동의 일꾼으로 이어지는 운동”을 제안했다. 또한 박대균 인권운동사랑방 사무국장은 “학생들 스스로 기본적인 인권의식을 회복하는 운동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으며, 박수근 변호사는 “한총련에 대한 민주진영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호소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안탄압분쇄대책위의 구성과 관련해 간단한 논쟁이 있었다.

최규업 위원장과 김영규 교수는 한총련 외해 기도와 함께 진행되고 있는 공안탄압과 관련해 공안탄압분쇄대책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지만, 박대균 사무국장은 “현 시기에 대책위를 구성해 보았자 끝까지 책임지지 못하는 유령단체로 귀결되고 말 것”이라며 “차라리 불심검문 거부운동 등 대다수 시민과 대학생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운동을 펼치는 것이 더 현실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권하루소식 일본으로 옮긴

지금 신청하십시오.
97년 상반기(1-6월) <인권하루소식>이 **한권의 책으로 묶여 나왔습니다.** 이번 **합본 8호**에는 **상반기 인권상황에 대한 정리글이 실렸습니다.**

*합본 3, 5~7호도 판매합니다

△ 가격 1만원(우송료 별도)

△ 구독신청 741-5363

제8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제

때: 9월 6일(토) 오후 2시 곳: 서대문 독립공원

주관: 전국추모단체연대회의·전국유가협

자동차연맹 위원장 단식 6일째 정리해고·인수합병등 특별법 제정 반대

전국자동차산업노동조합연맹(자동차연맹) 조준호 위원장의 단식이 5일 현재 6일째 계속되고 있다. 이번 단식은 △기아정상화를 통한 자동차산업의 정상화 및 경제안정화 조치를 즉각 수행할 것 △정리해고·인수합병·근로자파견법 등 특별법 제정 및 퇴직금 우선변제 계약 기도를 중단할 것 등을 정부에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당초 2일 열린 8차중앙위원회 결의에 따라 5일 경기 지부를 시작으로 3일씩 전국 8개 지부 동조단식을 벌이기로 했던 계획은, 5일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의 결과에 따라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영문으로 만나는 국내진보단체 소식” 한국국제문제연구회, <KPNews> 창간

한국국제문제연구회(대표 이창수)는 진보적 국제 문제 전문정보지 <아침세계소식>을 발간한 데 이어 인터넷을 통해 국내 진보진영의 활동 소식을 해외단체등에 알리는 영문소식지 <KPNews>(Korea Progress News)를 발행했다. 이창수 발행인은 “한국의 진보진영 소식을 해외의 단체 및 독자들에게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 진보운동에 있어서 국제연대의 초석을 다지고자 한다”고 밝혔다. 단체 활동 소식을 알리고 싶은 단체는 이에 대한 자료나 보도자료 등을 한국국제문제연구회로 보내면 된다. 웹사이트 주소 <http://www.ipeck.cpnnet.or.kr/> 문의: 986-0025 전송: 986-0065 전자우편: LIBERTAD(하이텔) IPECK(천리안, 나우누리, 유니텔) tsipeck(참세상)

북한어린이에게 의약품을 700-8275(빨리치료)

로 전화하시면 2000원이 성금으로 적립됩니다. (ARS서비스, 한국통신후원) 지금 여러분이 보내 주시는 모든 관심과 도움은 미래에 있을 민족의 불행 예방하는 소중한 의약품으로 쓰입니다. 여러분, 북한의 어린이들을 회복할 수 없는 후유증으로부터 구해냅니다. 참여방법: 1) 아래 계좌로 성금을 보내 주십시오 국민은행 079-01-0381-545(예금주: 북한어린이) 2) ARS전화를 걸어주시면 2천원이 성금으로 적립됩니다. 전화번호(국번없이) 700-8275 3) 천리안 go save 북한어린이살리기 의/약/품/지/원/본/부(523-9756)

☞... 새책소개

80년대 의문사 자료집

『누가 이들을 죽게 했는가』

“우리 가족들이 모두 한결같이 늙고 병들어 언제 어디서 세상을 뜰지 모른다는 조급한 마음 때문에 이 책의 출판을 얼마나 마음을 조이며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세월이 흘러갔다고 하나 혹시 공권력의 개입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조바심마저 들었습니다. ‘타살이 확실하다고 생각하면 죽인 사람을 잡아 와보라’고 하면서 옥박지르던 사람들이 아직도 수사기관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허영춘(고 허원근 씨 부친) 유가족 의문사지회장의 말이다.

10여 년에 걸친 유가족 의문사지회의 모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어려운 사건이 한 권의 책으로 엮여졌다.

이 책자는 우리 사회의 의문사에 대한 실태보고서다. 수사 기록, 유족과 주변 인물들의 증언, 사건 당시에 만든 자료집 등을 바탕으로 작성된 이 보고서는 객관적 사실을 일차적 목표로 삼고 있다.

이 책의 대표 집필을 맡은 이상수(민주주의법학연구원 연구위원, 한남대 법과대학) 교수는 “관련자료는 소실되고 없어져 가는 상황에서 유족들의 기억 속에 있는 것이라도 기록으로 남기지 않으면 안된다는 절박함이 이 작업을 서두르게 하는 중요한 동기 중의 하나였다”고 밝혔다.

이 책에는 의문의 죽음을 당한 24명의 사건이 실렸다. 검문당한 후 1주일만에 바로 그 현장에서 끔찍한 시체로 발견된 이철규, 학생운동 활동 중 철로변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문승필 등 7명의 학생의문사. 갈자국에도 불구하고 음독자살판정을 받은 박상구, 군 부재자투표에서 야당에 투표한 후 사망한 정연관 씨 등 10명의 군대내 의문사.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으로 병원에서 추락사한 박창수, 포워딩 농성장을 탈출하려다 변사체로 발견된 이덕인 씨 등 3명의 노동·빈민운동 부분 의문사. 그리고 해결된 의문사 김상원 사건 4명의 일반인 의문사.

이 교수는 “우리 사회의 의문사의 특징은 80% 이상이 반정부적 성향을 지녔거나 그러한 성향을 지닌 사람으로 국가권력에 알려진 사람의 죽음이면서 그 죽음을 둘러싼 정황을 고려할 때 국가권력의 직접적 살해 또는 은폐의 의혹이 짙다”고 결론지었다. 나아가 의문사문제해결을 위해 ①의문사에 대한 제조사 진행 ②조사주체 재설정(적어도 국가권력으로부터 다소 자유로운 조사기관에 의해 진행되어야 한다). ③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 ④명예회복 ⑤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위임/진원 펴냄/6천원-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interpia.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7년 9월 9일(화)

제 963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우토로 재일동포를 돕읍시다

국내 후원회 결성...정부에 지원요청

우토로 재일동포들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 우토로지역 동포 후원회’(공동대표 김승훈 신부, 이정일 목사)가 8일 오후 2시 기독교회관 강당에서 결성식을 갖고 활동에 들어갔다.

우토로 문제는 단순한 토지소유권 문제를 넘어 전후보상문제이자, 정주 외국인의 기본적인 거주권 문제로 새롭게 인식되고 있다. 박형규(후원회 고문) 목사는 “이 문제는 단순히 재일동포만의 문제가 아니라 양국의 문제가 아닌 세계 평화적 문제로 유엔의 협력 아래 해결해야 한다. 또 우토로 문제의 해결을 통해 일본인들은 과거사에 대해 참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연철 변호사는 “우토로 주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 중이며, 오는 20-25일경 우토로 주민을 초청해 국회 및 외무부를 방문해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로마 카톨릭, 세계교회협의회 등에 청원할 예정이며, 유엔 인권위원회 및 세계주거권회의에 의제 상정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후원회원으로서는 이돈명 변호사, 김찬국 상지대 총장, 윤공희 대주교 등 변호사·학계·종교계·사회단체 인사 2백53명과, 정치계에서 이미경·장영달·천정배·조상훈(서울시) 의원 등 8명을 포함해 2백61명이 참가했다.

8년간의 토지명도 소송 80세대 3백80여 명의 재일동포 우토로 주민들은 40년경 교토도로 비행장 건설공사를 위해 반강제적으로 동원되어 이곳으로 이주해 왔다. 일본 패전 이후 여러 사정으로 본국으로 귀환했는데, 패전 후 이곳 비행장 건설 지역

을 점령한 미국측의 철수 요구에 맞서 총상을 입으면서까지 어렵게 정착하게 되었다. 그간 이들이 겪은 박해와 애환은 많은데, 단적인 예로 87년에서야 수도물이 일부 공급되었고, 지금도 공동화장실에 주민의 절반 정도는 수도물조차 들어오지 않는 함바집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

87년 8월 부동산회사인(유)서일본식산이 토지를 매각하면서 시작된 주거권 싸움은, 89년 교토도지방법원에 토지명도소송을 제기해 8년째 진행중이다. 95년 재판부는 화해안으로 주민들이 14억엔으로 일괄매수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주민들은 7억엔을 주장하고 있다. 재판은 9월초 결심을 거쳐, 10월초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한편 89년부터 일본인 중 교직원, 주

부, 공무원들이 ‘우토로를 사수하는 모임’을 결성해 지원을 벌이고 있다.

완전월급제 실시 촉구

택시연맹, 20일 총력투쟁

전국민택시노동조합연맹(민택시연맹)은 9일 성명을 통해 “정부는 20일까지 택시문제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또 택시문제에 대한 정부의 종합대책이 수립되지 않거나 사업주가 불성실한 태도를 보일 경우, 19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투쟁방향을 확정하고 20일 택시노총등 제민주세력과 연대해 총력결사투쟁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민택시연맹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실시 이후 1일 운송수입금 납부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그 금액만으로도 완전월급제를 실시할 재원이 마련된다”며 사업주와 정부가 완전월급제 실시하지 못하거나 미룰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 주요 공판 안내

- ▶ 9일(화)
 - 김태윤(국보법 자진지원·금품수수 등), 박관조(한총련, 국보법 찬양·교무 등), 이선정·김량남·정영훈(국보법 찬양·교무 등) 오후2시, 311호, 합의21부, 속행
 - 장민호(한총련, 건조물침입 등), 유석상(청년사건, 국보법 찬양·교무 등) 오전10시, 319호, 합의23부, 속행
 - 김신우(한총련,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오후2시, 319호, 합의23부, 신건 최예경·홍석범(국보법 찬양·교무 등) 박유상(한총련, 국보법 찬양·교무 등) 오후3시, 319호, 합의23부, 속행
 - 김진성(국보법) 오후2시, 523호, 7단독, 속행
- ▶ 11일(목)
 - 진관스님(국보법 간첩 등) 오전10시, 303호, 3부, 선고
 - 최인기(국보법 찬양·교무 등) 오전10시, 311호, 합의21부, 선고
 - 한재현(한총련, 국보법 찬양·교무 등) 오전10시, 319호, 합의23부, 선고
- ▶ 12일(금)
 - 이승구(국보법) 오전10시, 319호, 합의22부, 선고
 - 신승우(국보법 찬양·교무 등) 오전10시, 418호, 1부, 변론재개
 - 장정일(소설가, 음란문서제조 등) 오후4시, 418호, 1부, 속행
 - 강영식(국보법) 오전10시, 522호, 3단독, 선고

결실없는 가을, 쉼령한 추석...

한국후꼬꾸, 3차 단식 돌입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가 따로 없다. 한국후꼬꾸 노동자들의 목숨을 건 단식투쟁과 명동성당 농성이 50여 일째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회사측은 지난 달 20일 한 차례 교섭에 응했을 뿐, 현재까지 일절 교섭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측에서는 이미 윤동만 노조위원장과 이승환 편집부장이 30여 일, 이승진 문화부장이 2차로 20여 일간 단식투쟁을 벌인 데 이어, 지난 6일부터는 한광수 사무장이 3일째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측의 태도는 요지부동이며, 노동자들과의 협상보다는 오히려 다가올 정기국회 국정감사와 상임위원회 대책 마련에 분주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회사측의 무반응과 함께 농성이 장기화되면서 후꼬꾸 노동자들의 심신은 많이 지친 상태다. 일각에서는 "이 따위 회사라면 차라리 망해 버리는 게 낫다"는 푸념마저 나오는 지경이며, 한광수 사무장도 "누가 하나 죽어야 되는 게 아니냐"며 힘겨움을 감추지 않았다. 하지만, 회사내 용역장패가 사라지고 부당노동행위가 시정될 때까지 농성을 중단할 수 없다는 것이 농성자들의 확고한 신념이다. 그리고 다가올 정기국회에서 한국후꼬꾸 문제가 어느 정도 다뤄질지 일단 지켜보겠다는 것 또한 농성자들의 계획이다. 일주일 뒤면 민족의 명절인 추석이다. 이 기간 동안에도 후꼬꾸 노동자들은 추석을 반납한 채 명동의 농성장을 지키기로 했다. 하지만 이 가을의 결실이 후꼬꾸 노동자들에게도 돌아갈 수 있을지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철거민 농성도 한달째

후꼬꾸 노동자들의 농성장 아래로는 전국철거민연합 회원들이 한달째 농성장을 차리고 있다. 7월 전농동 박순덕 씨의 사망을 계기로 농성을 시작한 철거민들은 연일 동대문구청, 청량리경찰서 등 관할 관청과, 전농동 철거담압채웠던 선경건설 본사를 찾아가 항의시위와 선전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곳 농성단의 요구사항은 네 가지로, △박순덕 씨 사망 사건의 방화책임자 처벌 △철거용역장패 소탕 △강제철거 절대금지법 제정 △민중주거권 쟁취 등이다. 농성 관계자는 "계속되는 시위에 의해 동대문구청 등에서 상당한 압력을 느끼는 것 같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관계자의 말과 달리 상황은 별로 낙관적이지 않아 보인다. 이미 김·경은 전농동 화재사건을 철거민들의 방화로 결론지었으며, 이에 따라 구속된 전농동 주민 가운데 12명에게 '방화치상·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거민들은 추석 연휴 동안 귀성 인파가 물리는 역 주변 등에서 선전활동을 계속할 방침이다.

주간/인권/흐름

(97년 9월 1일부터 7일까지)

- ◆ 1일(월) <한겨레> 여론조사팀 조사, 국민 10명중 7명은 전·노 전 대통령의 '조건 없는 사면'에 반대. 또 80.0%는 전·노 씨가 5·18 등에 대한 죄값을 덜 치렀다고 답변/노동부, 노동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월차 휴가에 대해 사용자가 무조건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현행 행정해석을 일단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유가족, 명동성당서 '제1차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 및 기념주간' 선포식 갖고 1주일간 행사에 들어가/대인지리 전면금지조약(오타와 협약)의 연내 조인을 목표로 한 '오슬로 국제회의' 개막첫날인 1일, 한반도를 대인지리 전면금지 지역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한 미국의 수정 제안을 둘러싸고 논란/독일 시사주간 <슈피겔> 보도, 독일 국민 대다수는 실행 신고를 받은 옛 동독 지도자들에 대한 사면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 ◆ 2일(화) 검찰,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돈 880억원을 최근 찾아낸 것으로 밝혀져/전국 35개 은행장 회의에서 '인원과 임금 감축에 관한 노조 동의서의 사전 제출'을 부도유예협약 개정안에 포함시켜 의결한 데 노동계 크게 반발
- ◆ 3일(수) 부산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기중 부장판사) 신종권(45·부산 내성중 교사) 씨와 노재열(41·금속노련 정책2국장) 씨 등 80년 신군부의 내란 과정에서 계엄철폐와 '광주사태' 진상규명 등을 요구하는 유인물을 제작·배포하다 유죄선고 받았던 피해자들에게 무죄 선고/부도유에 이후 5천5백여 명을 감원한 기아그룹이 용역직을 뺀 정규직원 3천여 명에게 퇴직금 지급하지 못해
- ◆ 4일(목) 프레스센터 19층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87년 노동자대투쟁 1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산별노조 체제의 확립은 한국노동운동의 운명을 좌우할 중대한 과제"라는 의견 제기
- ◆ 5일(금) 남편이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라는 이유로 교사임용을 거부당한 차정원(34) 씨 교육당국의 임용거부 처분은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연좌제에 해당한다며 서울고법에 위헌심판 제청 신청/남편을 잃은 현아무개 씨 서울지법에 시어머니 정아무개 씨를 상대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특정인물을 자신의 주위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접근금지가처분신청 국내 처음으로 제기
- ◆ 7일(일) 재경원, 정부 교육투자 재원 마련위해 내년에 1조원 규모의 교육지방 채권을 발행하고, 교육세에 대한 단려세율을 10% 올리기로 결정/국회 환경노동위 한영에 의원과 노동부 발표, 자진신고 납부하기로 돼 있는 장애인고용 부담금을 아예 내지 않거나 줄여낸 21개 업체 적발해 추가징수 조처 내려/교육부 집계, 98학년도 입시에서 전국 38개 대학이 1천5백여명의 장애인을 특별 전형하기로

"살아남을 수 있기를 바란다"

인권 시평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두들 되는 '인권영화제'를 위하여-

앞다투어 '문화의 옹호자'임을 자처하는 지방자치체들이 대규모 문화축제에 저마다 쏟아붓는 열성과 물량이 엄청나다. 이 가을, <한겨레> 문화면은 이렇게 탄성을 질렀다. "문화축제를 즐겨 보세!" 제1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는 어마어마한 관객을 동원했다. 외국에서 초청된 감독들은 한결같이 부천영화제의 성공을 놀라와 했다고 한다. 이제 한달 후로 다가온 부산국제영화제 역시 그 첨단장비를 동원한 화려함으로 작년과 같은 성황을 이룰 것이다.

거대한 두 영화제 '막간'에 다소곳이 자리잡은 제2회 인권영화제, 그러나 막판에 접어드는 그 준비가 몹시 힘들다. 개최 예정지였던 동국대학교측이 제2회 인권영화제를 한달 남겨 놓은 시점에서 장소를 빌려 주지 않기로 최종 결정을 내린 것이다. 당장 새 장소를 구해야 하는 절박함에 허둥대는 과정에서 영화제 준비에 연쇄적으로 차질을 낳아 버렸다. 정신 피곤 차려보니 남은 기한은 20일! 앞으로 밥 먹듯이 밥을 지새우는 일만이 남은 것이다.

내가 아는 한 동국대학교에 대한 행정당국의 직접적인 압력은 없었다. 말하자면 '자주규제'인 셈이다. 그러나 '자주규제'는 진짜 '자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결국 '강제'에서 나온다. 누구나 한결같이 말한다. 인권영화제, 취지도 좋고 작품도 좋다. 그러나 "만에 하나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을 지는가!?" 나는 우리 사회가 소름이 끼치도록 철저히 무서운 사회임을 실감한다. '문화'의 물결이 은누리에 출렁이는 이 가을에 인권교육을 위한 조출한 이 마당은 어디에도 설 자리가 없다.

작년, 제1회 인권영화제 관객들이 써낸 설문지는 우리의 '보물'로 남아 있다. "내년에는 행정당국의 간섭 때

문에 고생하지 않기를..." "내년에는 좀 더 넓은 장소에서..." "내년에도 이런 좋은 영화제를..." "내년에는..." 나는 지금 그 관객들에게 미안하다.

우리 나라 헌법은 검열을 금지하고 있다. 검열이란, '표현행위에 앞서 행정권이 그 내용을 사전에 심사하여 부적당하다고 판단할 때 그 발표를 금지하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지극히 당연하다는 듯이 영상물에 대하여 가해지는 '사전심의'는 누가 어떤 계보를 논해도 헌법에 위배되는 반인권행위임이 명백하다. 인권영화제가 이 사전심의를 거부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단순하다. 그것은 우



리의 영화제가 '인권영화제'이기 때문이다. 즉 사전심의를 제도화하는 이상 인권영화제는 '불법 영화제'로서 존재할 수 밖에 없으며, 이것은 인권영화제의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그러나 헌법에 위배되는 사전심의를 받아들이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인권영화제만의 당위는 아니다. 많은 영화인들, 그리고 'OO영화제'나 'XX영화제'를 개최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불법 영화제'는 두세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밖에 없는 것이다. 번듯한 극장, 선명한 영상, 물결치는 관중을 가지고 열리는 모든 영화제는 사실상 검열제도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이야기다.

어느 때부터인지 영화제들은 묘한 표현을 쓰기 시작했다. 사전심의를 "피했다"... 즉 '정치력을 발휘'하여 서류상으로는 '심의'를 받거나 아니면 출품작 중 일부만 심의 받고 나머지는 일괄 통과시켜 버리는 피가 발달되어

온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강간을 당하면서, 저항하는 척만 할 테니 진짜로 저항한 것으로 쳐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뭐란 말인가? '봐주기'와 '눈가리고 아웅'이 아니고 뭐란 말인가?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서 제기된 문제 중의 하나가 '검열 반대'였다고 한다. 부천영화제에 초청되어 자신의 영화를 검열의 손에 내맡긴 외국 감독들이 부천영화제의 성공을 극구 칭송하는 그 입으로 한국의 검열제도를 비판하는 자가당착은 나의 머리를 마구 어지럽힌다. 그들에게는 자신의 작품이 검열을 받은 데 대한 부끄러움의 흔적은 없었다.

또한 주최측은 심의 받지 않은 영화 <좀비 1>을 돌발 상영 함으로써 그 후 원기관인 문화체육부를 당혹스럽게 만들었으며, 역시 한국의 단편독립영화를 심의없이 상영하는 '반란'을 감행했다. 나는 일단 이 당돌한 반란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천시라는 큰 권력을 등에 업었기에 절대로 처벌 받지 않을) 이런 류의 피는, 올곧은 의지를 가진 까닭에 정치권력에 결코 이롭지 못한 가난한 영화제가 이 땅에서 살아남기 위한 선례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부천영화제의 검열비판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권세자에게 내맡긴 여자가 잘 먹고 잘살면서도 강간을 당하고 있다고 호소하는 경우를 생각나게 한다.

인권영화제는 영화제를 위한 영화제가 아닌, 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인권'을 가르치기 위한 치열한 '운동'이다. 이것이 인권영화제의 기본적인 인식이며, 이 인식 위에 서는 이상 인권영화제는 내일의 영광을 위한 고난의 길을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제1회 인권영화제를 관람한 어느 관객의 설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살아 남기를 바란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interpia.net · http://www.interpia.net/~rights

1997년 9월 10 일(수)

제 964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집회 진압 전경, 임산부 폭행 전국각지 농민 집회 계속

소값 폭락과 농산물 가격하락·부채 증가에 따른 농민들의 집회가 전국적으로 벌어지는 속에, 농민들과 공권력과의 충돌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난 6일 강원도 횡성에서는 임신 8개월인 주부가 전경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하는 사건까지 발생해 농민들의 분노를 가중시키고 있다.

6일 오후 횡성군청 앞에서 '소값 폭락 대책마련을 위한 강원 농민대회'에 참석했던 정분옥(29·횡성군 청일면) 씨는 남편을 연행하는 경찰에 항의하던 중, 전경 7명에게 둘러싸여 집단폭행을 당해 현재 원주 인화병원에 입원치료중이다. 횡성군 농민회측은 "현재까지 정 씨에게 특별한 문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2주 정도 지켜보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원도 농민총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등은 "경찰의 폭력적이고 반인륜적인 행위를 규탄"하는 항의성명을 발표했으며, 횡성군 농민회측은 횡성경찰서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농민회측은 이후 경찰의 처리상황에 따라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도 할 예정이다. 또한 7일 열렸던 정읍농민대회에서도 집회에 트랙터를 동원했다는 이유로 최루탄이 발사되면서 충돌이 발생해 농민회원 장영웅 씨 등이 머리가 찢어지는 부상을 입기도 했다.

소값 폭락, 농가 부채 증가
지난 8월 중순부터 시작된 전국 각지 농민들의 집회는 올해들어 소값이 폭락하고 농산물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농가생계가 불안해진 데 따른 것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이수금, 전농)에 따르면, 95년말 3백20만원선이

던 소값(5백kg 기준)은 최근 2백만원 선까지 폭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적어도 생산비를 보장할 수 있는 3백만원 선에 턱없이 부족한 가격이다. 전농측은 올해 6월까지 소사육능가가 입은 총 손실액을 4조3천6백여원 정도로 추산했다.

또한 7월 1일부터 쌀과 생우를 제외한 수입농산물이 전면개방되면서 농산물 가격이 하락한 것도 농가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특히 고추의 경우 예년 4천5백원(근당)하던 가격이 최저 2천원대까지 폭락했으며, 포도와 사과 등 모든 과일가격이 연쇄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라고 전농측은 밝혔다. 또한 김영삼정부 출범 초기 9조3천억

원이던 농가부채가 17조4천억원으로 늘어났다.

농업 기반 보호정책 절실

잇따른 농산물 가격 폭락과 관련해 전농의 김주철 투쟁기획감사는 "무엇보다도 국제경쟁력 강화 위주의 정책 방향이 문제"라며, "저가격에 의한 국제경쟁력 강화보다 농업기반 보호를 위한 적정가격 유지정책이 우리 현실에 더욱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이미 나주·순천·대구·부안·공주·논산 등지에서 집회를 가진 데 이어, 10월 중순까지 합천·부여·거창·원주 등지에서 '소값폭락 규탄 및 농산물 가격 보장과 농가부채 해결을 위한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10월말 이후엔 농축산물 제값 받기와 농가부채 해결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11월에 전국농민대회를 통해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만화 사랑방



한가위 보름달이 뜨면 소원을 빌러나...

네 할아버지...

생존권을 보장하라!
- 후포구 노조 단식투쟁
- 삼미특수강 투쟁
- 2백석력 칼거면 농성

...달님 소원부터 들어줘야겠네

<명성, 6일의 기록>

· 97년 제작 · 제작 푸른영상 · 감독 김동원 · 74분 · 컬러 · 다큐

이 작품은 87년 6월 향쟁의 기폭제가 되었던 6일 간의 명동성당 농성 투쟁에 관한 기록이다.

10년전 6월 10일 밤, 경찰에 쫓겨 명동성당에 우연히 모이게 된 수백 명의 학생과 시민들이 농성을 벌이게 되는 과정, 농성대의 갈등과 희망, 그리고 농성을 둘러싼 당시 정치적 상황들이 풍부한 자료 화면과 증언을 배경으로 전개된다.

특히 이 작품이 관심을 갖고 살펴본 것은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 이목을 집중시키면서 나날이 투쟁의 상징으로 자리를 잡아가던 명동성당 농성이 왜 그렇게 급작스레 해산하게 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정부뿐 아니라 당시 재야 운동지도부인 국민운동본부와 서울지역대학생협의회, 그리고 농성대를 보호하던 명동성당측이 한결같이 농성대에게 해산을 종용했고 결국 농성대는 치열한 토론과 3차 투표 끝에 해산하게 되었다. 이 작품은 6월 향쟁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는 명동성당 농성투쟁의 전개와 해산 과정을 통해 그 6월의 가능성과 한계를 비판적으로 재해석하고 있다. 이 작품이 지금 우리 운동에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

<레드헌트>

· 97년 제작 · 제작 하늬영상 · 감독 조성봉 · 67분 · 컬러 · 다큐

<레드헌트>는 미군정 문서에 등장하는 4.3 당시의 '빨갱이 사냥'을 일컫는다. 48년 총인구 27만 명의 섬 제주에서 적게는 3만에서 많게는 8만에 이르는 목숨을 앗아간 참극 '4.3 향쟁'에 대한 기록은 흔치 않다.

<레드헌트>는 그 흔치 않은 기록에 의미있는 하나를 보태고 있다. 4·3을 겪은 피해자와 가해자들의 인터뷰와 강요배 화백의 그림들이 어울려 이를 형상화하고 있다. 당시 기록을 보면 무장폭도의 수를 3백~6백명, 동조 가담자를 1천~3천명으로 공식 집계하고 있다. 그렇다면 희생자가 3만이 넘게 집계된 결과는 무엇을 뜻하는가?

이 작품은 지난 4월 열린 Q채널의 다큐멘터리 영상제에서 자체 검열에 의해 상영이 불발된 작품이기도 하다.

제2회 인권영화제가 1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인권영화제는 여러분의 후원으로 이루어집니다.

- 인권영화제는 독립자본이 만드는 영화가 아닙니다.
- 인권영화제는 인권을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만드는 영화입니다.

개인후원은 1구좌 1만원, 단체후원은 1구좌 5만원이며, 1구좌 이상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해 주신 분들에게는 영화제에서 상영되는 모든 영화의 해설책자와 기념품을 드립니다. (문의: 741-2407, 741-5363)

인권영화제 작업작업 자원봉사자를 찾습니다.

작품의 차익작업을 위해 일어·영어를 능통하게 하는 분이 필요합니다.

통신연대, 통신검열 실태조사

진보통신단체연대모임(대표 장여경, 통신연대)은 통신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우리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검열 실태에 대한 의식조사 설문작업을 벌이고 있다. 9월 7일 현재 3백여 명이 참가했으며, 더많은 참가를 위해 마감을 14일까지 연장했다. 이번 조사·분석 결과는 통신연대에서 발행하는 <'97 정보통신검열백서>에 실릴 예정이다. 문의: 참세상> 통신연대(sipc)

서울국제노동자미디어 행사 다양

노동자 미디어·문화운동의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준비되는 '서울 국제노동자미디어(Seoul International Labor Media) 97'의 기자설명회와 조직위원회 발족식이 9일 오후 세실레스토랑에서 열렸다.

이날 발표된 바에 따르면 행사로는 주제토론 및 워크숍, 시현, 제1회 국제노동영화제 등이 마련되었다. '주제토론 및 워크숍'은 노동운동과 네트워크를 통한 조직화·노동조합과 정보통신기술의 활용 사례 등의 주제를 가지고, 각 주관 단체별로 경험을 정리·발표하는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국내외에서 제작된 노동운동 관련 영화를 상영하는 '국제노동영화제'도 현재 준비중이다.

장애인 대선 모니터요원 모집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소장 김정열)는 제15대 대통령 선거에 참여할 모니터 요원을 모집하고 있다. 사회복지와 장애인복지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된다.

연구소측이 밝힌 바에 따르면 대통령 후보 TV 초청 토론회에서 사회복지·장애인복지 분야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 이후 장애인복지 정책의 방향 등에 대해 심각한 문제제기가 되고 있다. 모집은 20일까지. 문의: 521-5364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interpia.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7년 9월 11 일(목)

제 965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청소년보호' 불뚱, 사회단체로 단체간행물에 청소년유해매체 낙인

최근 만화사태를 통해 위력을 선보이고 있는 청소년보호법의 불뚱이 사회단체로까지 튀고 있다.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간윤)는 지난 달 19일 공문을 통해 "서울민주청년단체협의회(의장 전상봉, 서청협)가 발행하는 회지 <서울청년>(통권8호)이 청소년유해간행물"이라는 결정을 통보했다. 이러한 조치가 앞으로 각종 사회단체 간행물 등에 대해서도 유사하게 적용될지 관심이 쏠린다.

간윤은 이번 결정의 이유에 대해 공식적인 답변을 거부하고 있지만, 청소년보호법 제10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 가운데 4항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비윤리적인 것'이라는 조항을 적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간윤의 심의위원으로는 이택기·계희열(고려대 교수), 송기중·전인영·한영호(서울대 교수), 박충석(이화여대 교수), 강상현(연세대 교수), 김대모(중앙대 교수), 김은상(홍익대 교수), 구상진(변호사) 씨 등이 참여하고 있다.)

<서울청년>8호에 처음 적용

또한 서청협 관계자가 간윤을 방문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7·4 남북공동성명의 의의와 통일운동의 전망'이라는 글과 '민족민주운동진영의 주도로 통일 지향의 정권을 수립하자'는 글 가운데 일부가 청소년유해내용으로 지적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가 된 대목을 살펴보면, "평화문제를 해결하려면...미국과 북한 사이에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상호 적대 행위가 종식되어야 한다"(<서울청년>9쪽)

"다른 나라 군대가 영토안에 주둔하고 우월적 지위를 차지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10쪽) "연방제 통일방안의 구체적 방법은 합의되지 않았다. 다만 연방제 방식으로-중국식으로는 일국양제- 서로의 체제를 인정한 토대 위에 민족적 단합을 추구하지는 통일방안이 합의된 것이다"(11쪽) "민중의 편에 기초한 이번 대선투쟁의 목표는 첫째, 민주적 정권교체에 있다. 민중이 주인되어 통일조국의 전기를 마련할 정권의 창출이 이번 대선의 중심 과제이다"(15쪽) 등이다.

통일, 대선 관련 글이 문제?

하지만, 간윤의 결정에 대해 서청협은 한 마디로 "어처구니 없다"는 입장이다. 92년부터 발행된 <서울청년>은 서청협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회지일 뿐이며, 대학가 서점에 진열된 것들은 홍보차원의 비매품이라는 것이다. 서청협은 따라서 "이번 결정은 진보적

간행물의 발행을 위축시키려는 의도의 언론탄압"이라고 비난했다.

"정치적 견해는 포르노와 다르다" 이형근 변호사는 "간윤의 결정은 당초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정치적 의사표현을 담은 간행물을 포르노와 유사하게 취급하는 것은 법제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며, 동시에 <서울청년>이 반사회적인 매체라는 판단에도 의문이 간다"고 밝혔다.

청소년유해간행물 결정을 받은 매체들은 유해매체표시 또는 비닐포장, 분류인열 등의 규제조치를 받게 되는데, 단체회지인 <서울청년>에 대해서도 이러한 조치가 내려질 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청협측도 일단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조치를 지켜본 뒤, 법률적 대응을 모색하기로 했다.

청소년보호법은 법 제정 단계에서부터 "표현의 자유와 진보운동에 대한 규제기구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아왔는데, 이번 <서울청년>에 대해 최초로 그 칼날을 들이대며 이를 현실화했다. 따라서, 청소년보호법에 대한 각계 사회운동진영의 대응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제2회 인권영화제가 15일 앞으로 인권영화제는 여러분의 후원으로 이루어집니다.

개인 후원은 1구좌 1만원, 단체 후원은 1구좌 5만원이며, 1구좌 이상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해 주신 분들에게는 영화제에서 상영되는 모든 영화의 해설책자와 기념품을 드립니다. (문의: 741-2407, 741-5363)

후원구좌: 국민은행 822-21-0276-824 농협 033-02-119388
제일은행 110-20-342272 (예금주 서준식)

인권영화제 자막작업 자원봉사자가 필요합니다. 작품의 자막작업을 위해 일어·영어를 능통하게 하는 분이 필요합니다.

물 건너간 외국인노동자 인권 연수생제 유지...불법체류자 단속 강화

외국인노동자들의 인권이 또다시 유보될 위기에 처했다.

9월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외국인 취업연수제'에 따르면, 연수생으로 일정기간 일한 외국인노동자들은 소정의 절차를 밟아 '노동자' 자격으로 취업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 제도가 현행 산업기술연수생 제도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함에 따라, 외국인노동자들의 인권을 계속 무시하게 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방침과 관련해, 10일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회장 김해성 목사, 외노협) 등 국내 외국인노동자 인권단체들은 '경악과 분노'를 나타내며 규탄성명을 발표했다. 외노협은 성명에서 "정부는 대다수 노동자의 최소한의 기본권보다는 소수의 자본가 이익이 정권안정에 든든한 축이 되고 있음을 인정한 것"이라며 "취업연수제 실시발표의 즉각 철회와 산업연수제도 철폐, 고용허가제 실시" 등을 촉구했다.

안산외국인상담소 조용희 전도사는 "정부가 중소기업중앙협의회를 주축으로 외국인들에게 노동자로서의 지위와 권리를 박탈할 뿐 아니라 단속과 감시체계를 강화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인권단체들은 정부가 불법체류자 사면 문제를 외면한 데 대해서도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외노협측에 따르면, 지난 7월 당시 노동부장관이던 진념 씨는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벌이던 외노협측에 불법체류자 사면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최근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단속과 처벌은 오히려 강화됐으며, 정부는 한동안 실시되지 않았던 불법체류자에 대한 벌금제도를 지난 7월부터 부활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외국인노동자의 집 신홍주 전도사는 "외국인노동자 가운데 불법체류자는 60%에 달한다"며 "구조적 희생양인 이들을 강제출국시키는 대신 합법적 노동자의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노협은 정부방침에 맞서 긴급대책위를 구성하기로 했으며, 오는 12일 서울역이나 탑골공원 등지에서 항의집회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산부 집단폭행 파문 확산 여연 "폭행경찰 처벌" 요구

지난 6일 강원도 횡성에서 열린 전국 농민대회에 참가했던 임신 8개월의 임산부 정분숙 씨 집단폭행 사건에 대한 항의가 농민단체에서 여성단체로 확산되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 지은희 등, 여연)은 10일 항의성명을 발표하고 "정순덕 씨의 폭행에 가담한 경찰들의 처벌과 횡성경찰서장은 이 사건에 책임질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정씨의 안전한 출산과 건강을 끝까지 책임지고 정신적, 육체적 피해보상을 할 것"을 촉구하며 이를 위해 싸워나갈 것임을 밝혔다. 여연측에 따르면 정씨는 정신적 충격과 두통, 복통, 요통 등의 고통을 호소하며 원주 인화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지금까지 안정을 되찾지 못하고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강원도연맹과 강원도 여성농민회연합 주최로 지난 6일 횡성에서 "소값 폭락 대책마련을 위한

'97 강원농민대회'가 열렸으며, 신고 절차를 마친 합법집회였음에도 불구하고 폭력적인 진압을 벌여 이승렬 전농 강원도연맹 등 35명이 강제연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임신 8개월의 정씨가 4명의 전경들에 의해 방패로 찍히고 발로 걷어차이는 등 폭행을 당한 것이다. <본지 9월 10일자 참조>

민주노총, PC통신 사찰 중단 촉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권영길, 민주노총)은 9일 성명을 발표하고 "검찰의 컴퓨터통신에 대한 정치사찰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지난 5일 서울지검 공안1부가 컴퓨터 통신에 대선과 관련한 정당 및 정치인들을 비방하는 글 9천1백91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며 혐의사실이 밝혀질 경우 소환, 조사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노총은 "검찰의 행위는 국민의 정치참여에 대한 물자각하고 반헌법적인 대국민 협박"이라고 반박했다. 선거를 정치인들만의 잔치로 만들려는 것은 '군사독재의 국민통제발상'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검찰과 경찰, 공안당국은 민주주의체제의 근간을 파괴하는 통신감청을 중단하고, 모든 국민의 정치적 참여를 보장하며 △단체 및 노조의 선거운동을 불법화한 현행 선거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

"침략전쟁 부끄러움 가르쳐라" 281차 정대협 수요시위

10일 낮 12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281차 수요시위가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김귀식, 전교조)는 이날 집회에서 "일본정부는 '일본군 위안부'제도가 반인륜적 전쟁범죄라고 사실대로 교과서에 수록하고, 학생들이 침략전쟁의 부끄러움을 알도록 교육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시위에 참가한 정대협 소속 회원, 전교조 조합원 등 50여 명은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 국민기금"에 대한 규탄과 함께 일본정부에 사죄와 국제법에 따른 배상을 요구했다.

북한어린이에게 의약품을! 700-8275(빨리치료)

로 전화하시면 2000원이 성금으로 적립됩니다.

- 참여방법: 1) 아래 계좌로 성금을 국민은행 079-01-0381-545(예금주: 북한어린이)
- 2) ARS전화를 걸어주시면 2천원이 성금으로 적립됩니다. 전화번호-(국번없이) 700-8275
- 3) 천리안 go save 북한어린이살리기 의/약/품/지/원/본/부 (523-9756)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interpia.net ·http://www.interpia.net/~rights

'가정을 가질 권리'도 차별 6개 종교단체 국적법 개정 캠페인

국내에서 외국인노동자는 '노동자로서의 권리'만이 아니라, 가정을 꾸릴 권리마저 박탈당하고 있다. 이는 국내 국적법이 '부계우선혈통주의'에 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외국인 남성은 동거인일 뿐, 그의 의사대로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없다. 당연히 이들 사이에 난 자녀는 사생아가 되며 합법적인 취학기회도, 의료보험혜택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나 외국인 여성이 한국인남성과 결혼한다면 별다른 어려움은 없다. 이러한 부계중심의 국적법은 똑같은 배우자인 외국인에 대하여 그 배우자가 남성인가 여성인가에 따라 달리 취급되고 있는 성차별적인 태도를 취하

고 있는 것이다. 이에 한국교회여성연합회·한국여성학자협의회 등 6개 종교단체는 이번 정기국회에 남녀차별적인 국적법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2, 19일 두 차례에 걸쳐 성차별적 국적법 개정을 위한 연대캠페인을 벌인다. 한국교회여성연합회측은 "85년 정부가 가입한 유엔 여성차별철폐조약에도 국적에 있어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받도록 하고 있다. 자녀의 국적 역시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마땅히 정부는 조약 가입국으로써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지적이다.

96년 12월 현재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노동자는 산업연수생 6만8천여

명, 불법체류자 12만9천명, 합법취업자 1만3천명을 포함해 모두 21만 여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여기에 최근 정부가 외국인 취업연수제 시행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유입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따라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성차별적인 국적법의 개정문제는 중요한 관심사안이 아닐 수 없다.

진관스님 3년6월 선고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구속된 진관스님(불교인권위원회 공동의장)이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김재진)는 1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제기한 항소 이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1심 형량대로 징역 3년6월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국가기밀 관련 공소사실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55개의 국가기밀누설 사항과 관련해, "국내정치상황 및 재야운동의 동향 등에 대한 주관적 분석과,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된 공지의 사실은 국가기밀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지의 사실이 국가기밀이 될 수 없다는 점은 이미 지난 7월 대법원 관례를 통해 확인된 부분이다. 그러나 △한국통신 노조 간부명단 △장기수 명단 △양심수 명단 △불교인권위 활동 내용 등 7개항에 대해선 "북한이 대남적화전라에 악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국가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기밀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국적법 개정을 위한 1차 캠페인
 때: 12일(금) 낮 12시~2시
 곳: 기독교회관 앞



만화사랑방

□ '표현의 자유'에 관한 국내 첫 토론회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공동대응 촉구

우리사회에 표현의 자유는 있는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주와 진보를 위한 지식인연대 등 13개 사회단체가 마련한 '표현의 자유'에 관한 토론회가 9일 오후 2-6시 기독교회관에서 1백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문화예술계를 강타하고 있는 검열과 탄압 등 '표현의 자유'의 침해에 맞서 대응을 모색하는 최초의 토론회라는 점에서도 의미를 가진 자리였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 내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의는 극히 빈곤한 상태인데, 이러한 점에서 이날 토론회는 공동대응책을 마련하는 것보다는 현정세에 대한 분석과 '표현의 자유'의 범위·내용 등에 대한 원칙적인 문제제기가 잇따랐다.

이날 토론회는 뚜렷한 결론을 맺지는 못했다. 다만 공동연대를 통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과 빠른 시일내 후속 토론회를 열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 '표현의 자유'의 침해에 대한 대응과 전망(조광희 변호사)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는 그 내용별로 나누자면 정치 영역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도덕 영역에서의 '표현의 자유'로 나눌 수 있다. 표현의 자유를 다루는 경우 의식적으로 두 가지를 구별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제한의 논리가 풍부한 음란물의 규제 수준에 맞춰 정치적인 표현물의 규제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주체는 국가권력이었는데, 국가권력에 못지 않은 부작용을 보일 주체는 자본으로, 그중에서 언론자본의 내부적인 검열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는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는가라고 단순히 질문을 던지지 말고 구체적으로, 단계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여야 한다. 존 스튜어트 밀의 고전적인 논리를 참조해 보았을 때 우리는 표현의 자유의 제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을 취할 수 있다. 첫째, 정치적인 영역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철저히 보장되어야 한다. 둘째,

적 문화적 양상들을 통제하고 조절하지 않으면 안된다. 현재 진행되는 표현의 자유와 같은 인간의 근본적 권리에 대한 통제와 억압은 신자유주의적 사회적 모순이 존속되는 한 지속될 것으로 보아야할 듯 싶다.

전체 국면과 정세적 효과에 대한 분석에 기반을 둔 새로운 방식의 대응이 필요하다. 문제의 복잡성과 복합성을 인식하여 대응의 적절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자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논리에 대응할 논리를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다. 동시에 국내 진보 진영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점도 없지 않은지 반성해야 한다고 본다.

■ '불온'이나 '음란'과 같은 불명확한 개념의 문제

현재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여러 법규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국가보안법) '불온'(전기통신사업법) '음란'(형법) '유해'(청소년보호법)와 같은 극히 추상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용어들은 그 내용에 관하여 충분한 합의를 하기에는 너무 불명확하므로 처벌의 전제로 삼을 수 없다. 또한 합리적인 유통과정을 창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청소년이 볼 수도 있다는 이유로 창작자를 처벌하는 것은 결국 성인의 표현물 수용에 대한 권리나 능력을 청소년 수준으로 낮추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유통과정을 마련하는 것은 바로 국가의 의무인 것이다.

· '표현의 자유'의 침해에 대한 대응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과제

현재 벌어지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의 성질은 결코 단일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현상을 막연히 하나로 포괄하여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매체의 특성과 결합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각 부문이 연구와 운동을 공동으로 진행하여 역량을 높이면서, 위험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논리적으로 공박하고, 재판 등을 통하여 변경해 가되, 불합리한 제도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표현의 자유와 표현물을 향유하여 행복을 추구할 성인의 권리를 최고도로 보장하되, 그러한 표현물로부터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노출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과 미성년자를 위하여 일정한 표현수준을 넘는 표현물에 대하여는 성인 중 원하는 사람만이 접근할 수 있도록 유통경로나 판매방법, 장소 등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비합리적 주장이라고 매도할 수 없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interpia.net ·http://www.interpia.net/~rights

경찰폭력 그 후...

병상을 지키는 이철용 씨

지난 6월 1일 서울 신당동 부근에서 한총련의 시위를 구경하다가 전경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했던 시민 이철용 씨(33). 그는 지금도 부상 후유증에 시달리며, 성남 공군비행장 의무대의 병실을 지키고 있다.

이 씨가 공군비행장내에 있는 까닭은 현재 그의 신분은 군인이기 때문이다. 폭행사건 직후인 6월 5일, 경찰은 그가 과거 탈영한 사실을 밝혀내고 신속히 군부대에 이첩했다. 이때부터 이 씨는 국군통합병원 수감병동에 갇히게 되었으며, 지난 8월 8일 군재판을 통해 잔여복무기간인 8개월 동안의 방위근무를 명받은 것이다.

경찰, 사건 은폐·축소 여론

한편, 사건 발생 1백일이 지난 지금까지 경찰은 가해범들을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비공식적으로 이 씨에게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처음에는 내가 쇠파이프를 들고 시위한 것으로 유도하려 했다. 그러나, 내가 일관되게 폭행당한 것임을 분명히 하자 이번엔 굴러 넘어져 다친 것으로 몰아갔다. 그러다가 한 신문 기자가 찍은 사진이 공개되면서 경찰은 폭행사실을 시인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이 씨를 찾아온 경찰들은 "이번 사건으로 소대장, 중대장, 부관이 직위해제당했고, 의경 2-3명이 입건 상태"라며 전경들에 대한 용서를 청하고 돌아갔다고 이 씨는 밝혔다.

이 씨도 당초엔 폭행 경관에 대해 관용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 씨는 "전경들이야 명령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본래부터 가벼운 처벌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건을 은폐·축소하려는 경찰의 모습을 보면서 이 씨의 태도는 달라지게 됐다고 한다.

이 씨는 "경찰이 폭행사실을 시인하면서도 '전경들이 오인해서 때린 것'이라는 변명을 늘어났다"고 밝혔다. 그는 "7-8명이 방패로 찌고 발로 짓밟은 것이 어떻게 오만에 의한 행동이냐"며 "이는 일부터 작정하고 때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 씨는 "운이 좋았다. 기자가 찍은 사진이 없었다면 사과한 커녕 사건 자체가 흐지부지됐을 것"이라며 "경찰에 당하고도 사과 한마디 못받는 시민들이 더 많은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반성없는 경찰에 응서는 나중

지난 10일 목 보호대를 풀 이 씨는 아직도 목을 가누기 힘들고 턱을 움직이는 것마저 고통스럽다고 한다. 또 며칠 간격으로 찾아오는 두통에 밤잠조차 이루기 어렵지만, 혼한 진통제 한 알조차 타 먹기 힘든 실정이다.

오는 20일경 공군부대는 이 씨에 대한 군부적격자 심사를 마무리하고 이를 이 씨에게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심사에서 부적격자 판정을 받게 되면, 이 씨는 1백여 일만에 사회로 복귀하게 된다. 사회로 복귀하는 이 씨에게 경찰이 어떤 태도를 보이게

될지, 사건수사가 제대로 마무리될지 각계의 관심이 요청된다.

교도소내 가혹 징벌 물의

단식 대학생에 가족수감 채워

교도소내에서 단식을 벌이던 대학생이 가혹한 징벌을 받았다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대학교 총학생회에 따르면, 5기 충청지역 대학총학생회연합 의장인 김동석(충남대 총학생회장) 씨가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단식을 벌였다가, 혼거방에서 독거방으로 옮겨지고 혁수정(가족수감)을 채우는 등의 징벌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정략적 전·노사면 결사 반대, 한총련 사수, 공안탄압 중단, 대선 자금 공개, 김영삼 하야'를 주장하며 단식을 벌여왔다.

이에 대해 윤기원 변호사는 "행형법상 규정은 없으나 단식을 이유로 징벌을 가하는 것은 과도한 징계"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나치게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가족수감을 교도소가 자의적으로 사용할 위험성이 존재하는 한, 원칙적으로 그 사용을 제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족수감은 일반 수감과 달리 두 손과 두 팔 모두를 묶어 두는 기구로 주로 자해나 자살·도주 등의 우려가 있는 재소자에게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재 교도소내 징벌권이 소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 씨가 당한 징벌에 대해 법적인 대응을 펼치는 데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2회 인권영화제 D-14

가족과 고향의 품에서 평화로운 추석 보내시길...
인권하루소식은 추석 연휴를 보낸 뒤, 19일(금)부터 찾아갑니다.

<기고> 한국 여성의 국제결혼과 불평등한 국적법의 개정방향

-국적법 개정을 위한 사업을 벌이며-

김낙경(한국교회여성연합회)

1. 배경

세계경제는 48년에서 94년까지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체제에서 95년 WTO 체제로 전환되면서 자유무역의 기치를 걸고 세계시장을 하나로 만들려 하고 있다. 이런 세계적 움직임 속에서 한국사회도 80년대 후반부터 '외국인노동자'라는 새로운 사회현상을 겪고 있다. 96년 12월 말 현재 21만54명의 외국인노동자(산업기술연수생 68,020명, 합법취업자 13,420명, 불법체류자 129,054명)가 국내에 들어왔으며, 그중에는 한국여성과 결혼해 사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앞으로 외국인력의 도입은 늘어날 추세이고,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의 경우 연령이 20대 후반에서 30대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의 국제결혼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의 국적법은 한국여성에게 불평등한 조항이 있고, 이로 인해 많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2. 국제조약과 세계 각국의 현황

여성의 인권보장이나 남녀평등실현에 관한 대표적인 유엔조약으로는 1) 세계인권선언(48년) 2) 기혼여성의 국적에 관한 조약(57년) 3) 혼인의 동의, 최저연령 및 등록에 관한 조약(62년) 4) 국제권리장전(66년) 5) 유엔 여성차별조약(79년)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국제권리장전, 유엔여성차별철폐조약을 비준한 상태이다. 그러나 한국은 85년 비준 당시 이와 상충되는 가족법과 국적법을 유보한 채 비준했다. 그 후 가족법은 완전하지는 않으나 90년 개정되었고, 국적법도 3차례 개정되었으나 남녀 차별조항은 개정되지 않았다.

국제적으로 85년 비준한 유엔 여성차별철폐조약에서는 "1. 당사국은 여성

이 국적을 취득, 변경 또는 보유함에 있어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여야 한다. 당사국은 특히 외국인과의 결혼 또는 혼인중에 부에 의한 국적의 변경으로 처의 국적이 자동적으로 변경되거나, 처가 무국적으로 되거나 또는 부의 국적이 처에게 강제되지 아니하도록 확보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자녀의 국적 역시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여성에게 부여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제2부 9조)

세계적으로 70년대 이후 부모양계혈 통주의를 채택한 나라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다. 일본만 하더라도 부계혈 통주의에서 84년에 국적법을 개정하여 부모양계주의를 채택했으며, 배우자의 귀화요건에서도 평등화를 이루었다.

3. 한국 국적법의 문제와 현실적인 문제들

한국의 국적법으로는 결혼 당사자인 외국인 남자는 결혼과 동시에 그의 의사대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없다. 또한 현행 국적법으로는 남편의 국적취득·변경으로 처의 국적은 자동적으로 취득·변경·상실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귀화에 있어서 똑같은 배우자인 외국인에 대해 그 배우자가 남성인가 여성인가에 따라 달리 취급함으로써 성차별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자녀의 경우에도 부계우선혈통주의를 채택함으로써 한국인 어머니와 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미 사실혼관계에서 아이가 태어나서 취학을 해야 하는 상황에 있는 자녀를 둔 가정도 있다. 이들의 어려움은 원칙적으로 호적법상 출생신고가 접수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편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의료보험이나 초등학교의 입학도 할 수가 없다. 외국인 남편 또한 자신의 나라에 가서 혼인신고를 하여도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서 비자를 신청하는 경

우 동거인 비자(F1)를 받게 된다. 이 동거인 비자의 유효기간은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6년인데, F1 비자는 동거하는 가족의 방문과 체류만을 허가하는 비자이지 취업비자는 아니다. 때문에 취업하면 불법체류자가 되고 발각되면 추방당하여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하는 일이 생기기 된다. 이런 이유로 결혼사실을 숨기고 사는 경우가 많다.

4. 국적법 개정을 위한 사회단체의 움직임

한국교회여성연합회는 96년 개소한 외국인 여성노동자 상담소 활동을 통해서 외국인과 결혼한 한국여성의 경우를 접하게 되었고 한국의 국적법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96년 동북아시아 여성포럼에서 한국의 외국인노동자 인권문제에 대한 발표를 하면서 한국의 국적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였고, 한국의 불평등한 국적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결의를 한 바도 있다. 이에 한국교회여성연합회에서는 97년 5월 외국인 여성노동자문제에 대한 심포지엄을 하면서 한국의 국적법 문제에 대해서도 법적인 검토를 하였고, 이어 국적법 개정을 위한 사업에 착수하였다. 앞으로도 국적법의 문제를 알리고 개정을 촉구하는 홍보를 계속해 나갈 것이다.

5. 결론

세계적으로 이주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한국도 이런 시대적 조류에 따라 많은 부분들을 개방해야 하는 시점에 있다. 또 국제적으로 지켜야 하는 많은 조약들에 대해서도 유연하고 성숙한 자세로 대처할 것이 요청되는 시점이다. 국내법들도 이런 시각에서 많은 부분 검토의 소지가 있다. 이에 하자가 국적법의 문제이다. 남녀평등의 원칙과 시대적인 조류에 합치되는 법안으로 개정되기를 바란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interpia.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7년 9월 19 일(금)
제 968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한총련간부 사망, '경찰폭행' 의혹 시민·사회단체, "공권력 과실치사" 규탄

한총련 투쟁국장 김준배(27) 씨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유족들이 경찰의 폭행 여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며, 광주 지역 사회단체 등도 공권력의 비이성적 탄압을 규탄하고 나섰다. 경찰은 지난 16일 새벽 0시경 수배중이던 김 씨를 검거하기 위해 광주 시내 은신처를 급습했으며, 이 과정에서 김 씨가 아파트 창문 밖에 설치된 TV 캐이بل선을 타고 도망치다 20미터 높이에서 추락했다고 발표했다.

한편 검거작전이 벌어질 당시, 김 씨와 같이 머물고 있던 전 아무개(광주대 91학번) 씨 등 2명은 이번 사건의 진상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목격자로 지목되고 있다. 그러나, 전 씨는 현재 구속수감중이며, 공익근무요원으로 알려진 또 다른 한 명은 경찰서에서 훈방된 뒤 접촉이 안되는 상태로 알려졌다. 전 씨를 면회한 사회단체 관계자에 따르면, 전 씨는 "경찰이 들어오자마자 나를 허리띠로 포박했고, 머리를 바닥에 박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가 은신한 아파트는 9평짜리 원룸아파트이며, 검거작전에 투입된 경찰은 24-5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고 직후 현장에 다녀온 김 씨의 아버지 김현국(62) 씨는 20미터 높이에서 추락했는데 추락지점에 아무 흔적이 없었던 점, △부검 결과 외상은 없으나 간을 비롯해 내장이 파열되어 있던 점, △갈비뼈가 부러져 살을 뚫고 나와 있던 점 등을 지적하며, "경찰의 과잉 폭력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통일중공업 노조간부 석방 촉구

민주노총, 공권력 투입 항의

18일 민주노총(위원장 권영길)은 지난 14일 정부당국이 장기간 쥬의중이던 통일중공업 노조에 수천 명의 경찰병력을 투입해 조합원을 강제 연행·구속시킨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유정민 조직부장 등 노조간부 5명을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14일 새벽 5시40분경 통일중공업에 6백여 명의 경찰병력을 동원해 최루탄을 난사하고 중장비까지 앞세워 조합원 전원을 강제 연행하고, 사전 구인장이 발부된 노조 간부 5명을 구속시켰다. 민주노총측은 추서 연휴가 끝난 18일까지 경찰병력을 주둔시킨 채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통일중공업은 사측이 올 임금교섭에서 매출연동제 임금을 고집하고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함에 따라, 지난 70여 일 간이나 합법적 절차를 거쳐 쟁의를 벌여온 사업장으로, 민주노총은 "정부당국이 사측을 일방적으로 편들어 노조간부 고소·고발에 공권력을 투입한 것은 반노동자적 폭거"라고 항의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자율적 노사교섭에 대한 정부당국의 부당한 개입 중단과 통일중공업에서 경찰병력 철수 △강제 연행·구속된 노조간부 5명 즉각 석방 △강인군 사장 해임과 임금교섭에 성실한 태도로 임할 것 등을 촉구했다.

.....주요 공판 안내

- ▶ 19일(금)
·이지웅(국보법 찬양·교무 등, 한총련 사건) 오전10시 합의22부 319호 신건
·홍연아의 1인(국보법 찬양·교무 등) 합의22부 319호 속행

제2회 인권영화제 8일 앞으로

'사전심의' 거부에 따른 장소섭외의 어려움과 재정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제2회 인권영화제 준비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인후원(구좌당 1만원 이상), 단체후원(구좌당 5만원 이상)을 통해 인권영화제에 힘을 보태 주십시오. 상영장소는 흥익대와 기독교연합회관입니다.
후원구좌: 국민은행 822-21-0276-824 농협 033-02-119388
제일은행 110-20-342272 (예금주 서준식)

"안기부 발표는 조작" 비전향 장기수, 오익제 씨 접촉설 부인

안기부가 오익제(전 천도교 교령) 씨의 월북사건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12일 안기부는 오익제 씨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오 씨가 비전향 장기수 왕 아무개(71) 씨를 접촉한 뒤 그의 복송을 추진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안기부의 발표와 달리 왕 씨는 "오익제 씨와 접촉한 사실도 없을 뿐더러 이 문제로 안기부의 조사조차 받은 일이 없다"고 밝혔다.

간첩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33년을 복역한 왕 씨는 지난 91년 위암 3기 판정을 받고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비전향장기수로서 현재 쌍문동 한일병원에 입원치료중이다.

왕 씨에 따르면, 안기부는 당사자인 왕 씨를 제쳐둔 채 그의 가족들을 상대로 집중 조사를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8남매인 왕 씨의 형제들은 지난 8월 하순경 수사관 4-5명으로부터 각각 방문을 받고 "왕 씨가 오익제 씨를 만난 사실을 아느냐" 등의 조사를 받았다. 또한 왕 씨의 부인도 익명의 수사관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왕 씨를 만나게 된 경위와 생활 등에 대해 40여분 간 조사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반도 지뢰 철수 촉구 국민승리21 논평

제2회 인권영화제 과제작

<브라질 에비뉴 An Avenue Called Brazil>

·제작국가 브라질·제작연도 1989·감독 옥타비오 베제라 ·79분·컬러·다큐멘터리·1989 라틴아메리카 영화제 수상

브라질 수도 리오데자이네로의 중심을 관통하는 '브라질 에비뉴'를 화두로 삼아 브라질의 수도에 대한 야유와 조롱과 연민과 비판의식을 뒤섞은 블랙 코메디같은 다큐멘터리. 카주 공동묘지에서 시작해 54km를 달리는 <브라질 에비뉴>는 리오의 삼라만상-원자력 연구소, 브라질일보, 대학, 오스왈도 글즈 회관, 백만불짜리 광고계시판, 마약의 거리, 병원-의 산중인이다. 리오에서 하루동안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무작위로 취재해 화면에 담아낸 이 영화는 리오에서 하루동안 죽는 17명의 사인이 어디에 있는지 은근히 빚어 말한다.

미래의 브라질은 바나나맛의 풍선껌과 '피맛'이 나는 총알이 지배할 거라는 끔찍한 예언도 서슴지 않는 이 영화는 무방비로 발생하는 교통사고, 갈 곳 없는 행려들, 거리에서 대마초를 피우며 자라고 있는 아이들의 끔찍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브라질을 지배하고 있는 암울함을 여과없이 전하고 있다.

<천황의 군대는 진군한다>

·제작국가 일본·제작연도 1987년·감독 하라 카즈오·122분·컬러다큐멘터리·1987년 베를린영화제 칼리거리상 수상

태평양전쟁 패전 직전, 뉴기니아 전선은 지옥 그 자체였다. 굶주림, 말라리아, 죽음... 이런 극한상황 속에서 일본군이 일상적으로 인육을 먹었다는 소문은 오래 전부터 퍼다했다. 병사로서 뉴기니아에 파견되었다가 간신히 살아서 귀국한 오쿠자키는 과거의 독립공병대 36연대 웨이워 전투부대에서 패전 23일 후에 2명의 병사가 대장에 의하여 사살된 사실을 알고 진상규명 작업을 시작한다. 살아 남은 상관들의 입에서 나오는 놀라운 사건의 진상! 오쿠자키는 이 비참한 전쟁의 책임이 천황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천황의 전쟁책임을 고발하는 끈질기고도 과격한 직접행동을 취한다. 오쿠자키의 무기는 배짱과 전우들에 대한 애정, 그리고 일본 전국을 누비고 떠돌기 위한 승용차와 마이크 뿐이다. 시치미 떤다는 일본의 양심을 흔들어 깨우는 충격적인 다큐멘터리.

당초 왕 씨는 가족들을 조사한 수사관들이 경찰일 것으로 추정하고 관할 경찰서인 성북경찰서에 항의를 했으나, 경찰은 "가족들을 조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왕 씨에 대한 언론보도가 나간 직후 병원에 입원중인 그를 찾아와 "오해를 말야 달라"는 부탁을 남기기도 했다고 왕 씨는 밝혔다. 이에 따라 가족들을 조사한 수사관들은 안기부 소속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왕 씨는 "감옥에서 나온 뒤, 일·월간지에 기고한 글과 인터뷰 등에서 '죽기 전에 북한에 있는 가족과 만나 보고 싶다'고 말한 것이나 정부에 비판적인 언급을 한 것을 이제 와서 오익제 월북사건과 연결지으려 하는 것 같다"며 "안기부가 사건을 조작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이에 따라 왕 씨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언론을 통해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안기부에 대해 법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interpia.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7년 9월 20 일(토)

제 969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제2회 인권영화제 또 외압

당국 상영장소 압박...“예정대로” 영화제 측

제2회 인권영화제가 상영장소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이는 상영 예정지마다 '사전심의'를 거부한 인권영화제의 개최에 난색을 표하는 데다, 당국의 외압마저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제1회 인권영화제도 개막 전날 상영장소인 이화여대측에서 불기방침이 통보됐으며, 행사 기간 내내 서대문구청과 문화체육부의 압력이 계속되는 속에 어렵게 치러진 바 있다.

제2회 인권영화제의 상영장소는 당초 동국대로 예정되어 있었다. 이는 동국대 연극영상학부가 영화제의 공동주관을 맡은 데다 연극영상학부장도 영화제의 개최를 승인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영화제 집행위원회 측은 6월경 이미 동국대 학술통화회관에 상영신청을 마친 상황이었다.

그러나, 개막일을 한 달 앞둔 8월 27일 영화제는 첫번째 난관에 부딪치게 되었다. 동국대 송석구 총장이 동국대에서의 상영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최종 통보한 것이다. 동국대에 대한 행정당국의 외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일부 보직교수들의 반대 여론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국대측의 결정은 영화제의 각종 팸플렛과 포스터 제작작업 등에도 차질을 빚는 결과를 가져왔다.

기독교연합회관, "사전심의 받아라"
곧바로 장소 섭외에 나선 영화제 측은 우여곡절 끝에 종로5가 기독교연합회관과 홍익대를 상영장소로 선정하게 되었다. 둘째 과정에서 후보지로 떠올랐던 명동성당 문화관은 몇몇 신부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당 당국의 비협조적 자세 때문에 포기된 경우다.

그러나, 영화제 개막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장소문제는 또다시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 9월초 장소사용을 승인했던 기독교연합회관측이 18일 급작스레 영화제 집행위로 연락을 취해, 상영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한 것이다.

연합회관 관리처장은 "문체부와 동대문경찰서에서 연락이 와, '영화제를 상영하면 연합회관측이 대단히 어려워질 것'이라고 이야기했다"며 "일단 결정된 일이지만, 사전심의의 받던가 상영을 포기하던가 선택하라"고 말했다. 연합회관측은 동대문경찰서와 문체부측에 다시 연락을 취해본 뒤, 최종 입장을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홍익대의 경우는 한총련 탄압

과 맞물려 있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한총련을 탈퇴하지 않은 홍익대 총학생회는, 최근 경찰측으로부터 학생회 간부에 대한 전원 검거방침이 내려져 영화제 개최에 어려움을 느끼는 상황이다. 이러한 검거 방침이 인권영화제의 개최에 따른 경찰의 압력인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안기부·문체부·교육부·마포경찰서 등에서 영화제 개최와 관련해 학교당국에 연락을 취한 사실이 확인됐다.

안기부·교육부·문체부 등 총동원
이에 따라, 인권영화제 집행위원회는 있을 수 있는 모든 사태에 대한 대책을 감수중이며, 다음주 초 기독교연합회관의 최종 통보와 홍익대 총학생회의 결정에 따라 영화제의 모습이 유쾌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서준식 영화제집행위원장은 "인권영화제는 어떤 장소에서 어떤 형태이던 예정대로 치러질 것"이라고 밝혔다.

행사와 동정

- 정부의 기반적인 외국인 연수취업제 방안 철회 촉구를 위한 규탄집회
·때: 22일(월) 오전 11시-오후1시 ·곳: 과천 종합청사 앞마당
·주최: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744-9063)
-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때: 23일(화) 오후3시 ·곳: 종로성당 3층
·주제발표: 산재보험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김은희 노건 대표)/외국의 산재보험제도 검토 및 평가(김용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 21세기 신가정 생활개혁운동 시민포럼
·때: 25일(목) 오후 2시 ·곳: 대구 동아쇼핑 아트홀(8층)
·주최: 대구여성의 전화(053-475-8084)
- **민언협 22기 언론학교 수강생 모집**
민주언론운동협의회(민언협)는 제22기 언론학교 수강생을 모집한다. 오는 25일부터 11월8일까지 매주 화, 목 저녁 7시부터 2시간 동안 민언협 교육관에서 진행된다. 회비는 8만원. 문의: 326-1252-4
- **여성노동자 위한 홈페이지 개설**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는 여성노동관련 정보를 축적, 인터넷 상에서 전문 여성노동정보를 제공하고, 전자공간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네트워크를 실현하기 위해 홈페이지 '일하는 여성들의 네트워크'(http://www.kwnet.org)를 개설했다. 문의: 869-1347, 1337

서경원 전 의원 석방 권고 결의 IPU '국회의원의 인권을 위한 위원회'

IPU(국제의원연맹)의 '국회의원의 인권을 위한 위원회'(Committee on the Human Rights of Parliamentarians)가 지난 7월 제네바에서 열린 제78차 회의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으로 구금 중인 서경원 전 국회의원(89년 6월 구속, 10년 선고, 진주교도소 수감중)의 석방을 권고하는 결의안을 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는 18일 국제앰네스티가 민가협에 보낸 결정문 원본을 통해 확인되었다.

'국회의원의 인권을 위한 위원회'는 서경원 씨가 구속당시 6주 동안 변호인의 접근권을 침해당하고, 검찰에서도 며칠동안 철야조사를 받으며 장기 수사를 당한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법원이 이러한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점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서경원 씨의 구속사유인 국가보안법 상 국가기밀누설죄에 대해 한국법원이 '국가기밀'을 너무 폭넓게

해석하고 있다고 문제제기했다. 또한 유엔 인권이사회등이 국가보안법 철폐와 국보법으로 인한 구속자들의 석방을 권고한 점을 상기시키면서, 한국정부측에 서경원 씨를 빨리 석방시킬 것을 권고했다.

PC통신사에 '통신검열' 질의 통신연대·민변·민노총등

통신연대(대표 장여경)는 18일 민변, 민주노총, 전국연합과 공동으로 상업통신망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이용자 권익향상을 위한 질의서를 천리안, 하이텔등 4대 PC통신사 앞으로 발송했다.

통신연대등은 질의서를 통해 ▲검열을 가능케 하는 기술적 시스템 ▲검열을 수행하는 조직과 사람 ▲외부(예: 안기부, 경찰청 등)로부터 이용자 정

제2회 인권영화제 상영일정표 (9월27일-10월4일, 홍익대)

27일(토)	오후 2시 개막식(외우관) 외우관: 새의 노래/천황의 군대는 진군한다/사랑해요/외투/바이 바이 바브시카(상영시간 15:00-21:45) 0관: 양도살자/르완다 대학살/푸마의 딸(15:00-21:55) Z관: 쇼아1(17:00-22:00)
28일(일)	외우관: 호남호녀/명성, 6일의 기록/히틀러와 아브라함/루치아(14:00-22:00) 0관:델타포스/레드헌트/유토피아를 꿈꾸는 사람들(16:30-22:00) Z관: 미나마타/쇼아2/쇼아 강연회(14:00-21:00)
29일(월)	0관: 유령을 부르며/하비밀크의 시대(17:00-20:30) Z관:어떤 쿠바 난민들/시가라키에서 불어오는 바람(17:00-20:30)
30일(화)	0관: 브라질 예비뉴/명성 6일의 기록/델타포스(17:00-21:50) Z관: 천황의 군대는 진군한다/루치아(17:00-21:30)
1일(수)	0관: 갈릴리에서의 결혼/르완다 대학살(17:00-21:30) Z관: 유토피아를 꿈꾸는 사람들/눈물의 사슬(17:00-20:50)
2일(목)	0관: 푸마의 딸/바이바이 바브시카/레드헌트(17:00-22:00) Z관:시가라키에서 불어오는바람/어떤 쿠바 난민들(17:00-20:30)
3일(금)	0관:미나마타/호남호녀/히틀러와아브라함/새의노래(14:00-22:00) Z관: 외투/사랑해요/브라질 예비뉴/플로이드 란쯔만과 서준식의 인터뷰/쇼아1(14:00-21:40)
4일(토)	외우관: 양도살자/눈물의 사슬/갈릴리에서의 결혼(14:00-19:00) Z관: 쇼아2(14:00-18:30) 오후 7시 폐막식(외우관)

보와 게시물 삭제요청 ▲불량이용자 데이터베이스, 모니터링 제도개선 계획 등에 대해 묻고 있다. 질의서 최신 내용은 통신연대에서 발행하는 <97 정보통신검열백서>에 게재할 예정이다.

국적법 개정시안 환영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는 19일 정부의 국적법 개정 입법예고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현 국적법은 한국인 여성과 결혼하는 외국인 남성의 국적취득에 차별을 두고 있어 남녀평등에 위배되는 것으로 지적받아왔으며, 최근 법무부는 이러한 국적법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적법의 개정을 위해 서명운동을 펼쳐왔던 교회여성연합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대인지뢰금지운동 참여 촉구 전국연합 성명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전국연합)은 19일 오슬로에서 98개국이 대인지뢰금지협약초안을 채택한 데 대해 환영하며 정부측에 국제적 대인지뢰금지운동에 적극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유급생리휴가제도 폐지반대 여연등, 취업여건 악화우려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은 유급 생리휴가 제도와 시간의 근로, 야간근로금지 규정의 폐지를 검토하기로 했다는 재경원의 발표에 대해 19일 즉각 반박성명을 발표했다. 여연은 "재경원의 방침이 여성의 노동조건을 저하하고 특히 기혼여성의 취업여건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93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여성근로자들의 62.7%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4인이하 영세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

인권
시평

외국된 집단문화와 인권

장 호 순 (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우리가 인간을 평가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미국의 유력 일간지인 <워싱턴 포스트>의 편집국장을 지낸 벤 브래들리는 한 사람을 평가하기 위해 사귀고 있는 친구들을 관찰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의 친구를 통해 그의 사람 됨됨이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비해 우리는 대개 그 사람이 속한 집단의 권위를 통해 그를 평가한다. 그래서 혈연, 지연, 학연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진다. 혈연, 지연이야 태어나면서 결정되는 것이라 어쩔 수 없지만, 학연 만큼은 후천적인 것이라 병적인 교육열이 우리사회에 퍼지게 되었다.

우리사회에서 이러한 혈연, 지연, 학연은 필수 불가결한 생존도구이기도 하다. 몸이 아파 병원에 갈 때도 가족 중 누가 아는 의사를 먼저 찾아가고, 소송을 하러 변호사를 선임할 때도 고등학교 선후배 중에서 고른다. 집을 한 채 지으려 해도 구청에 누가 인연이 닿는 사람이 없으면 웬지 불안해진다. 같은 값을 주고 사는 자동차라도 사돈의 8촌쯤 되는 인연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사야 안심이 된다. 사적이던 공적이던 우리의 인간관계는 이런 혈연, 지연, 학연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한다.

혈연·지연·학연의 사회

우리사회가 유별나게 집단주의가 강하게 된 이유 중에는 국가가 개인의 인격과 권리를 보호해 주지 않았다는 점이 포함된다. 경제개발 지상주의 하에서 지난 수십년 간 우리는 야만의 정글과 다름없는 생존경쟁체제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경쟁에서 승리해야 되고, 낙오자들에게는 인간적 존엄을 인정해 주지 않았다. 국가가 이들의 인격권과 생존권을 보장해 주지는커녕 허약하고 무능력한 사람들로 무시해 버렸다.

국가로부터 개인이 누려야 할 권리와 이익을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

리가 의존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혈연, 지연, 학연이었다. 고향사람이고, 학교선배이고, 먼 친척이라도 되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집단을 형성할 수 있었고, 서로 보호해 주는 관습이 정착된 것이다. 물론 연약한 인간들이 힘을 합쳐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문제는 집단문화가 왜곡, 변질되었다는 점이다.

주먹세계의 의리

우선 소집단의 가치가 사회 전체의 보편적 가치보다 우선시 되어 왔다. 원칙과 규범에 충실한 사람보다는 인정받고 의리있는 사람들이 존경받는 풍토가 은근히 조성되었다. 인권을 탄압하고 국민을 수탈한 사람이지만 부

집단문화는 인권보호와 민주화의 암세포로 변질되었다.

모에게 효도하고 친구에게 의리를 지키고 아랫사람에게 인정 많은 사람들이라며 추켜세워졌다. 폭력에 대한 비난보다는 주먹세계의 의리가 유리적인 것으로 묘사되는 실정이었다. 더욱이 우리사회의 지배이데올로기는 은근히 이러한 소집단의 규범을 버리고 대의를 택하는 사람들을 멸시해왔다. 정의와 원칙을 위해 집단의 규범을 일탈한 사람들에게는 "변질자"라는 낙인이 찍혔다.

이제는 이러한 집단문화가 소극적인 집단이익보호의 차원을 넘어 집단이익

의 확장으로 변져가고 있다. 몇몇 부류의 집단들이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배분하며 공존하고 있다. 정부를 운영 하겠다며 대통령 후보로 나선 사람들이 의지하는 인물들은 그와 정치적인 이념을 같이 하거나 정책수행능력이 검증된 사람들이 아니라 친척, 제자, 학교동창, 고향친구, 심지어 고시원 동기생들이다.

이러한 집단들이 우리사회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주도세력으로서 자리를 잡고 자신들이 장악한 매스 미디어를 통해 변질된 집단문화를 우리사회의 지배이데올로기로 정착시키고 있다. 지배이데올로기에 현혹된 사람들은 그 허울을 벗기고 왜곡된 집단 문화를 깨뜨리기 보다는 기를 쓰고 그 집단 속으로 들어가려고 발버둥치고 있는 것이다. 부모들이 기를 쓰고 자식들을 대학에 보내려는 것도 이러한 현상중의 하나이다. 개인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해주는 사회적인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혈연, 지연, 학연을 동원해 그 방패막이로 삼아왔다. 그러나 우리의 집단문화는 인권보호와 민주화에 치명적인 암세포로 변질되고 말았다.

인권과 집단은 원래 궁합이 잘 맞지 않는 것이다. 개인의 권리는 그가 속한 집단과는 무관하게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인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사회가 되면 혈연, 지연, 학연에 의지하지 않아도 편안하고 떳떳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될 것이다.

.....주요 공판 안내

- ▶ 23일 (화)
 - 김태윤 (국보법) 선고 - 오경만 (한총련, 국보법 찬양·고무 등) 선고
 - 김광수 (한총련, 국보법 찬양·고무 등) 속행
 - 민경우·이천재·이종린·나창순 (범민련, 국보법 등) 신건 - 이상 오후 2시, 311호, 합의 21부
 - 유덕상외5 (임무방해 등) 오후 2시, 317호, 3단독, 속행
 - 권영길 (일반교통방해 등) 오후 2시30분, 317호, 3단독, 속행
 - 홍성이 (한총련, 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 10시, 319호, 합의23부, 속행
 - 원진욱 (한총련,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오전 10시, 319호, 합의23부, 신건
 - 장윤영 (국보법) 오전 10시, 522호, 8단독, 속행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 rights(천,하) · E-mail: rights@interpia.net · http://www.interpia.net/~rights

1997년 9월 24 일(수)

제 971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산재 은폐·강제치료 종결 우려 민주노총 등, 산재보험 민영화 반대

인권영화제, 흥익대 개최 기독교회관 상영 취소

한국 사회에서 의료·건강권의 문제는 아직 제대로 사회쟁점으로 떠오르지 못하고 있다. 다만 원진레이온 사태 등 사회에 충격을 몰고온 대형 산재사건 등을 경험하며, 노동자의 산재문제에 대한 논의는 상당한 진척을 가져온 상황이다.

그러나 지난해 8월 재경원 주치의 경제인 간담회를 통해 산재보험의 민영화 도입이 논의되면서, 노동자의 건강권 문제는 새로운 위기상황을 맞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노총은 산재보험 민영화 방안을 저지하기 위해 23일 종로성당에서 토론회를 가졌다.

구조신청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도 지적했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제12조(건강권)는 "1. 가맹국은 누구에게나 성취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신체 및 정신 건강을 누릴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2. (d)병에 걸렸을 경우 누구나 의료와 의학적 배려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의 창출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정부 역시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에 걸맞게 국민건강권의 보장을 위한 노력을 더욱 경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산재보험 민영화의 문제점

토론자들은 산재보험 민영화가 가져다 줄 다양한 문제점들을 열거해 나갔다. 우선 민영화는 경쟁체제의 도입에 따라 각 민간보험회사별로 보상내용과 영세기업 노동자 간의 삶의 질 차이 수준의 다양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대기업 노동자 확대 △영세사업장의 부담 가중 △산재 인정범위의 축소 △장기소송에 따른 노동자의 건강악화 등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되었다.

또한 △산재노동자들의 재화에 적극적 투자를 하지 않고 노동자들에 대한 조기퇴원 및 강제치료종결 등의 문제가 심화될 것이며 △치료와 재활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산재발생을 은폐하는 경우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노동자의 건강권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되었다. 토론자들은 현행 보험제도에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해 적극적인 이의제기와

제2회 인권영화제의 상영장소로 예정됐던 기독교연합회관측이 결국 상영장소의 대관을 불허했다. 이에 따라 영화제는 오는 27일부터 10월 4일까지 흥익대에서만 상영된다.

기독교연합회관측 한 관계자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0일 연합회관을 두 차례 방문해 인권영화제측에 상영장소를 대관하지 말 것을 요청하고 돌아갔다. 이날 경찰은 연합회관측의 대관을 막기 위해 영화제 관련법규까지 들고 찾아갔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흥익대측에 대해서도 계속 '원천봉쇄' 방침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지만, 영화제측은 예정대로 흥익대에서 영화제를 치른다는 입장이다.

만화사랑방



“시민운동과의 연대 가능성 많다” 서울대 동아리, 인권운동 심포 개최

인권운동의 방향을 정립하고 학생운동진영과 인권운동단체 간의 연대를 모색하기 위한 '인권운동 심포지움'이 서울대 법대 인권동아리 '사람세상'의 주관으로 23일 서울대 법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렸다. 이날 심포에는 인권운동사랑방, 민변, 국제 엠네스티, 문화정치유토피안, 인권운동대학생연대, 21세기진보학생연합, 대장정학생연합 등이 참여했다.

먼저 현정세를 바라보는 토론자들의 시각은 대체로 "5·6공 때보다 더하면 더하지 나아진 게 없을 정도로 인권탄압이 심각하다"는 것이었다. 그 근거로 김도형 변호사(민변)는 시국사법이 증가하고 국가보안법이 남발되는 현상을 들었다.

이런 현실하에 인권운동이 어떤 의의와 성격을 지니는가에 있어 사회단체들은 구체적으로 접근한 반면, 학생단체들은 다소 추상적으로 접근하는 데 그쳤다.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사무국장은 인권운동을 민중의 이익을 옹호하는 운동으로 정의하면서 "우리나라 현실상 인권운동이 삶의 질을 강조하는 사회권보다 자유권 옹호에 더 치중될 수밖에 없지만, 인권운동이 각종 시민운동과의 연대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자본주의 모순을 해결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완호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사무국장도 "국제적 인권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개별국가의 인권탄압을 물리력을 동원해 막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동의했다. 그러나 학생들은 주로 이데올로기에 기반했던 기존학생운동의 문제점을 타파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로서, 대중의 보편적인 관심을 끌 수 있는 인권운동이 의의가 있다는 주장을 폈다.

.....주요 공판 안내

- ▶ 24일(수) 권정현(한총련, 국보법) 오후4시, 319호, 합의22부, 신건 유규하(국보법) 오전 10시, 421호, 합의3부, 신건
- ▶ 25일(목) 최영철(한총련,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오전10시, 319호, 합의23부, 선고 김진성(국보법) 오전 10시, 523호, 7단독, 선고 함운경(국보법 불고지) 오전 10시, 525호, 10단독, 선고
- ▶ 26일(금) 현준희(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오전 11시, 317호, 9단독, 속행 유병서·전은영외3(한총련) 오전10시 319호 합의22부 선고 오진석 외8(국보법) 오후 2시, 319호, 합의22부, 속행 윤석진(국보법) 오후 3시 30분, 425호, 합의5부, 신건 이교관 외1 오전 11시, 525호, 10단독, 속행

인력부 정유진(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주한미군 문제, 상식으로 접근해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정재현) '제5회 시민인권상'이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에게 주어졌다.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정유진 사무국장을 만났다.

- 93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상, 95년 불교인권위원회 인권상 수상에 이어, 전우설 공동대표가 96년 12월 10일 인권선언일에 법무부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많은 상을 받았는데 이번 시민인권상을 받는 소감은

= 운동본부는 '미군범죄, 피해사례, 한미행정협정, 이영역만을 맡아 일하고 있다. 이러한 전문화된 활동은 상대적으로 다양한 일을 하는 단체들에 비해 눈에 띄는 것 같다. 고생하며 많은 일하는 여러 단체들에게 미안하다.

- 일을 하면서 힘든 부분을 얘기한다면

= 주한미군 문제를 다룬다는 것 자체가 분단된 상황에서 제한이 많고 하기도 힘든 일이다. 미군기지 환경오염이나 미군범죄 문제를 더 캐고 들려면 '군사기밀' 운운하며 터부시하기 때문이다. 마치 금기에 도전하는 일과 같다. 또 이 문제는 반미주의나 친북세력으로 인해든지 물고갈 부담감마저 안고 있는데, 이처럼 안보이데올로기와 연결된 민감한 사안이기도 하다.

- 또다른 어려움은 없는가

= 미군범죄 결과나 피해사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은 물론 피해자로부터 "너희가 뭘데 그러냐"는 항의를 종종 듣는다. 실무자인 우리들은 신분보장이 안된 상태에서 사건을 캐고든다는 것이 어렵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자신의 일인데도 그 결과를 알려고 하지 않고, 가해자 재판에도 거의 가지 않는데, 직접 가보지 않으면 재판결과를 확인조차 할 수 없다.

- 피해자들이 왜 소극적이고 무관심하다고 생각하는가

= 패배감이 크기 때문이다. 미군문제로 관에 얘기해봤자라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물론 배상은 거의 된 적이 없고, 어렵게 배상판결을 받더라도 미군측이 불이행할 경우 강제조항이 없는 상황이다. 이는 바로 한미행정협정의 문제점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생업까지 핑계치고 나서려하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지 않은가. 또 기지촌에서는 미군들로부터 보복당할 것이 무서워서 재판을 하지 않으려 한다.

- 상금 5백만 원은 어디에 쓸 생각인가

= 상금이 없었다면 잔고는 60만원뿐이었다. 상금은 10월28일 가질 '주한미군범죄 희생자 추모제' 행사비용과 행사당일 「미군범죄백서」 출판비로 쓸 예정이다.

-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은

= 김영삼 정부들어 세계화의 허구 아래 많은 것을 잃었다고 생각한다. 이중에서도 '민족'이라는 개념은 세계화의 구호 속에 사라지거나, 진부한 개념으로 여기게 된 경향이 있다. 민족이라는 개념과 함께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왜 미군은 반세기가 넘도록 온갖 특혜를 받아가며 이 땅에 주둔하는 것일까 등등.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전.하) ·E-mail:rights@interpia.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7년 9월 25 일(목)

제 972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문민정부 양심수 3,775명

민가협 목요집회 오늘 200회

'양심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민가협 목요집회'가 오늘로 2백회를 맞았다. 김영삼 정부 첫해인 93년 9월23일 시작된 목요집회가 만 4년을 넘어서도록 지속된 것 자체가 우리 인권현실을 말해주는 셈이다.

당시 민가협 회원들은 "올 겨울이 가기 전에 늦어도 이번 성탄절에는 양심수가 풀려날 것이라 믿고 12월24일을 양심수 전원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의 날로 만들기 위해 매주 목요집회를 연다"고 밝혔다(인권하루소식 93년 9월 24일자).

그러나, 93년 연말이면 끝나라라 여겼던 민가협 목요집회가 1백회를 넘어 2백회에 이른 지금까지도 끝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지금도 감옥에는 40년째 구금중인 우용각(69) 씨를 비롯해 20년 이상 복역중인 장기수가 20여 명에 달하며, 전·노 정권에 저항한 이유로 풀려간 5, 6공 양심수 등 9백여 명의 양심수가 갇혀 있다. 또한 김영삼 정부 들어서도 양심수는 늘어나기만 했다. 민가협이 밝힌 바에 따르면 8월1일 현재 김영삼 정권 하에서 구속된 양심수는 무려 3천8백여 명에 이르

며, 올해 양심수는 9백80명이다. 이중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있는 양심수는 5백10명으로 무려 52%를 차지했다.

세계최장기수 김선명 씨 석방

민가협 채은아 간사는 "꼭 목요집회의 성과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45년 세계최장기수 김선명'을 목요집회를 통해 집중적으로 알려졌고, 국내외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이것이 95년 김선명·안학섭·한장호 세 분 등이 석방되는 데 한 몫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목요집회는 외국인노동자를 포함한 노동자 인권문제, 고문피해자문제 등 인권과 관련된 사회문제를 힘닿는 데까지 알려내는 등 살아 있는 '인권 고발의 장'으로 역할해왔다.

목요집회를 찾아오는 시민들

4년을 즐기치게 진행해 오기까지는 어려움도 많았다.

목요집회에는 매회마다 2-3명의 피해자들이 나와 피해 사례를 고발하는데, 암울한 사회분위기에서 자신의 피해

사례를 많은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밝힌다는 것은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었다. 더욱이 피해 사실을 폭로함으로써 '또다른 피해가 있지 않을까'하는 두려움으로 결국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한 경우도 있다고 한다.

또다른 어려움은 목요집회를 이끌어온 50, 60대 민가협 어머니들의 건강 문제이다. 햇수로 5년째 접어드는데 매주 집회를 갖는다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었다. 또 그동안 양심수 석방의 조짐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기만한 상황은 지천 몸을 더욱 힘들게 하는 한 요소이기도 하다.

어려운 만큼이나 고마움과 보람도 크다. 채은아 씨에게 있어 가장 감동적으로 남아 있는 집회는 94년 6월 아르헨티나 '5월광장어머니회' 어머니들과 함께한 목요집회였다. 지구의 끝과 끝에서 비슷하게 싸우는 한국의 어머니와 아르헨티나의 어머니들은 처음엔 낯설어했지만 몇 번 만나가면서 서로 간에 뿌듯한 연대감을 느꼈다. 그리고 "매주 목요일이면 목요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일부러 탑골공원을 찾아오는 일반 시민들, 서울대 대동계 기간마다 열리는 장터 때문에 목요집회가 탑골공원에서 열리지 않는 날이면 어김없이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오늘 목요집회는 왜 안하냐'고 물어오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큰 힘"이라고 말했다.

김영삼 정권 출범이후
구속된 양심수 현황
(97. 8. 1 현재/민가협 제공)

년도	총구속자	국가보안법
93년	195	105
94년	775	389
95년	623	285
96년	1,269	494
97년	913	396
총계	3,775	1,669

제2회 인권영화제 D-2일

제2회 인권영화제는 홍익대학교에서만 개최됩니다. 영화제 홍보작업 등을 위한 자원봉사자가 필요합니다. 개인후원(구좌당 1만원이상), 단체후원(구좌당 5만원이상)을 통해 인권영화제에 힘을 보태주시시오. 인권영화제는 여러분의 후원만으로 치루어집니다.

후원구좌: 국민은행 822-21-0276-824 농협 033-02-119388
제일은행 110-20-342272 (예금주 서준식)

청송감호소 인권유린과 맞선 출소자 MBC '시사매거진 2580' 28일 방영 예정

청송보호감호소의 인권유린행위에 맞선 한 출소자의 노력이 결실을 거두게 될까?

지난해 10월 청송감호소에서 출소한 윤치고(43) 씨는 감호소내에서 자신이 당한 폭행·고문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1년 가까이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윤 씨는 지난 92년 8월 청송감호소내 보안과 지하실에서 교도관들로부터 집단구타를 당해 앞니가 부러지는 등의 부상을 입었고, 93년 5월에도 소내 단식농성의 주모자로 지목돼 5시간 동안 구타를 당해 누굴 2대가 부러진 바 있다고 주장해 왔다. 또한 같은해 12월엔 20일간 잠안제우기와 가스총 위협 등을 당한 뒤, 1년간 독방에 감금됐다고 한다.

문제는 또 있었다. 윤 씨가 교도관들의 폭행을 검찰에 고발함으로써 사건이 법정으로 넘어갈 기미가 보이자, 교도관들이 문서를 조작하는 부정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윤 씨는 검찰로부터 무혐의 통보가 날아온 뒤 곧바로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으며, 이에 대해 교도관들이 재정신청취하서를 허위로 작성해 법원에 송부했다고 주장했다.

고도관, 재정신청취하서 허위작성 출소 뒤 각계를 찾아다니던 윤 씨의 노력 끝에 이 사안은 지난 2월 서울지방법원 사회 인권위원회의 정식 안건으로 올라갔으며, 인권위에서는 윤 씨의 주장 가운데 '재정 신청 취하서의 허위작성 여부'부터 조사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바 있다. 그러나, 인권위가 "윤 씨와 청송감호소측 견해가 서로 다르다"는 애매한 이유로 조사를 종결함에 따라 진상규명작업은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듯 했다.

그러나, 최근 재정 신청 취하서에 찍혀 있는 윤 씨의 지문이 조작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한국문서감정원은 "재정신청취하서에 있는 윤 씨의 지문(무인)이 다른 문서에 찍힌 무인을 떠다가

베껴낸 것이며, 필적도 윤 씨의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한국문서감정원 "지문 조작되었다" 그동안 진상조사활동을 펼쳐온 임영화 변호사는 "뻔히 드러날 사실(지문 날인 여부)에 대해서 윤 씨가 허위진술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지문을 베껴가면서까지 재정신청을 취하시키려 한 감호소측의 태도를 보아 의심은 더 강해진다"고 말했다. 또한 허위문서 작성여부가 관가름나는 대로, 교도관들의 독직폭행에 대한 제심 또는 재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혔다.

지난 81년 삼청교육대 출신자들을 수용하기 위해 설치됐던 청송보호감호소는 일반인들에겐 흉악범의 격리장소쯤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실제 감호소의 최대 수용자들은 절도범 등

속칭 '잡범'들로서, '재범 방지와 교화'라는 명목 아래 이종으로 형벌을 받는 피해자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윤치고 씨는 오는 26일 관련 교도관들을 허위공문서 작성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다. 또한, 윤 씨의 사건을 취재한 MBC 시사매거진 2580이 28일 이를 방영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송보호감호소의 인권 유린을 파헤치는 것은 이제 검찰의 몫으로 돌아가게 됐다.

행사와 동정

□ 참여연대 창립3주년 정기총회 및 기념행사

때: 27일(토) 오후 5시30분

곳: 천도교 중앙대교당

□ 21세기 신가정 생활개혁운동 시민포럼

때: 25일(목) 오후 2시

장소: 대구시 동아쇼핑 아트홀 8층

주최: 사단법인 대구여성의 전화

제2회 인권영화제 화제작 한국영화 2편

사랑해요

한국/전송일 감독/8분/컴퓨터2D애니메이션/컬러

양심수와 그 자녀들의 상처받은 동심을 소재로 한 작품. 양심수를 부모로 둔 어린이들이 직접 그린 그림들을 애니메이션으로 다시 표현했다. 내러티브는 없고 한 개 혹은 두 개의 그림들이 하나의 작은 에피소드로 이루어져, 다시 이것이 여러 개 모여 전체를 구성하고 있다. 에피소드와 에피소드는 한국 현대사에서 주요한 장면들이 이미지로 배치되어 다리 역할을 한다. 각 에피소드마다 통일성은 의도적으로 배제했다.

외투

한국/여균동 감독/12분/극영화

12년 전 풀려간 아들을 기다리는 어머니. 어머니의 방에는 젊은 시절 아들이 입던 낡은 외투가 걸려 있다. 어느 날 하루 동안 아들이 되겠다는 젊은이가 나타난다. 그는 어머니의 아들이 남기고 간 외투를 빌려 입고 하루 동안 아들이 된다. '하루 아들'과 어머니의 12년만의 짧고 깊은 해후는 부추부추, 김치찌개, 어머니의 새안경과 같은 매개로 가슴저리게 다가온다.

다큐멘터리적인 허구, 허구적인 다큐멘터리인 <외투>는 12분의 짧은 영화이지만 완성되기까지는 꼬박 45일이 걸렸다. 민가협(여)의 여덟 번째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을 위해 만들어진 이 영화는 여균동 감독을 비롯해 많은 충무로인 스태프들이 자원봉사로 만들어낸 35mm '인권영화'이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interpia.net · http://www.interpia.net/~rights

1997년 9월 26 일(금)

제 973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한국논단』에 손해배상청구 민변·전국연합 등, "명예훼손" 이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등 4개 사회단체들이 24일 (주)한국논단과 월간 『한국논단』의 발행인 이도형 씨 및 전월영 기자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도형 씨는 『한국논단』 97년 2월호에서 「노동운동인가, 노동당운동인가?」라는 글을 통해 "...이들의 기본구도가 궁극적으로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국민이 정부를 불신케하여 정부를 전복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노동운동이 아니라 북한의 조선노동당의 이익을 위한 「노동당운동」을 전개하고 있음이 분명하다"(21쪽-22쪽)고 했으며, 전원영 기자는 97년 3월호 「일부 좌익노조 호화생활 해부」란 기사를 통해 "...김일성의 '교시'와 '유훈'에 충실하고 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정하며 이를 뒤집어 엮기 위한 구실로 노동운동을 악용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 ...이들은 전국연합을 비롯...참여연대...등 45개 단체인데, 그 대부분이 좌익이며 사회주의적 노동당을 지향하는 정치투쟁을 주도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또한 97년 8월호의 「공산당이 활개치는 나라」에서는 "전국연합은 94년 3월에 결성된 북한당국의 '출소 공산주의자 구원대책위'의 전위대로서, 각종 탄원서를 제출하고 성명을 발표하는 등 친북 이적활동을 서슴지 않고 있다. ...전국연합의 인권운동사랑방은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말>지나 컴퓨터통신 등을 통해 공산주의자들의 생활상을 수시로 게재, 그들이 마치 부당하게 복역한 것처럼 왜곡하거나 사망자를 '애국자'로 미화하기도 한다. 예컨대 <말>지 97년 5월호에는

출소 공산주의자 권양섭이 최근 사망하자 '평생 조국을 위해 헌신했다'고 미화한 것이 그것이다"고 주장했다.

소송대리인 조광희·백승현 변호사 등은 "원고들이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그 명예를 훼손당했고 국민적 신뢰도가 저하되는 피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은 원고들이 입은 손해에 대해 각각 5천만원씩을 배상하고, 원고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공고문을 게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보적 사회운동진영에 대한 흑색선전과 관련, 지난 5월엔 '주사파' 발언의 박홍(전 서강대 총장) 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7천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따라서 보수언론의 대 표격인 『한국논단』에게도 유사한 판결이 내려질지 관심을 끈다.

하루소식 구독료 납부바랍니다

<사회적 소수집단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 토론회> "이제 동성애에 대해 이야기 하자"

25일 오후 6시 이화여자대학교 가정관 319호실. 30여 명의 젊은이들이 진지한 자세로 한 편의 영화를 감상하고 있다. 작품은 학교 내의 동성애교육 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 「그것은 기본(It's elementary)」. 지난 19일 개최가 무산됐던 제1회 서울 퀴어영화제의 상영예정작 가운데 하나였다.

화면에선 동성애를 주제로 선생님과 학생들 사이에 대화가 끊임없이 이어진다. 초등학교 어린이부터 사춘기 중학생에 이르기까지, 학생들의 의견은 천차만별이다. 선생님들은 특별히 무언가를 가르치려 하지 않고, 다만 아이들로부터 나오는 이야기들을 조심스레 정리해 준다. 그리고 술한 대화와 토론을 통해, 결론은 "그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며, 차별은 부당하다"는 것으로 모아지고 있었다.

평범 객석이 말해주듯 이날 상영장의 분위기는 무척 초라했다. 영화상영에 앞서 열린 '표현의 자유에 관한 토론회' 때널로도 퀴어영화제측 관계자와 독립영화단체 관계자 등 단 2명만이 참석했을 뿐이다. 그러나, 다수의 무관심 속에 어려운 싸움을 진행하는 가운데도 동성애자들의 의지는 굳건하다. 퀴어영화제 준비위측은 이날 이화여대를 시작으로 10월초까지 각 대학별 영화상영과 토론회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 발표자였던 서동진(퀴어영화제 집행위원) 씨는 말했다. "영화제의 무산은 '사실상의' 문제 이상의 것이다. 이제 물어보자. 동성애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동성애자들의 표현을 어느 정도까지 수용할 수 있을 것인지"

제2회 인권영화제 D-1일

장소는 홍익대입니다.

자원봉사자와 여러분의 후원을 계속 모집합니다.

후원구좌: 농협 033-02-119388

국민은행 822-21-0276-824

제일은행 110-20-342272

(예금주 서준식)

“간첩이라고 밝히면 무조건 신고해야”

함운경 씨 불고지 혐의 징역 8개월

서울형사지법 10단독(재판장 양승국)은 95년말 소위 '부여간첩' 김동식 씨를 만나고도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함운경(34) 씨에게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를 적용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 부분에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양승국 판사는 “간첩 김동식이 피고인을 만나 분명히 간첩이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김동식을 정보당국의 프락치로 의심하며, 신고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불고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남북이 대치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한번쯤 의심을 갖고 김동식을 신고했어야 했다”고 말했는데, 이는 누군가가 '내가 간첩이다'는 말만 해도 무조건 신고해야 불고지 혐의를 피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적표현물 혐의 무죄

반면, 이적표현물 소지 부분에 대해 재판부는 “서점에서 구입한 『인간 김정일, 수령 김정일』은 이적표현물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적표현물은 국가의 존립안정을 위협하는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이적표현물이라도 피고인에게 이적의 목적이 없다면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함운경 씨는 이날 재판 결과에 대해 “간첩 김동식을 만났고, 그가 간첩이라고 밝힌 사실을 본인이 인정했다는 재판부의 판결에 황당할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시 북한을 잘 알고 있다는 30대 초반의 남자(김동식)를 만난 것은 사실이나, 그가 간첩인 줄은 몰랐다”고 강조했다. 함운경 씨는 재판 결과에 불복, 항소할 작정이다.

김진성 씨, 징역1년 선고

이적표현물 소지, 편의제공 혐의

날치기로 개정된 안기부법에 의한 첫 구속자였던 김진성(32·하남 「통일을 여는 사람들」 대표, 외대용인캠퍼스 86학번) 씨 선고재판이 25일 오전 10시 서울형사지법 7단독(재판장 박승문) 심리로 열렸다. 김 씨는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검찰의 기소과 정에서 이적표현물 소지 및 편의제공 혐의만 적용받았다.

박승문 판사는 이적표현물 소지와 편의제공 부분을 인정하며 김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또한 이적표현물 소지 부분에 대해 “김 씨가 『대중운동세미나』 『민족해방의 사상과 이론』 『근대조선역사』 등 3권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그가 운영하는 풍물방에서 압수한 것인 만큼 집주인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인권하루소식 8월28일자 참조>

제2회 인권영화제 - '여성' 영화

바이 바이 바브시카 Bye Bye Babushka

미국/레베카 프레그 감독/75분/다큐멘터리/컬러

이 영화는 러시아 집단농장에서 일하는 늙은 과부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소련 사회주의의 모습을 보여 준다. 그러나 주제는 사회주의에 있지 않고 사회주의에서의 여성인권이다.

우리에게 모든 길과 직업이 열려 있던 과거 레닌의 혁명에 아직도 감동을 멈추지 않고 있는 할머니가 있는가 하면, 남편이 사하로프의 추방에 반대하는 편지를 쓴 이유로 10년형을 선고받고 감옥에서 숨진 할머니의 소감도 있다.

여성들은 그 시대 그 상황 중에서 가장 힘든 곳에서 일을 하고 있다. 러시아에서의 공산주의 건설기에 여성의 '사랑의 정'은 우아하지 못하고 매숙거리며 반인륜적인 것이라고 기질을 바꾸고자 하였으나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하지만 영화는 '바바 마리나'라는 한 할머니의 죽음 앞에서 그녀가 많은 사람들에게 베푼 사랑을 되새기게 한다. 공산주의와 함께 마리나마저 떠나 보낸 이곳 바바리노의 여성들은 그들만이 지켜온 '사랑의 정'을 키울 수 있는 새로운 사회를 꿈꾸는 것이다. 그 사회의 이름이 사회주의나 자본주의나 하는 것은 결코 중요한 사실이 아니다.

갈릴리에서의 결혼 Noce En Galilee

프랑스·팔레스타인/1987/미셸 클레이피 감독/116분/극영화/컬러

<갈릴리에서의 결혼>은 정치에서 일상의 관습에 이르기까지 복잡하게 맞물린 인간사의 모습을 섬세하게 짚어낸 영화다.

이스라엘군의 통제 아래 있는 한 팔레스타인 마을에서 성대한 결혼식이 벌어진다. 이스라엘에 점령당한 땅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팽팽한 긴장감에 더해, 결혼식에서마저 정치적 선택의 문제가 끼여든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다. 새 신랑은 권위적인 아버지의 위세에 눌려지내는 심각한 자신에 대해 갈등이 많다. 신부는 신부대로 순결을 명여라 여기는 낡은 관습에 대해 불만이다. 그러니까 이 영화에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남자와 여자, 어른과 청년 세대 등 여러 층위로 얽힌 갈등이 한꺼번에 숨어 있는 것이다.

<갈릴리에서의 결혼>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을 딱딱한 큰 주제로 풀어나가는 게 아니라 일상의 문제를 통해 바라보면서 조금 다른 시선을 보여준다. 일상에서 가장 침예한 정치적 문제들이 충돌하는 모습을 따라가는 이 영화의 풍경은 자세를 바로 잡고 생각해야 할 거리를 던져주지만 그래도 결혼식 잔치를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은 따뜻하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interpia.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7년 9월 27 일(토)

제 974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제2회 인권영화제 개막

9월27일-10월4일 홍익대학교

제2회 인권영화제가 오늘 오후 2시 홍익대학교 와우관에서 개막식을 갖고, 8일간의 일정에 들어간다.

개막작으로 선주민(원주민)과 백인간의 갈등을 그린 볼리비아 우카마우 영상집단의 <새의 노래>(극영화)가 선정됐으며, 10월 4일 폐막작 <갈릴리에서의 결혼>에 이르기까지 세계 13개국 24편의 영화가 2회씩 상영된다. 그리고 지난해 제1회 인권영화제의 화제작이었던 <하비밀크의 시대>(유령을 부르며)도 29일 앵콜상영될 예정이다.

인권교육용 단편영화 5편 제작상영

이번 인권영화제에는 관객들을 위한 다양한 부대행사도 준비되고 있다. 우선, 관객들은 폐회 영화상영 전에 5-6분짜리 인권교육용 단편영화를 관람할 수 있게 된다. 인권운동사랑방과

독립영화인들이 공동으로 제작한 이 영화는 국가보안법·표현의 자유·공권력에 의한 폭력·성폭력·노동자의 인권 등 다섯 가지 인권주제별로 문민정부의 인권상황을 보여주는 작품들이다. 이 가운데 성폭력을 주제로 한 작품은 극영화로 제작됐다.

28일 <쇼아> 강연회

또한 <쇼아> 강연회가 28일(일) 오후 9시 조형관(Z동)에서 이상민(외국어대 불문과) 교수에 의해 진행되고, 10월 3일 오후 4시30분(조형관)엔 플로드 란쯔만 감독과 서준식 인권영화제 집행위원장 간의 인터뷰 화면이 상영된다. <쇼아>는 제2회 인권영화제에서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작품으로서 유대인 학살에 관한 9시간30분짜리 장편 다큐멘터리 영화다.

그밖에, 인권사진전과 판화전이 영화제 기간 내내 상영관 주변에서 진행되며, 노천카페가 마련된다.

한편, 개막전날인 26일 홍익대 학생처측은 “영화제 상영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영화제측에 통보했다. 그러나, 홍익대 총학생회와 영화제 준비위측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임”을 확인했다.

성폭력피해여성 위한 프로그램 가족과 성 상담소

여성민우회 ‘가족과 성 상담소’는 오는 10월 2일부터 8차례에 걸쳐 성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집단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하고,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대상은 만 18세 이상 성인여성으로 선착순 10명 이내이며, 신청은 전화나 팩스로 받는다.

(전화:646-8858~9, 팩스:646-8871)

<하루소식> 9월 구독료 납부

지문번호 7618848

제2회 인권영화제 상영일정표(9월 27일-29일)

	와우관	제2공학관 0동	조형관 Z동
27일(토)	2:00 개막식 3:00 새의 노래 6:00 천황의 군대는 진군한다 8:10 사랑해요/외투 8:30 바이바이 바브시카	3:00 양도살자 5:00 르완다 대학살 8:30 퓨마의 딸	5:00 쇼아 1
28일(일)	2:00 호남호녀 4:30 명성, 6일의 기록 6:30 히틀러와 아브라함 8:00 루치아	4:30 델타포스 6:30 레드헌트 8:00 유토피아를 꿈꾸는 사람들	2:00 갈릴리에서의 결혼 4:30 쇼아 2 9:00 쇼아강연회
29일(월)		5:00 유령을 부르며 7:00 하비밀크의 시대	5:00 어떤 쿠바 난민들 7:00 시가라키에서 불어오는 바람

고 김준배씨 검거책임자 처벌 경찰폭력 추방결의대회

경찰의 검거 과정에서 숨진 김준배(27·한총련 투쟁국장) 씨 사인에 대한 의혹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26일 오후 2시 종로공원에서 '고 김준배 학생추모와 경찰폭력 추방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는 전국연합·민가협·천주교인권위·NCC 인권위 등 4개 사회단체 공동주최로 마련되었으며,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도 주최단체 회원들을 비롯해 한총련 소속 대학생 등 1백여 명이 참석했다.

비이성적 학생운동탄압 규탄

이날 집회에서는 김준배 씨의 죽음에 대한 의혹 제기와 함께 학생운동 탄압에 대한 규탄이 이어졌다.

집회 참가자들은 "고 김준배 씨의 죽음은 단순한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그동안 법적 근거도 없이 한총련에 대한 인위적이고 강압적인 해체를 기도 하였던 공안당국의 무리한 탄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실제로 학생운동에 대한 탄압은 상식을 넘어서고 있다"며, "시험을 보고 있는 총학생회 간부를 연행하기 위해 교수실 문을 부수면서 무단침입하는가 하면, 강의받는 학생들을 학생처로 피어내어 구속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정기(전국 유가협) 상임의장은 "김준배 씨의 부검 결과 갈비뼈가 부러져 살을 뚫고 나왔으며, 내장이 파열됐고 피가 4백 리터나 고여 있는 등 도저히 4층에서 떨어져 죽은 것이라 볼 수 없다"며 죽음에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또 "광주에서 만난 김준배 씨의 아버지는 아들의 사인을 반드시 밝혀내겠다는 각오를 밝히고 있다"며 억울한 젊은이의 사인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집회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반교육적이고 비이성적인 학생운동탄압 중단 △고 김준배 학생 검거 책임자 처벌 △고 김준배 학생 추락사에 대한 공식사과 등을 요구했다.

제2회 인권영화제 개막작 <새의 노래>

볼리비아/ 1994/ 우카마우 집단/ 117분/ 극영화/ 컬러

볼리비아의 우카마우 집단은 산히네스 감독을 중심으로 60년대부터 볼리비아의 독립영화를 이끌어왔던 대표적인 영화집단이다. 새로운 작품 <새의 노래>는 60, 70년대에 이룩했던 그들의 성과물, 즉 반제국주의, 반독재의 연장 선상에서 특유의 민중영화를 선보이고 있다. 과거 우카마우 작업의 특이성은 볼리비아식 창작 방식이란 것인데 볼리비아 민중의 시각을 통해 민중의 삶을 재현해낸다는 것이었다.

볼리비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토착원주민과 백인외지인과의 뿌리 깊은 갈등이다. 볼리비아인 전체의 80% 이상이 혼혈 토착 원주민들(인디오)이고 그들은 대부분 가난한 계층에 속한다. 이 영화에서도 도시에서 온 백인 영화인과 원주민 사이의 갈등은 영화속 영화의 갈등인 스페인군대와 잉카인들과의 갈등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 산히네스 감독은 과거와 현재에 벌어지는 두 개의 이야기를 중첩시킨다.

관객은 현재와 과거가 하나의 이야기 속에서 전개되는 것을 보면서 어디까지가 과거이고 어디까지가 현재인지, 무엇이 영화이고 무엇이 현실인지를 분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건 감독의

분명한 의도이다.

영화속 영화에 그려진 스페인의 원주민 정복의 역사는 관객에게 객관적으로 역사적 사실을 보게 만들고 동시에 우리가 영화를 본다는 사실을 각성시킨다. 영화 만들기, 영화보기란 무엇인가에 대한 성찰적 자각은 근대 영화 감독들의 작업 속에서 두드러지는 한 방식이다. 압바스 키아로스타미 감독의 <올리브 나무 사이로>같은 경우가 그 대표적인 경우다.

이러한 성찰적 방식은 영화와 현실의 본질적인 거리감을 자각하면서 동시에 영화가 현실의 문제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다는 강한 사회의식에서 비롯된 미학이기도 하다. 영화적 행위가 그대로 현실의 진행되는 일부분이라는 인식으로서 결국 영화적 사고는 현실적 사고의 범주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원주민이 벌이는 새들의 축제에서 백인 영화감독은 새의 노래를 녹음하는데 실패한다. 새의 노래를 들어봐라, 하고 말하는 원주민들의 진의는 무엇인가? 그건 백인이 일부러 외면했거나 혹은 들을 수 없었던 원주민의 '낮은 목소리'를 들으라는 소리가 아닌가?

만화사랑방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interpia.net · http://www.interpia.net/~rights

1997년 9월 27 일(토)

호외 1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호외 1- 제2회 인권영화제 상황속보

학교측 상영장 봉쇄, 경찰병력 배치 영화제 주최측 "기필코 성사"

사전심의 문제로 상영 장소를 구하는 데 난항을 겪었던 제2회 인권영화제가 또 다시 위협을 받고 있다.

홍익대측은 상영 하루 전인 26일 오전 서준식 영화제 집행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불허 입장을 공문으로 전달했다. 이날 오후에는 "강행할 경우 학교 직원을 동원에 학교 출입을 막을 것이며, 상영장(와우관, 0동, 2동) 세 곳을 봉쇄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영화제 상영 당일인 27일 오전 11시경, 이미 경찰 2개 중대 병력이 홍익대 정문 양옆으로 배치되었으며, 한때 영화제 물품 반입을 통제하기도 했으나 홍익대 총학생회측의 반발로 무산되었다.

한편 학교측은 통보대로 상영관을 봉쇄시켰으며 단전 방침까지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제2회 인권영화제집행위측은 "최대한 인내심을 갖고 평화적 방법으로 사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면서 "어떠한 형태로든 인권영화제는 성사시킬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또한 오후 2시30분 현재 상영관인 와우관 앞에서 개막식이 진행되고 있다.

홍익대측의 이러한 강경한 입장은 사실상 당초 상영장소로 예정되었던 기독교연합회관측이 경찰의 압력으로 취소시킨 것과 마찬가지로 공권력의 압력에 굴복한 것으로 짐작되고 있다. 이미 홍익대총학생회측은 영화제와 관련해 경찰, 안기부, 문화체육부, 구청측의 압력을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지금 인권영화제가 열리는 홍익대학교로 모여주십시오
인권영화제를 여러분의 힘으로 지켜주십시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interpia.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7년 9월 27 일(토)

호외 2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호외 2- 제2회 인권영화제 상황속보

홍익대서 성황리 개최 학교측 상영 장소 봉쇄 · 전원차단

제2회 인권영화제가 정부당국과 학교측의 봉쇄에도 불구하고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다.

학교측이 상영관인 외우관을 폐쇄함에 따라 개막식은 상영관 앞마당에서 2시30분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개막식에는 제2회 인권영화제 조직위원 이영희(한양대 교수) 지은희(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김승훈(천주교 인권위원회 고문, 신부) 임기란(민가협 상임의장) 씨 등을 포함, 관객 5백여 명이 참석해 인권영화제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었다.

작품 상영은 당초 외우관과 제2공학관 0동에서 오후 3시부터 <새의 노래>와 <양도살자>를 각각 상영할 예정이었으나, 상영장소 봉쇄로 인해 영화제주최측은 학생회관 학생휴게실로 옮겨 상영준비에 들어갔다. 개막초대작인 블리비아 우카마우 집단의 <새의 노래>(극영화, 94년작)를 상영하려는 순간 학교측이 전원을 차단함으로써 영화상영은 일시 중단되었다. 하지만 전원공급 중단을 대비해 준비해간 발전기로 영화상영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영화제 집행위원회는 오후 4시 홍익대내에서 비상회의를 갖고, 이후 계획을 논의했다. 회의 결과, 이날 학생회관 휴게실과 학생회관 앞 벤치, 미술관 앞 벤치 등 3곳에서 하기로 결정했으며, 28일 일정은 변동이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관객들은 이미 발표된 상영일정에 맞춰 영화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상영영화는 학생회관에서 <새의 노래> <천황의 군대는 진군한다>를, 학생회관 앞에서 <미노루와 나>(퀴어영화제 상영예정작) <푸마의 딸>을, 미술관 앞에서 <쇼아 1>을 상영하고 있다.

제2회 인권영화제 집행위원 김해준(한국영화연구소 기획실장) 씨는 "이제껏 당국의 압력 및 불허조치에 영화제 등이 번번이 무산되었는데 더 이상 물러서서는 안된다. 이러한 이유로 이번 인권영화제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

◆ '표현의 자유' 탄압사건 일지 ◆

- 7월 11일: 공윤, 왕자웨이 감독의 <부에노스 아이레스>(해피 투게더) 수입금지
- 22일: ·장선우 감독의 <나쁜 영화> 한국영화로는 최초로 공윤의 '등급의' 판정
·서울지검 형사1부(윤종남 부장검사), <천국의 신화> 음란성·폭력성 혐의로 만화가 이현세 씨 소환조사
- 25일: '97 춘천만화축제 조직위가 입수한 북한 애니메이션 33편과 5백점 안팎의 출판만화가 공윤의 상영금지 결정으로 상영불가
- 29일: [표현의 자유수호를 위한 범민화인 비상대책위] 이현세 씨 검찰조사와 관련해 항의성명
- 30일: 개정 영화진흥법 입법예고, 사전심의 존속과 스크린 쿼터제 삭감 등과 관련해 영화계 크게 반발
- 31일: ·만화가 38명 정부의 만화탄압에 항의해 한 달간 절필선언
·삼성영상사업단 <제5원소> 임의삭제로 말썽 빛자 공윤에 재심 요청했으나 무산
- 8월 19일: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서울민주청년단체협의회 회지 <서울청년>에 대해 청소년유해간행물 결정통보
- 9월 19일: 제1회 서울퀴어영화제 강제무산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interpia.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7년 9월 29 일(월)

호외 3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27, 28일 2천5백여 명 인권영화제 관람 10월4일까지 인권영화제 계속

27일 개막 당일 홍익대학교 당국의 상영관 봉쇄, 전원 공급 차단과 더불어 학교 정문에 경찰 병력이 배치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27, 28일 양일간 제2회 인권영화제를 2천5백여 명이 관람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27, 28일 홍익대학교측은 상영관 봉쇄와 임시상영장소인 학생회관 건물 1층에 단전을 하는 강경한 태도로 일관했다. 심지어 정문에서 임시행사장인 학생회관에 이르는 길에는 가로등조차 꺼졌으며, 단전으로 화장실, 음료수자판기 등에 전원이 들어오지 않아 관람객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학교측과 영화제주최측과의 마찰은 없었다.

28일에는 <호남호녀>(후 샤오시엔 감독) <명성, 6일의 기록>(김동원 감독) 등에 많은 관람객이 몰렸으며, 애초 제2회 서울 다큐멘터리 영상제의 본선 출품작이었으나 사전심의 문제로 주최측에서 상영을 취소시켜버렸던 <레드 헌트>(조성봉 감독) 역시 많은 관심을 끌었다. 또한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들의 대량학살의 충격적 사실을 담은 9시간30분의 대장편 다큐멘터리 <쇼아>(플로르 랑즈만 감독)는 3부로 나뉘어 상영되고 있는데, 관람객들이 꾸준한 관심을 보였다.

인권영화제 집행위측은 29일부터 예정된 상영관 3곳과 야외상영장에서 상영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29일 상영일정표 ☞

제2공학관(0동)

오후 5시 유령을 부르며
오후 7시 하비밀크의 시대

조형관(2동)

오후5시 어떤 쿠바 난민들
오후7시 시가라키에서 불어오는 바람

* 야외상영관 작품 미정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interpia.net • http://www.interpia.net/~rights

1997년 9월 30 일(화)

호외 4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제2회 인권영화제 긴급상황 속보

30일 오후 4시 압수수색 영장 발급

29일 인권영화제 집행위원장 서준식 씨에 대한 흥익대학교 당국의 고소조치와 시설물보호 요청에 이어 30일 오후 4시 인권영화제 상영을 막기 위해 흥익대학교에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다.

27일 개막 당일부터 30일 현재 흥익대측은 상영관 폐쇄, 학교 정문앞 검문검색, 전원공급 중단, 영화제 집행위원장 고소 등 '사전심의'를 이유로 인권영화제를 무산시키기 위한 강경한 조치를 취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회 인권영화제 주최측은 "어디서건, 어떤 형태든 인권영화제를 강행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0일 인권영화제는 제2공학관 0동과 미술관 앞 계단에서 인권영화제는 예정대로 열리고 있다. 그러나 이날 오전부터 계속되는 정문 앞 불심검문으로 인권영화제를 찾는 관람객 수는 저조한 편이다. <천황의 군대는 진군한다> <브라질 예비뉴>가 상영되고 있는 오후 7시40분 현재 모두 4백50여 명이 관람하고 있는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다.

현재 제2회 인권영화제 집행위원회가 현장에서 긴급소집되었으며, 이후 향방을 논의 중이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interpia.net • http://www.interpia.net/~rights

1997년 9월 30 일(화)

제 975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흥익대, 서준식 씨 고소

경찰에 시설 보호 요청...영화제측, "행사 고수"

제2회 인권영화제 개최와 관련, 흥익대측이 29일 서준식 인권영화제 집행위원장을 고소하고, 경찰에 시설물보호를 요청했다. 학교 관계자는 "학교에서 불허방첩을 밝혔는데도 행사를 강행하고 있기 때문에 고소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오후부터 경찰은 전철역에서 흥익대 정문에 이르기까지 곳곳에서 검문을 벌여, 타학교 학생들의 출입을 봉쇄했다.

그러나, 영화제 주최측은 이러한 압력에도 불구하고 영화제를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4일까지 24편의 작품 모두를 상영할 예정이다.

한편, 27일 개막일부터 벌어진 학교측의 상영관 폐쇄와 단전조치에 따라 영화제 일정은 조금씩 변경되고 있다. 27, 28일 이틀간 학생회관 1층 휴게실과 야외계단에 스크린을 설치했던 주최측은 29일엔 제2공학관(0동)과 미술관 앞 야외객석(일명 톤다리 계단)에서 영화를 상영했다. 야외객석의 경우, 일몰시간 이후 상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초 상영시간인 오후 5시에서 한 시간 정도씩 늦춰져 영화가 상영되고 있다.

29일까지 인권영화제를 관람한 사람은 연인원 3천명 정도로서 지난해보다는 다소 적은 규모이다. 이는 상영장소가 협소하고, 경찰이 출입을 봉쇄한

데 따른 것이다.

<영화제 단신>

①...개막당일, 영화제 개최를 막으려는 학교당국의 노력은 거의 필사적. 와우관 등 3개 상영관의 출입문을 자물쇠로 꼼꼼히 걸어잠근 학교당국은 그 래도 안심이 안되었던지 수십명의 직원들을 동원해 행사장 주변을 감시했고, 오후 3시30분경 영화제 주최측이 행사장소를 학생회관으로 변경하자 이번엔 건물외 전원까지 내리는 등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모습. 또 오전부터 흥익대 주변에서는 장사진을 친 전경들의 '무력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②...학교측의 상영관 폐쇄와 전원 차단에도 불구하고 영화제 주최측은 성공리에 영화제의 막을 올렸는데, 이는 사전에 발전기와 스크린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 또 실내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관계로 야외에서 영화를 상영했지만, 이것이 가을밤의 정취와 어울려 관객들에겐 더욱 근사한 추억을 선사하기도.

③...29일 현재까지 최고의 인기작으로 떠오른 작품은 <천황의 군대는 진군한다>. 일제의 만행을 고발하는 문 제작이면서도 상영 내내 관객들의 박수와 폭소가 계속 이어졌다. 그밖에 <루치아>, <명성 6일의 기록> <호남호

너> 등도 감독의 명성에 걸맞게 호평을 받은 작품들.

④...영화제 최대의 화제작이었던 <쇼아>가 상영장의 악조건으로 인해 많은 관객을 만나지 못한 것은 영화제 초반까지 가장 아쉬운 대목. 한편, <쇼아>를 관람한 관객들은 앵콜상영 또는 대 여를 요구해 오기도.

⑤...영화제 주최측은 지난해 무산된 큐어영화제의 초대작 가운데 <미노루와 나>를 특별상영함으로써 '검열반대 및 표현의 자유 쟁취'를 위한 연대의지를 과시했다. 또한 큐어영화제 참석차 입국했던 나까다 도이치 감독은 인권영화제를 통해 관객과 대화의 시간을 갖게 되자 무척 흐뭇한 모습.

⑥...지난 4월 서울다큐멘터리 영상제에서 상영취소 파문을 겪었던 <레드헌트>는 언론을 통해 여러차례 '홍보'가 되었기 때문인지, 이번 영화제 상영장 가운데 최고의 '인구밀도'를 자랑.

김삼석 씨 30일 출소

'간첩' 조작, 4년 만기복역

93년 9월 소위 '남매간첩' 사건으로 구속된 김삼석(34) 씨가 4년만에 30일 대전교도소에서 만기출소한다.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 및 국가기밀 누설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삼석 씨에게 1심 재판부(재판장 김홍식)는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을, 항소심재판부(재판장 고현철, 주심 조병훈)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동생인 김은주 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 집행유예 5년을,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었다.

특히 이 사건과 관련, 94년 11월 독일 베를린에서 배인오(본명 백흥용, 전 남누리 영상 대표) 씨의 양심선언이 발표됨에 따라 사건이 조작되었음이 드러나기도 했다.

오늘의 인권영화 (흥익대학교)

	제2공학관 0동	미술관 앞 계단(톤다리계단)
30일(화)	5:00 브라질 예비뉴 7:30 명성 6일의 기록 9:30 델타포스	6:00 천황의 군대는 진군한다 8:30 루치아

제2회 인권영화제 화제작

<유토피아를 찾는 사람들 Hunters of Utopis>

아르헨티나/데이비드 발렌스타인 감독
145분/다큐멘터리/컬러

이 영화는 아르헨티나 현대 정치사의 최대 격동기라고 할 수 있는 1970년대, 정치·사회운동에 몸을 바친 33인의 진솔한 회고로 이루어져 있다. 블라우스타인 감독은 그 회고를 문서보존소에서 꺼내온 박력 넘치는 기록화면과 적절히 교차시킴으로써 우리 눈앞에 민주화투쟁의 파노라마를 펼쳐 보인다.

1970년대 초, 군사정권의 폭력정치에 저항하는 민중들의 피투성이의 항쟁, 73년의 민간정부 성립을 환영하는 민중의 열광, 그러나 민간정부의 앞날에 먹구름을 드리우는 좌파와 우파의 갈등을 거쳐 다시 1976년에 일어나는 군사 쿠데타는 아르헨티나에 바다 속과 같은 압축을 가져온다. 33인은 이런 일련의 과정을 차분한 목소리로 증언해준다.

거기에는 세계 곳곳을 군사정권이 지배하던 시대의 고난에 찬 민주화운동의 자화상이 있다. 다양한 운동가들의 정열과 회한, 고통과 희망이 화려하게 교차되는 민주화운동의 자화상이 있다.

보다 나은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고난의 시대에 몸을 바친 33인, 그들을 '유토피아를 찾는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매우 적절하다.

<어떤 쿠바 난민들 The Cuban Excludable>

쿠바/1994/에스텔라 브라보 감독/57분/다큐멘터리/컬러

80년대 초, 자유를 찾아, 많은 경우는 좀더 나은 생활이라는 소박한 꿈을 안고, 미국으로 간 쿠바 탈출자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소망이 모두 이뤄진 것은 아니다. 기회 자체를 원천봉쇄당했기 때문이다.

마리화나 소지, 절도, 술주정 등 상당히 악소한(?) 일탈 행위 때문에 급기야 '반사회적인 성향'을 지녔다는 극히 주관적이고 편견에 찬 판정을 받고 격리당하거나 심지어는 강제약물투여를 당하고 정신병자 취급까지 받게 된 사람들, 몇 개월의 형량을 다 채우고도 아무 근거없이 10년 이상 더 옥살이를 해야했던 사람들, 이들 수천 명의 쿠바인들은 탈출한 지 무려 15년 가량이 지난 90년대 중반 다시 쿠바로 추방되고 만다.

그뿐이 아니다. 미국의 방침이 바뀌면서 되도록 이민자를 줄이려는 이민국의 이민 불허판정을 받고 추방될 때를 기다리며 교도소에 수용된 사람들도 수천명이나 된다.

한때는 공산국가를 탈출한 영웅으로 쿠바인을 떠받들던 미국. 그들은 가난하거나 흑인인 쿠바인들에게 가한 부당한 차별대우, 심지어는 반인륜적인 가혹행위를 감추기 위해 이러저러한 핑계거리를 찾고 있다.

주간/인권/호/름

(97년 9월 22일부터 28일까지)

◆ 22일(월)
서울시, 남녀평등 촉진을 위해 여성관련 조례에 여성우대 조항을 신설하는 등 조례 개정작업 올해말까지 추진하기로/노동부,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퇴직금 우선변제' 조항과 관련, 노사관계 개혁위원회의 공익위원안을 토대로 개정안을 마련해 25일자로 입법예고/서울지방변호사회 '제5회 시민인권상' 주한미군법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수상

◆ 23일(화)
김영환 의원과 정통부 발표, 수사기관에서 올해 들어 지난 6월까지 한국통신 등에 요청해 실시한 통신감청 건수는 2천3백91건으로, 지난해 보다 2백30% 증가

◆ 24일(수)
한겨레신문사와 남북어린이 어깨동무, 북한어린이살리기 의약품 지원본부가 국민성금으로 마련한 어린이용기 초약품을 실은 선박이 북한으로 항해/동서증권, 업계 최대 규모인 직원 3백여 명에 대한 명예퇴직 실시

◆ 25일(목)
환경부, 울산반기 전국 9개 도시 4백35개 지점에서 야간 소음도 측정결과 모든 도시가 환경기준치인 55dB(데시벨) 초과/양심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민가협 목요집회 2백회 맞아/하남 통일을 여는 사람들 대표 김진성 씨 징역 1년에 집유 2년 선고/서울지법 형사10단독(양승국 판사), 함운경 씨에게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 적용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민변·참여연대·민주노총 등 <한국노동단>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손해배상 청구/BYC 전주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중국인 산업연수생 80여 명 임금인상과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이틀째 농성/전국자동차산업노조연맹과 전국민주택시노조연맹 소속 조합원 1백여 명, 정부의 조속한 사태해결 촉구하며 무기한 명동농성 돌입

◆ 26일(금)
한국교육방송 노조원 1백50여 명 여의도 집회/한국조폐공사 파업 29일만에 극적 협상타결/마치무라 노부타카 일본 문부상, 발암물질 다이옥신의 피해 줄이기 위해 일본 초·중·고교의 쓰레기 소각장 모두 없애기로 결정/서울지검 공안1부(김재기 부장검사), 검찰과 선관위의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내사와 관련해 이를 비난하는 게시판이 통신망에 개설된 데 따라 본격조사 착수

◆ 27일(토)
제2회 인권영화제 홍익대학교서 개최/민주노총,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노조설립신고서를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며 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노조설립 신고서 반려처분취소소송을 서울고법 제기

◆ 28일(일)
기아자동차 노조, 29일과 30일 한시파업 예정/국방부 국감자료, 주둔군지위협정에 의거해 주한미군에 공여한 땅 8천25만평 중 한미 양국의 공여지 이전 및 반환협상이 진행중인 곳은 5곳으로 6백36만1천평에 달해

<성명> 영화제 봉쇄조치에 대한 입장

1. 9월 27일부터 열리고 있는 인권영화제가 정부기관의 압력에 의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얼마전 연세대 동문회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퀴어영화제는 행사를 전혀 열지 못했고 그 전에 있었던 소형단편영화제들도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였다. 사정이 이렇게 된 것은 이 행사들이 영화진흥법·음비법·공연법이 정한 사전심의와 공연신고를 마치지 않았다는 것 때문이다.

2. 1996년 10월 4일 헌법재판소가 공영의 영화 사전심의를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검열장치이고 따라서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 판정으로 인해 96년 7월부터 시행중이던 영화진흥법은 개정되어야만 했고 음비법 또한 이번 정기국회에 개정안이 상정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헌 판결을 다시 상기하는 것은 영화제들에 대한 이러저러한 압력조치가 위헌 판정이 제도 속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데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3. 기왕에 문제가 되었던, 또 10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1차개정 영화진흥법중 검열장치로 여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자율심을 감당하는 기구(공윤이 공진협으로 바뀌는 형식적인 변화와는 상관없이)가 강제력을 동원하여 종국적인 상영금지(음비법에서의 판매·배포·대여·시청제공·상영 등 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심의기구가 법원의 실정법 위반 여부 판단과 상관없이 '등급부여 보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한 것이 바로 문제의 핵심이다. 공연법에도 문제는 있다.

공영신고를 하면서 심의필증을 같이 내도록 하고 있고, 신고를 받는 자치단체(시구청)는 심의필증이 없을 경우 공영신고를 처리하지 않는다. (반약 등급부여 보류 조항이 없어진다면 심의필증 첨부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또 행사를 강행하려 할 경우 공영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법공연 중지명령'을, 심지어 행사가 열리기도 전에, 내린다. 결국 자율적인 등

급분류로 한정되어야 할 심의기구의 종국적인 상영금지 처분(등급보류 판정)과 반드시 심의필증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상의 '공연허가' 조항으로 형법등 다른 실정법 위반 가능성이 거의 없는 영화의 상영을 원천봉쇄하고 있는 것이다.

4. 문제는 또 있다. 영화진흥법에는 심의기구의 한계를 인정하여 다른 실정법 위반 혐의가 있는 영화에 대해 그 내용을 관계기관(검찰등)에 통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개정 음비법도 같은 방식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민간자율기구의 한계 때문에, 종국적인 상영금지 처분인 등급보류 조치가 없다는 전제하에, 이런 통보행위는 납득할 수 있는 조치다. 그러나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영화제에 대한 공권력의 압력은 이런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뤄지고 있지 않다. 등급보류 조항과 사실상의 공연허가제를 활용하여 행사를 봉쇄할 수 있기 때문에 공윤이 그런 통보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 사안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경찰이나 공간기구가 공연장을 빌려주는 측(영화관, 학교 등)에 대해 행사불허조치를 내릴 것을, 또는 병력을 출동시켜 시위를 벌이면서, 사실상 협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5. 또 공연법에는 '공연자 등록' 조항이 따로 있는데,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공연신고를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 등록과정에서도 고의성이 짙은 처리 지연 조치가 자행되고 있다. 행정서비스라는 편의제공의 의무가 있는 시구청에서 이러저러한 이유로(심지어

접수를 받았던 담당자가 행사직전에 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등록증 교부를 지연시켜 심의필증 없는 공연신고 시도조차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다. 검열장치를 고집하고 있는 심의주무부처인 문체부, 법대로를 외치는 지자체, 심의기구의 통보없이도 직간접 봉쇄작전에 나서는 공권력, 이 삼자의 강력한 연대가 이뤄지는 가운데 소중한 의미를 담고 있는 영화나 비디오의 공개가 봉쇄당하고 있다.

6. 영화계가 이미 제기한 바 있는 심의와 관련한 대안은 이렇다. 우선 심의기구에 의한 등급보류는 즉각 철폐되어야 한다. 자율기구에 의한 자발적이며 권고적인 심의가 아니라, 사실상의 검열장치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18세이상 관객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영화 및 비디오물 상영은 등급분류에서 예외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 아울러 형법등 다른 실정법 위반에 대해서는 문체부나 심의기구가 아니라 본래 그 책임을 맡고 있는 경찰이나 검찰이 독자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 그래야 검열제도를 종식시키고 당당한 공권력을 회복시킬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7. 우리는 각 기관의 이성적인 판단을 기대한다. 아울러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끝까지 맞설 것이다. 또 헌법재판소 위헌판결의 귀중한 정신이 영화진흥법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노력할 것이다.

제2회 인권영화제 집행위원회

.....오늘의 공판

- 정영훈/이선경/김광남(국보법 찬양·고무) 오후2시, 합의21부, 311호, 속행
- 박관조(한총련, 국보법 찬양·고무등) 오후2시, 합의21부, 311호, 속행
- 이일(한총련 국보법 찬양·고무등) 오후2시, 합의21부, 311호, 신건
- 장민호(한총련, 건조물침입등) 오전10시, 합의23부, 319호, 속행
- 박휴상(국보법 찬양·고무등) 오전10시, 합의23부, 319호, 속행
- 유석상/홍석범/최예경(국보법 찬양·고무등, 고려대 구국선봉대 '청년' 사건) 오후2시, 합의23부, 319호, 속행

인권하루소식

97년 10월

(제976호 - 제997호)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interpia.net · http://www.interpia.net/~rights

1997년 10월 1일(수)

제 976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시민폭행치사 경찰 실행선고

민병일 씨 유족, “사인규명 미흡”

지난 2월 파출소에 들렀다가 두개골이 함몰되는 증상을 입고 사망한 민병일(38) 씨. 경찰의 폭행여부에 의혹이 쏠렸던 민 씨의 죽음에 대해, 지난 26일 법원은 '경찰에 의한 폭행치사'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날 수원지방법원 합의11부는 민 씨의 사망과 관련,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채규근(23) 상경에 대해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6월 20일 검찰은 "채 상경이 민 씨의 가슴을 밀쳤고, 이에 민 씨가 뒤로 밀리면서 보도블록의 턱에 걸려 넘어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됨으로써 사망했다"며 폭행치사 혐의로 채 상경을 불구속기소한 바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김철준 변호사는 "경찰과 유족간의 주장이 상반되며, 혐의사실이 경미함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선고된 것은 의미가 있다"며 "재판부가 유족들의 주장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초부터 유족측이 강하게 의심했던 '둔기를 사용한 폭행'여부가 검찰 공소과정에서 빠짐에 따라, 이 부분은 영원한 미제로 남을 가능성이

커졌다. 민 씨의 부인 홍 아무개 씨는 "2층 높이에서 추락했을 때나 가능할 정도로 두개골이 함몰되었는데, 이러한 사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채 상경의 가족과 경찰측은 홍 씨를 계속 찾아가 피해보상금에 합의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홍 씨는 전했다. 그러나, 홍 씨는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합의를 할 수는 없다"며 "채 상경이 진실만 밝혀준다면, 보상금도 필요 없고 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대 간첩단 사건 조작의혹 진상규명대책위, “진술뿐 증거 없다”

동아대 간첩단 조작사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진상규명대책위)는 30일 동아대 간첩단사건이 조작되었다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의혹점과 입장을 발표했다.

.....주요 공판 안내

- ▶ 1일 (수)
 - 김인진의 1(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오전10시 3단독 317호 선고
 - 박순봉(국보법) 오전11시 3부 421호 속행
 - 유규하(국보법 찬양·교무등) 오전10시 3부 421호 연기
 - 양규현(제3자개입금지등) 오전11시 4단독 524호 속행
- ▶ 2일 (목)
 - 김신우(한총련,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오전10시 합의23부 319호 선고
 - 정명아(국보법 찬양·교무등) 오후2시 4부 418호 신건
 - 강덕영(국보법 찬양·교무등) 오후2시 2부 421호 신건

진상규명대책위는 반박자료를 통해 "이번 간첩단 사건은 명백한 증거없이 강압적 수사에 의한 피의자들의 진술만을 토대로 하고 있다"며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짙다고 주장했다.

그 조작의혹 근거로 △공작금을 받았다고 하지만 피의자들의 경찰진술에만 의존하고 있을 뿐, 관련 계좌가 없으며 △피의자들이 직접 노동당 입당원서를 작성하고 입당식을 했다고 하나 입당원서가 있는 것은 아니며 △지아무개 씨와 배아무개 씨가 조총련에 포섭되고, 학생운동을 배후지도했다는 주장 역시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지 씨는 대학 2년 후부터 학생회나 활동가조직에 있지 않았고, 배 씨 역시 노래패동아리 "그루터기"에서 2년간 활동한 것을 제외하면 일체 학생운동권에 연루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었다.

가혹행위·협박·장기간 구금
진상규명대책위는 가혹행위 및 협박, 장기간 구금 상태에서 피의자들은 진술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러한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서아무개 씨는 검찰 1회 진술 때 시인한 후 계속 부인하고 있다. 서 씨의 가족에 따르면 사건 발생 당시 간첩부분에 대해 시인한 것은 12월7일 결혼 날짜가 잡혀진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은갖 회유와 협박에 허위진술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며, 이러한 협박과 회유는 서 씨의 약혼자에게도 있었다.

엄 아무개 씨의 경우 변호사 접견에서 "공무원인 동생에 대한 협박과 다리로 얼굴을 때리고 기마자세에서 다리를 구다, 목덜미를 구타하는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노동당 입당원서 및 입당식에 대한 허위진술에 대한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다.

진상규명대책위는 부산 민가협·부산 민주항쟁기념사업회·부산지역 대학 민주동맹 등 10개 단체로 구성되었다.

<인권하루소식> 97년 9월분 총목차 (958-975호)

호	월일	면	기사 제목
958	9/2	1	광주·대구 "전·노 사면 반대" 정략적 사면 주장에 각계 반발/기아정상화 촉구 단식자 연행, 자동차연맹 위원장등 25명
		2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 및 기념주간...거리선포식·학술회의·범국민추모제/주간인권호름 (8월25일부터 31일까지)/주요공판안내
959	9/3	1	과거청산 공세 가능할까, 사면론 일단 제동...향후 사회단체 활동 주목/민주택시연맹, 20일 총력투쟁...택시사업자 수납거부, 정부 방관
		2	참여연대, 대법관 후보자 평가서 제출 "국민의 기본권 신장기여도 평가"/제2회 인권영화제 '환경' 영화 2편 <미나마타> <델타포스>
960	9/4	1	김 대통령 임기내 사면도 안돼/사회단체, 신한국당·국민회의 항의방문/행사와 동정
		2	삼청교육대 피해자 헌법소원 현재 결정 (요지) "재정신청 대상 제한 합헌 결정"
961	9/5	1	눈과 귀를 차단당한 장애인 참정권, 수화자막방송·1층 투표소 마련해야/만평
		2	<인터뷰> 5·18 계엄법 위반죄 무죄받은 신중권 교사 "아이들에게 사회정의를 보여주고 싶었다"/제2회 인권영화제 상영작 소개 <푸마의 딸> <르완다 대학살>
962	9/6	1	민변·민교협, 한총련토론회 개최 "학생운동 회생할 수 있다"
		2	자동차연맹 위원장 단식 6일째...정리하고·인수합병등 특별법 제정반대/한국국제문제연구소 <KPNews> 창간/새책소개 80년대 의문사자료집 『누가 이들을 죽게 했는가』
963	9/9	1	우토로 제일동포를 도읍시다, 국내 후원회 결성/원전월급제 실시 촉구...택시연맹, 20일 총력투쟁/주요공판안내
		2	한국후포주 3차 단식돌입, 철거민 농성도 한달째/주간인권호름 (97년 9월1일부터 7일까지)
		3	인권시평 "살아남을 수 있기를 바란다"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
964	9/10	1	집회 진입전경, 임산부 폭행...전국 각지 농민집회 계속/만평
		2	제2회 인권영화제 상영작 소개 <명성, 6일의 기록> <레드헌트>/통신연대, 통신검열 실태조사/서울국제노동자미디어 행사 다양/장애인 대선 모니터위원 모집

오늘의 인권영화

1일 (수) - 홍익대학교
 <제2공화관 0동>
 5:00 미나마타
 7:30 르완다 대학살
 <조형관 2동>
 5:00 유토피아를 찾는 사람들
 8:00 눈물의 사슬

☺ <쇼아> 연장상영 ☺
 제2회 인권영화제 대표작 <쇼아>(9시간30분)를 연장상영합니다.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후원회원에 한해 선착순 입장할 수 있습니다. 5일(일) 오전 10시 장소는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강당

만화사랑방



<인권하루소식> 97년 9월분 총목차 (958-975호)

호	월일	면	기사 제목
965	9/11	1	'청소년 보호' 불통, 사회단체로...단체간행물에 청소년 유해매체 낙인
		2	물 건너간 외국인노동자 인권... 연수생제 유지,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임산부 집단폭행 파문 확산, 여연 "폭행경찰 처벌" 요구/민주노총, PC통신 사찰중단 촉구/281차 정대협 수요시위
966	9/12	1	'가정을 가질 권리'도 차별, 6개 종교단체 국적법 개정 캠페인/진관스님 3년6월 선고
		2	'표현의 자유'에 관한 국내 첫 토론회...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공동대응 촉구
967	9/13	1	병상을 지키는 이철용 씨/교도소 내 가족징벌 물의, 단식 대학생에 가족수감 채워
		2	<기고> 한국여성의 국제결혼과 불평등한 국적법의 개정방향 (김낙경, 한국교회여성연합회)
968	9/14	1	한총련 간부 사망, '경찰폭행' 의혹...시민·사회단체, "공권력 과실치사" 규탄/통일중공업 노조간부 석방촉구, 민주노총 공권력 투입항의
		2	"안기부 발표는 조작" 비전향 장기수, 오익제 씨 접촉설 부인/국민승리21 논평, 한반도 지뢰철수 촉구/제2회 인권영화제 화제작 <브라질 예비뉴> <천황의 군대는 진군한다>
969	9/20	1	제2회 인권영화제 또 외압, 당국 상영장소 압박...영화제측 "예정대로"/행사와 동정
		2	IPU [국회의원의 인권을 위한 위원회], 서경원 전의원 석방권고 결의/한국교회여성연합회, 국적법 개정시안 환영/전국연합, 대인지뢰금지운동 참여촉구/여연등, 유급생리휴가제도 폐지반대/제2회 인권영화제 상영일정표 (9월27일-10월4일)
970	9/23	1	한총련 외해방침 이후, 학교당국 통제강화 /퀴어영화제 재개 움직임 "관객들에게 검열받겠다"
		2	<성명서 요약> 제1회 서울 퀴어영화제는 반드시 개최됩니다(제1회 서울 퀴어영화제 준비위)/주간인권호름 (9월9일부터 21일까지)
		3	<인권시평> 왜곡된 집단문화와 인권 (장호순, 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주요공판안내
971	9/24	1	민주노총등 산재보험 민영화 반대, 산재 은폐·강제치료 종결 우려/인권영화제 흥익대 개최, 기독교회관 상영 취소
		2	서울대 동아리, 인권운동 심포 개최 "시민운동과의 연대가능성 많다"/인터뷰: 정유진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운동본부, 서울지방변호사회 제5회 인권상 수상
972	9/25	1	민가협 목요집회 200회... 문민정부 양심수 3,775명/양심수 현황 (97.8.1 현재)
		2	청송감호소 인권유린과 맞선 출소자, MBC '시사매거진 2580' 28일 방영예정/제2회 인권영화제 화제작 한국영화 2편 <사랑해요> <외투>
973	9/26	1	'한국논단'에 손해배상청구... 민변·전국연합 등, "명예훼손" 이유/<사회적 소수집단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 토론회> "이제 동성애에 대해 이야기 하자"
		2	함운경 씨 불고지협 의 징역 8개월 "간첩이라고 밝히면 무조건 신고해야"/김진성 씨, 징역 1년 선고, 이적표현물 소지·편의제공 혐의 적용/제2회 인권영화제 '여성' 영화 <바이 바이 바브시카> <갈릴리엣의 결혼>
974	9/27	1	제2회 인권영화제 개막/성폭력피해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 가족과 성 상담소/영화제 상영일정표
		2	경찰폭력 추방결의대회, 고 김준배 씨 검거책임자 처벌/제2회 인권영화제 개막작 <새의 노래>
호외1	9/27	1	학교측 상영장 봉쇄, 경찰병력 배치...영화제 주최측 "기필코 성사"
호외2	9/27	1	장소변동없이 흥익대서 성황리 개최, 학교측 상영장소 봉쇄에 이어 전원차단/'표현의 자유' 탄압사건 일지
호외3	9/29	1	27, 28일 2천5백여 명 인권영화제 관람, 10월 4일까지 인권영화제 계속
975	9/30	1	흥익대, 서준식 씨 고소 및 경찰에 시설보호 요청/김삼석 씨 30일 출소, 4년 만기복역
		2	제2회 인권영화제 <유토피아를 찾는 사람들> <어떤 쿠바 난민들>/주간인권호름 (9월22-28일)
		3	<성명> 영화제 봉쇄조치에 대한 입장 (제2회 인권영화제 집행위원회)/오늘의 공판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interpia.net · http://www.interpia.net/~rights

1997년 10월 1 일(수)

호외 5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호외 5- 제2회 인권영화제 긴급 속보

1일 새벽 1시45분 홍익대 침탈 인권운동사랑방 압수수색 예상

제2회 인권영화제가 개최중인 홍익대학교에 오늘 새벽 1시45분경 경찰이 압수수색을 벌여 임성욱(총학생회장 권한대행) 씨 등 총학생회 집행부 2명을 연행해 갔다.

아울러 인권영화제와 관련해 인권운동사랑방에 대한 압수수색이 예상되며, 인권영화제 집행위원장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씨의 구속도 우려되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은 30일 오후 4시 인권영화제 상영과 관련해 홍익대학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데 이은 것으로, 영화제측은 인권영화제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 언론사 기자에 따르면 이날 압수수색은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 위반과 관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긴급 기자회견 예정... 제2회 인권영화제 계속 강행

영화제측은 1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 발표와 이후 상영일정에 대한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영화제 집행위원회는 전날 가진 회의에서 만약 경찰측이 압수수색에 들어갈 경우 부득이 상영장소를 변경할 수 밖에 없으나, 영화제는 계속 강행할 방침이라고 입장을 정한 바 있다.

1일 오전 홍익대총학생회측은 이날 새벽 경찰 5개 중대가 학교로 들어왔으며, 총학생회 간부 2명이 연행된 것 외에도 인권영화제와 관련한 플래카드를 압수해 간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총학생회측은 "영화제 공동주최인 총학생회장 권한대행 임성욱 학우가 연행된 만큼, 기필코 끝까지 인권영화제를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interpia.net · http://www.interpia.net/~rights

1997년 10월 2 일(목)

제 977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탄압 뚫고 곳곳이 상영

경찰, 서준식 위원장 출두 요구

인권영화제에 대한 당국의 탄압이 강도를 더해 가고 있다.

1일 새벽 1시45분경 마포경찰서는 인권영화제가 열리고 있는 홍익대학교에 경찰병력 5개 중대를 전격 투입해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영화제 공동주최인 홍익대 총학생회의 임성욱(총학생회장 권한대행) 씨 등 2명을 연행했다.

또 마포경찰서는 9월 30일자로 서준식 인권영화제 집행위원장 앞으로 출두요구서를 보내왔으며, 홍익대 주변의 검문검색을 강화했다. 이로 인해 영화를 관람하려 왔던 학생·시민들이 출입을 봉쇄당하는 사태가 계속됐다.

그러나, 당국의 물리적 대응에도 불구하고 영화제 주최측은 오는 4일까지 예정된 대로 영화제를 진행할 방침임을 거듭 밝혔으며, 1일에도 예정된 4편의 작품을 무리없이 상영했다.

홍익대 총학생회측도 오후 2시부터 3시간 가량 공권력 투입과 학생회 간부 연행에 대한 규탄집회를 가졌다. 학생들은 학생처를 방문해 인권영화제 봉쇄 조치에 대한 항의의 뜻을 전달한

데 이어, 정부당국에 인권영화제의 보장과 연행학생의 석방을 촉구했다.

1일 공권력이 투입되면서 홍익대엔 긴장감이 감돌고 있지만, 주최측은 예상되는 공권력의 재투입과 기자제 압수 등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며, 영화제 차후 일정을 준비하고 있다.

인권·사회단체, 공동대응 움직임

한편, 정부당국의 인권영화제 탄압과 관련, 국내 인권·사회단체 등도 이에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민가협(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상임의장 임기란) 등 인권단체들은 영화제 탄압에 대한 공동대응에 나설 태세이며, 국제엠네스티를 비롯한 국제인권단체를 통해 국제 여론에 호소하는 방법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등 각계에서는 잇따라 규탄성명을 발표했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공동대표 박승원, 문규현, 장용주 신부)과 천주교인권위원회(위원장 김형태 변호사)는 지

난해 헌법재판소의 영화 사전심의 위원 판결을 상기시키며 "위헌적 소지가 다분한 영화진흥법, 음반법 등을 내세워 공연장을 빌려주는 측에 압력을 행사하거나 공권력을 투입하는 행위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국제적으로 실추시킨 만행"이라고 비난했다.

민가협은 "인권축제가 되어야 할 인권영화제가 경찰력 투입의 공포 속에 '인권의 장례식장'이 되고 있다"며 "당국은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기 전에 인권영화제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문화예술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반 악법을 제거하라"고 촉구했다.

또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과 통일시대민주주의국민회의(사무총장 이문렬)도 "관계당국의 비이성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인권영화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국민승리21」(공동대표 권영길)도 논평을 통해 "행사를 원천봉쇄하고 새벽에 작전을 벌여 진압하는 것은 공언법 이상의 논리가 개입되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하면서 "인권후진국일뿐 아니라 문화후진국이라는 국제적 비난과 함께 국민적 원성을 사기 전에 경찰과 관계당국은 탄압의 칼날을 거두기 바란다"고 밝혔다.

3일지 <인권하루소식>은 쉽니다

제2회 인권영화제 상영일정(10월 2일-3일)		<쇼아> 연장상영	
	제2공학관 0동		조형관 2동
2일(목)	5:00 퓨마의 딸 7:30 바이바이 바브시카 9:00 레드헌트	5:00 시가라키에서 불어오는 바람	제2회 인권영화제의 대표작 <쇼아>(9시간 30분)를 연장상영합니다.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영화제 후원회원부터 선착순으로 입장시킬 수밖에 없는 점 양해바랍니다. · 때: 5일(일) 오전 10시부터 · 장소: 민예총 강당
3일(금)	2:00 미나마타 4:00 호남호녀 7:00 히틀러와 아브라함 8:00 새의 노래	2:00 외투/사랑해요 2:30 브라질 예비뉴 4:30 플로드 란쯔만과 서준식의 대화/쇼아 2-1	

노동자·철거민 명성농성 한국후포구 농성 78일 박순덕 비대위 54일째

7월 16일부터 시작된 한국 후포구노조의 명동성당 농성이 10월 1일 현재 78일째 계속되고 있다. 또한 박순덕 열사 비상대책위의 명동성당 농성도 54일째로 접어들고 있으나 좀처럼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답답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한국후포구 노조와 박순덕 열사 비대위 소속 관계자 50여 명은 1일 오후 서울지방 경찰청 앞에서

'고 박순덕 열사 방화살인 주범 적준용역 처벌 및 한국후포구 에이스 노무관리 합법화 규탄대회'를 열었다. 또 집회를 마친 뒤 1시간 가량 선전전을 가졌다.

현재 한국후포구 노조의 단식농성은 3차례로 접어들었는데, 한광수(30·사무장) 씨가 1일 현재 26일째 단식을 진행중이다. 그러나 계속되는 농성에도 불구하고 한국후포구 회사측은 지난 8월20일 첫 상견례를 가졌을 뿐, 지금까지 교섭거부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지난 9월29일과 10월1일 두차례에 걸쳐 노조측은 사장면담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다.

국민 법감정 무시한 경제인 특별사면 반대

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은 재계인사 23명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조치 단행과 관련해 "이들은 대부분 대규모 정경유착형 부정비리를 저지른 경제인들로, 이들에 대한 명분없는 사면·복권은 국민의 법감정을 무시한 부당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번 재벌경제인 특별사면이 결국 전-노 사면으로 이어질 것에 우려한다며 이것이 가시화된다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이 일어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전노사면저지 특별위 설치

국민승리 21(공동대표 이창복·권영길)은 국민의사를 배제한 정략적 사면 논의를 저지하기 위해 '전-노 사면 저지 특별위원회'를 선거대책 본부내에 설치해 대대적인 사면반대 서명운동에 돌입할 것을 알렸다. 또한 정부가 비리관련 경제인에 대한 사면결정에 이어 청와대 관계자가 대선전 전-노 사면 가능성을 시사한데 심각한 우려와 경고를 보냈다.

행사와 동정

■ 제4회 97 청소년문화제

- '민들레의 합창'

- 때: 4일(토) 오후 4시
- 곳: 서강대학교 대운동장
- 주최: 천주교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서울지역공부방연합회

■ 편부모가정의 지원방안 토론회

- 때: 8일(수) 오후 2-4시
- 곳: 기독교연합회관 소회의실
- 내용: 주제- 편부모가정의 실태/편부모가정의 정책 현황과 전망
- 주최: 한국여성민우회 (269-5763)

■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창립

- 2주년 기념 심포지움 - 한국사회와 노동운동
- 때: 11일(토) 오전10시-오후6시
- 곳: 연세대 상경관 B 120

제2회 인권영화제 - '장애인' 영화

시가라키에서 불어오는 바람

미국/1991/니시아마 마사히로 감독/91분/다큐멘터리/컬러

보고 있으면 자꾸 웃음이 나온다. 이 웃음은 무엇인가? 어둡고 칙칙한 웃음이 아니라 산들바람 같은 웃음이다. 그들의 너글너글함이 우리에게 전해져 온다.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져 온다.

시가라키에는 약 2천 명의 노동자가 있으며 그 중 1백6명의 정신 지체장애인이 있다. 이들은 보통 10년 이상 이곳에서 직업을 얻어 살아왔다. 이 산속의 작은 도시에 이들은 완전히 녹아들어 있다. 그들은 여기서는 전혀 새삼스러운 존재가 아니며, 일을 하고 있어도 외출을 해도 그들은 이 도시에 잘 어울린다.

그들은 '양호학교'를 졸업하고 이 도시에 와 2주간의 실습기간을 거친 후 취직한다. 가내공업 규모의 작은 도자기 공장들, 거기에는 '사람'이 있고 흙이 있다. 즉 원초적인 것과의 접촉이 있다. 그들은 이런 자연 속에서 음산한 이미지의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된다. 우리나라의 어느 장애인 마을이 '자활'을 말하면서 그들을 공장의 생산 라인에 투입하는 것과는 천국과 지옥 차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시가라키 어느 공장에서 8년동안 일했다는 어느 장애인은 대단한 장난꾸러기다. 공장 사장은 그를 두고 이런 말을 한다. "처음 3년 동안은 정말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고 생각했지.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장난꾸러기 장애인 노동자를 쫓아내지 않았다. 거기에는 '경제'의 논리가 아닌 '인간'의 논리가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이 장난꾸러기는 지금은 좀더 낫게 일할 수 있게 되었다. 사장 말에 의하면 "나쁜 짓거리도" 가끔 한다. 영화의 이 장면을 보는 사람은 흔히 장애인 단체에서 주장하는, '장애인이 능력이 있어 통상인과 같다'는 주장은 경제논리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자기도 모르게 그 경제논리에 끌려 들어간 괴로운 논리가 아니냐는 의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 논리는 결국 장애인을 생산라인에 투입하는 논리가 될 수도 있다.

영화 마지막에 나오는 노래가 좋다. 시가라키에서 만난 여러 장애인의 말들을 그대로 옮겨 모자이크한 듯한 이 노랫말은, "바람처럼 웃으면서 살아간다네"로 끝을 맺는다. 우리나라 정신 지체장애인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날은 언제일까?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interpia.net · http://www.interpia.net/~rights

1997년 10월 2일(목)

호의 6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호의 6- 제2회 인권영화제 속보(밤 10시 현재)

흥익대가 또다시 위험합니다

1일 새벽 흥익대가 압수수색을 당한 데 이어 2일 오후 10시 현재 또다시 압수수색이 우려되고 있다. 흥익대학교 내에서 나오는 모든 차량에 대해 드렁크까지 열어보는 등 철저한 검문 검색이 벌어지고 있는데다, 지금까지 학교 내에서 숙식을 하던 총학생회 간부들이 모두 학교를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오늘 오후 6시경 경찰에 의해 인권영화제에 사용된 기자제가 최초로 압수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마포경찰서측은 흥익대 교문을 빠져나가던 봉고차를 세운 뒤, 차에 실린 발전기를 압수하고, 운전자인 김남곤(전국연합 소속) 씨를 임의동행 형식으로 경찰서로 연행·조사를 벌이고 있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interpia.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7년 10월 4일(토)

제 978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양심수 소식 '교화'에 악영향

재소자 알권리 보장돼야

재소자도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누릴 수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기준은 무엇인가.

국제인권법을 기준으로 보면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은 보장되며, 단지 구금의 목적에 따라 일부 기본권이 필요최소한의 제약원칙과 법률의 적정절차의 원칙에 따라 제한될 뿐"이라고 해석된다.

과연 우리의 감옥현실은 이를 충분히 수용하고 있는가.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위반 혐의로 95, 96년 두차례 구속된 바 있는 이진영(현재 출소) 씨가 최근 안양교도소장과 서울구치소장을 상대로 낸 행정심판의 결과는 실제 교도소 내 기본권(알권리 등) 제한이 어느 수준인지를 가늠케 하고 있다. 이 씨가 제기한 내용은 수감 당시 신문기사 제외처분·도서열독 불허처분·서신교부 불허처분·집필 불허처분 등과 관련된 것이다.

그 결과 서울지방교정청 행정심판위원회(서울지방교정청)는 지난 9월25일 "국가보안법 철폐나 양심수 석방 주장 등은 재소자 교화상 또는 구금목적에 특히 부적당하기 때문에 제외토록 규정한다"며 제한조치가 적법한 처분이었다는 답신을 보내왔다.

신문기사·도서 검열에 문제제기
이 씨는 95년 3월29일부터 7월4일까지 8차례 <한겨레신문> 기사일부를 삭제해 들여보낸 처분에 대해 무효확인 심판을 청구(97 행심 4)했다. 이에 서울지방교정청은 "재소자 교육·교화 운영지침에 의하면 교화상 또는 구금 목적에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사는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다"는 이

유를 들어 이를 기각했다.

서울지방교정청 '교화' 이유 기각 제외기사 내용은 교도관 비리에 관한 과장된 기사, 구국경기비상대책위원회의 안기부 해체·국가보안법 철폐주장 등 신문광고, 수용자 탈옥 미수 사건 및 수용자 상호간 폭행치사, 공안(관련) 사범의 무기한 단식농성, 해고노동자의 옥중단식 등에 관한 보도기사라고 덧붙였다. 역시 같은 해 8월12일자 <한겨레신문> 기사중 한국민주청년단체협의회회의 "국가보안법 철폐하고 양심수를 석방하라. 강용주는 29일째 목숨건 단식을 하고 있다"는 신문광고 역시 같은 이유로 삭제당했다(97 행심

5). 또한 서울지방교정청은 이 씨가 낸 도서 6권에 대해 열독불허처분 무효확인 행정소송을 기각했다. 재소자열독도서관리준칙(법무부훈령 제256호)에 따르면 "재소자 교화 및 수용질서 유지상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내용 등에 해당될 경우에는 소장은 그 열독을 불허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교정당국의 제함에 따라 재소자의 기본권 보장을 임의로 제한할 수 있음을 드러냈다.

지난 88년 12월 유엔이 발표한 재소자 보호원칙에 따르면 "여류 또는 구금된 자는 공적인 재원의 가능한 범위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교육적, 문화적 자료 또는 정보를 얻을 권리를 갖도록 해야한다. 또, 여류 또는 구금시설의 안전과 규율을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건에서만 예외를 인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우리의 현실과 대조를 이루었다.

만화사랑방



인권영화제 기자제 첫 압수 국제앰네스티, 영화제 탄압 항의

인권영화제 6일째로 접어든 2일, 영화제에 사용된 기자제가 최초로 경찰에 압수됐다.

마포경찰서는 이날 저녁 6시경 홍의대 교문을 나가던 봉고차를 제지시킨 뒤, 차에 실린 발전기를 압수하고 운전자인 김남근(전국연합 소속) 씨를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했다.

이때 경찰은 10월 28일까지로 기한이 적혀 있는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한 것으로 보아, 경찰은 앞으로도 영화제 물품에 대한 압수를 계속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 1일 새벽 홍의대에 경찰병력 5개중대를 투입하면서 영화제 기

자에 대한 압수를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영화제 플래카드만 압수해 간 바 있다.

"반정부 목소리 누르려는 시도"

제2회 인권영화제에 대한 공권력 투입 및 공동주관자인 홍의대 총학생회 간부들의 연행과 관련, 국제앰네스티는 2일 한국정부의 조치를 비판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정부의 조치는 인권

영화제에 대한 탄압이며,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반정부적인 목소리를 억누르기 위한 시도"라고 비난하면서 체포된 두 대학생의 석방을 촉구했다.

"불교인권위 서래스님 항소준비에 도움"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서래스님(불교인권위 소속)이 지난 9월23일 1심에서 2년6월을 선고받았다. 서래스님의 형인 김태현 씨는 서래스님의 항소심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도움을 주실 분은
연락처: 053-323-0647/012-1481-3233

한 권의 책

<국제앰네스티>(9/10월호)

대량학살의 나라 르완다에서부터 2차대전 당시 일본군의 만행을 파헤치려는 퇴역군인의 이야기까지. 현재 홍의대에서 열리고 있는 제2회 인권영화제에는 참혹한 학살과 환경파괴의 현상이 있는가 하면, 감춰진 '인권유린'의 진실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의 치열함이 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매달 펴내는 소식지 <국제앰네스티>도 이러한 세계 곳곳의 '인권' 현상의 목소리를 우리에게 생생히 전달해 준다.

최근 출간된 <국제앰네스티>(9/10월호)는 아프리카 북부 튀니지가 인권운동가들이 겪고 있는 수난을 특집으로 다뤘다. "만약 내가 남편과 연락을 취하고 있는 것이 들뜬다면 그날로 끝장"이라는 한 망명 반정부인사 아내의 말. 튀니지 정부의 탄압은 가족들에 대한 구금과 고문 위협으로까지 손길을 확대하고 있다.

인권후진국이라는 아프리카나 남미뿐 아니라 서유럽의 선진국들 역시 국제앰네스티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번 호에서 국제앰네스티가 고발한 나라는 전세계인의 동경을 받고 있는 스위스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제네바를 방문했다가 스위스 경찰관으로부터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했던 나이지리아의 인권운동가 클레멘트 나완코 씨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또한 개발의 기지 아래 인권유린이 자행되는 인도, 고문·실종·자의적 구금이 난무하는 리비아, 유엔군에 의한 고문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소말리아 등 각지의 세계곳곳의 인권침해소식을 독자는 접할 수 있다.

한편, 남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소개와 사형제도 폐지 주장은 <국제앰네스티>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강제 송환된 북한인들의 운명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소식과 상반기 동안 2백90명이 국가보안법에 의해 체포당했다는 남한 인권소식이 이번호에 담겨 있다.

이밖에도 '새로운 국제규준을 위협하는 유엔의 전원합의제' '홍콩, 인권의 최전선' 등 다양한 국제인권소식이 실려 있다. (문의: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053-426-2533)

제2회 인권영화제 마지막날 상영일정

- ▷ 제2공화관 0동
2:00 양도살자
4:00 눈물의 사슬
5:00 갈릴리에서의 결혼
7:00 폐막식

- ▷ 조형관 Z동
2:00 쇼아

<쇼아> 연장상영

제2회 인권영화제의 대표작 <쇼아>(9시간 30분)를 연장상영합니다.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영화제 후원회원부터 선착순으로 입장시킬 수밖에 없는 점 양해바랍니다.

- 때: 5일(일) 오전 10시부터
- 장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강당

홍익대학교에서 열리는 인권영화제 폐막식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interpia.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7년 10월 7일(화)

제 979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당국, 인권영화제 필사저지

항의·연장·지방 순회 상영으로 맞서

정부, 학교 당국의 압력에 의해 지난 3일 홍익대에서 조기 폐막된 제2회 인권영화제가 6일부터 명동성당 입구에서 항의상영에 들어갔으나 또다시 당국의 더욱 거센 압력을 받고 있다.

경찰측은 이날 낮부터 명동성당 주변을 지나는 사람은 물론, 모든 차량에 대해 트렁크까지 조사하는 등 철저한 검문검색을 벌였다. 이는 상영시간인 오후 7시가 가까워질수록 더욱 심해졌으며, 취재진마저 담을 넘어 명동성당으로 들어가야 상황이 벌어졌다. 하지만 영화상영 직후인 7시경부터는 경찰의 검문이 뜸해지면서 영화제 관람객 수는 순식간에 1백여 명으로 늘어났다.

이는 마포경찰서측이 홍익대 총학생회에 "영화제를 계속하면 간부 5명을 소환조사하고, 영화제를 중단시키면 조사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해온 데 따른 것이다.

홍대 학생 보호 위해 조기폐막

인권영화제 집행위원회측은 "경찰은 영화제 공동주관 단체인 홍익대총학생회 간부들에 대해 인권영화제의 조기 종결을 전제로 조사하지 않겠다는 비열한 조건을 내세웠으며, 이를 두고 고민하는 학생들의 입장을 고려해 영

화제를 조기폐막한다"며 정부와 학교, 경찰 당국의 외압에 의해 중단할 수밖에 없음을 밝혔다.

시내 곳곳에서 인권영화와 함께

영화제 집행위는 조기종결 선언에 이어 당국의 탄압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6-9일 저녁 7시 명동성당 앞에서 영화상영을 계속하기로 했으며, 다음주경 서울 시내 교회, 성당, 학교 등 3, 4곳을 선정해 연장상영을 하고, 20일경부터 인천, 광주, 제주 등 전국 10여 개 도시에서 제2회 지방 인권영화제를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하루소식 구독료 납부를 전국 어느 은행에서나
지로번호 7618848

.....주요 공판 안내

- ▶7일(화)
 - 김광수(한총련, 국보법 찬양·교무 등) 오후 2시, 311호, 합의21부, 속형
 - 민경우(국보법 간첩 등) 오후 2시, 311호, 합의21부, 속형
 - 나창순(국보법 찬양·교무 등) 오후 2시, 311호, 합의21부, 속형
 - 이용석(국보법 찬양·교무 등) 오전 10시, 303호, 합의3부, 신건
 - 탁귀영(국보법 찬양·교무 등) 오후 2시, 303호, 합의3부, 신건
 - 김숙현(한총련, 특수공무방해치상 등) 오전 10시, 303호, 합의3부, 신건
 - 박흥동(국보법 등) 오후 2시, 403호, 합의10부(항소심), 속형

- ▶8일(수)
 - 김현일 외2(국보법 찬양·교무 등) 오후 2시, 302호, 합의2부(항소심), 속형
 - 변은영(국보법 찬양·교무 등) 오전 10시, 302호, 합의2부(항소심), 선고
 - 조창목(국보법 찬양·교무 등) 오후 2시, 302호, 합의2부(항소심), 속형
 - 이영두(국보법) 오전 10시, 526호, 11단독, 신건
 - 유병서(한총련, 국보법 찬양·교무 등) 오전 11시, 319호, 합의22부, 재계
 - 류응범(국보법 찬양·교무 등) 오후 2시, 319호, 합의22부, 신건

- ▶10일(금)
 - 최성봉(국보법 탈출미수 등) 오전 10시, 425호, 합의5부, 신건
 - 홍연아 외1(국보법 찬양·교무 등) 오전 10시, 319호, 합의22부, 선고
 - 이지웅(한총련, 국보법 찬양·교무 등) 오전 10시, 319호, 합의22부, 선고
 - 권정현(한총련, 국보법 찬양·교무 등) 오전 10시, 319호, 합의22부, 선고
 - 김종태(한총련,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오전 10시, 319호, 합의22부, 선고
 - 신승우(국보법 찬양·교무 등) 오전 10시, 418호, 합의1부, 속형
 - 유규하(국보법 찬양·교무 등) 오전 10시, 421호, 합의3부, 선고

6일, 1백여 명 명동에서 관람

또 5일 인권영화제 후원회원을 중심으로 대작 다큐멘터리 <쇼아>를 낙원동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민예총) 강당에서 상영했으나, 이 역시 경찰의 검문검색으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는 사태를 빚었다. 경찰측은 이날 오전 9시경부터 오후 6시가 넘도록 민예총 부근에서 계속적인 불심검문을 벌였으며, 시경과 종로구청측에서는 민예총 관계자를 찾아와 "불법공연이니 중단할 것"을 종용하기도 했다. 그 결과 50여 명이 영화제를 관람했으며, 상영 시간도 예정시간보다 20여 분 늦어진 10시 20분경 시작되어 오후 9시까지 상영되었고, 영화관람을 마친 뒤 1시간 가량 토론자리가 마련되었다.

한편 영화제 폐막을 하루 앞둔 지난 3일 인권영화제 집행위원회측은 갑작스레 조기폐막을 선언하게 되었는데,

하혈 불구 구치소에서 겨울나기 제소자 수감시설 개선 절실

지병을 앓고 있는 한총련 소속 여대생이 교도소에서 겨울을 나아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한총련 출범식 참가와 관련, 지난 6월 4일 기자교통방해 및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돼 1실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전행란(목포대 4년) 씨는 성동구치소에서 복역중이던 지난 9월 심한 하혈증상으로 인해 구속집행정지 처분을 받았다. 광진구 자양동 해민병원 551호실에 입원치료중인 전 씨는 자궁내막증식증이라는 진단과 함께 6개월간의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처방을 받았다. 그러나 전 씨는 7일자로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다시 성동구치소에 수감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전 씨는 "지난주 변호인을 통해 병보석을 신청했지만, 석방될 확률은 1%도 안된다고 들었다"며 다시 구치소로 돌아가야 하는 처지를 안타까워했다.

한편, 전 씨가 입원한 병실에는 남자 형사 2명이 내내 전 씨를 감시하며 동숙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 씨의 병실은 한두 평 남짓한 독방이며, 동부경찰서 소속 남자 형사 2명이 침대 옆 의자에서 하루종일 생활을 같이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 씨는 "남자들과 한 방에서 생활하는 것과 특히 잠자리에 드는 것이 여간 불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 씨의 병실에서 상주한 형사들도 "우리 역시 불편하긴 마찬가지였다"고 말했다.

전 씨는 "약물치료를 받고는 있지만 아직도 하혈이 계속되고 있다"며 "난방시설이 없는 교도소에서 겨울을 나아하는 것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전 씨의 모습은 구속만 되면 환자복으로 갈아입고 병실에서 편안히 수감생활을 즐기는 정치인·재벌총수들과는 사뭇 대조적이었다.

인권영화제 항의 연장상영

인권영화제 탄압에 항의하는 연장상영이 명동성당 입구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권영화제는 여러분의 발걸음을 애타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9일(목요일)까지 매일 저녁 7시 인강을 위한 영상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상영작>

- 10월 7일(화) 눈물의 사슬/명성 6일의 기록
- 10월 8일(수) 외투/사랑해요/푸마의 딸
- 10월 9일(목) 레드헌트/델타포스

주간/인권/호/름

(97년 9월 29일부터 10월 5일까지)

◆ 9월29일(월)
부산지방경찰청, 동아대 자주대오 사건으로 구속된 5명에게 대해 간첩혐의 추가 적용/대검찰청 고위 관계자, 전국 주요도시의 사창가 폐쇄를 위한 법적·행정적 근거 마련에 착수/법기아정상화추진비상대책위원회, 29-30일 시한부 파업 돌입/국민승리21, 전노사면 저지 위한 국민운동체 결성방첩/국방부 국감자료, 군생활중 사망사고자 수는 94년 4백16명, 95년 3백30명, 96년 3백59명으로 나타나

◆ 9월30일(화)
김영삼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으로 유죄 확정선고받은 경제계 인사 23명에 대해 개선절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단행 결정/동아대 자주대오 사건' 관련 부산지역 법조계와 시민단체, 조작의혹 제기/대검찰청, 전국 지검·지청에 '장애인을 위한 조사실' 설치하기로/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건립준비위' 창립대회 세종문화회관서 열려/수도권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연대회의, 소각찌꺼기 중금속 과다검출 결과와 관련해 환경부에 소각재 매립 중단 촉구

◆ 10월1일(수)
마포경찰서, 제2회 인권영화제 열리고 있는 홍익대 압수수색 실시해 총학생회 간부 2명 연행/통상산업부, '근로자과거법안' 마련해 관계부처간 협의추진중/경찰청, 청소년보호법 시행으로 9월 한달동안 위반사범 2천41명 적발, 이중 43명 구속/교육부 발표, 4월 현재 전국의 1만4백47개 초·중·고등학교 중 양호교사가 있는 학교는 6천56곳(58%)에 불과/환경부 국감자료, 전국 육·해·공군 부대 상당수가 주변 토양을 중금속으로 오염시키고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오·폐수를 무단방류하는 등 환경오염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덕성여대 총학생회, '전면학부제 철폐와 한상권 교수 복직, 박원국 이사장 퇴진을 위한 비상총회'에서 휴업찬반투표 결과 2일부터 무기한 휴업돌입 결정

◆ 10월3일(금)
제2회 인권영화제 조기 폐막/93년 12월 군사기밀보호법을 개정하면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군사기밀 공개' 조항을 신설했으나 공개 거의 없어/알제리 내 반정부 테러로 2, 3일 동안 대량학살사태 발생해 1백5명 사망, 수백명 부상

◆ 10월5일(일)
조순 민주당 총재, 남북경제 협력으로 통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국가보안법 고쳐야 한다고 밝혀/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김인수 부장판사), (주)아시아나항공 기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외국인 조종사 1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외국인도 내국인과 같이 퇴직금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검찰, 법원의 전부명령을 받아놓은 전·노 두 전직 대통령 관련 계좌에 대한 추징금 집행 위해 해당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전부금 지급 청구소송 내기로

인권
시평

10월 단상

이 석 태(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바야흐로 대통령 선거운동이 한창이다. 10월의 지지 판도가 대통령 선거일까지 그대로 이어진다고 해서 여야 후보들 모두 지지율을 높이기 위하여 안간힘이다.

후보들마다 매일같이 전국적 또는 지역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들을 공약으로 내어 놓고 있다. 오랜 군사독제를 경험한 바 있고, 입법부 우위의 의회민주주의를 골간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특별히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권한이 그 어떤 나라보다도 막강한 우리 나라에서 대통령 선거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진정한 종북으로서 어떤 사람을 뽑느냐 하는 문제가 여타의 국가적 행사보다 중요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우리나라 출신 후진보적인 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함으로써 선거운동 기간보다 더 국민들의 열광적 지지를 받고 있는 토니 블레이 영국 수상같은 이를 대통령으로 선출하지 못하리란 법이 없지 않은가.

헌법은 대통령에게 헌법 수호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취임시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증진시키겠다는 선서를 하도록 하고 있다. 바꿔 말하면 대통령에게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킬 의무가 있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를 아는가

그런데 작금에 쏟아 붓고 있는 대통령 후보들의 공언을 보면 누구랄 것 없이 인권문제에 관해서는 무슨 급기사황이라도 되는 듯이 말을 삼가고 있다. 유엔은 95년 각 회원국들에게 "국가인권위원회"(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e)를 설립하라는 권고안을 채택한 바 있다. 국가가 예산을 대는 정식의 기구로서 발족하여 국회, 시민단체, 학계등이 협력하여 인권을 옹호하고 발전시키라는 취지이다. 현재의 대통령후보들중 이를 제대로 아는 후보가 있을까.

외면 당한 인권영화제

10월은 "영화의 달"이라고 한다. 국민민주주의를 압축하여 말한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을 영화에 차용하여 "영화의, 영화에 의한, 영화를 위한"이라고 거창한 표어를 내세우며 10월은 시작되었다. 그리고 제2회 "인권영화제"도 지난달 말부터 '이름에 끼어' 개최되었다. 그러나 10월이 시작되자마자 각종 상업주의 영화가 일제히 현란하게 신문지상을 장식한 이면에서 인권영화제는 철저하게 외면되었다. 또 내용상으로는 우리나라에서도 크게 히트한 할리우드 영화 "선들러 리스트"



와 버금가는, 아니 일체의 상업성을 배격하고 인간의 존엄성 고양에 목표를 둔 까닭에, 그리하여 휴머니즘의 구현에 관한 한 그 이상의 예술적 표현이라고 할 여러 인권 영화들이 "자유 정신"이 숨쉬는 대화에서의 상영조차 공식적으로 거부되고 급기야는 경찰의 압수, 수색까지 인내해야 했다. 이런 현실에서 대통령 후보들에게 인권문제를 언급하라 함은 지나친 사치일지 모른다.

한편 사람들은 이번 대통령선거의 특성이 텔레비전과 라디오, 신문 등에 의한 토론회가 중심이 됨으로써 과거 어느 때보다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후보들의 면면을 잘 알게 됨으로써 보다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토론회가 빛 좋은 개살구인 곳이 있다. 바로 감옥이다 (이런저런 이유로 사람을 가두어 두는 모든 장소를 총칭한다). 40년이 넘게

감옥생활을 한 김선명 씨보다는 짧은 기간인 27년 동안 감옥에 있었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만델라 대통령은 한 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의 척도를 알기 위해서는 감옥을 보라고 말했다.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수의를 입고 재판 받은 모습이 세계적인 방송망을 탐으로써 뜻밖에 한국에서의 미결수의 처지를 세계인에게 또렷하게 각인시킨 연전의 공판 때로부터 역산하여 30년이 훨씬 넘는 62년 10월 15일의 반역죄 공판에서 만델라는 누구의 제지도 받지 않고 전통적인 코사족 표범 가죽 "카로스"를 입고 출두하여 동족의 금지를 높였다.

재소자의 선거권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최근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된 학생을 변론한 일이 있다. 약혼녀와의 면회가 되지 않아 애를 태우다가 어디서 들었는지 동거인이라고 하면 면회가 된다고 하여 주민등록을 약혼자의 거주지까지 옮기는 수고를 하였으나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록 면회가 허용되지 않았다.

이런 마당에 재소자가 올바른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텔레비전 시청이나 라디오를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청원한들 누구하나 귀 기울일 것인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18조는 아예 "금고이상의 형의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즉 기결수에 대하여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선거권을 박탈하고 있다. 형사책임과 참정권의 혼동이다. 다가오는 12월에 선거권을 행사하려는 사람은 행여 음주운전으로 선거권을 박탈당하지 않도록 조심할 일이다.

대통령을 뽑는 일을 큰 기대와 희망을 가져다 주는 국민적인 축제로 승화시키는 것이 우리에게서 영영 불가능한 일일까. 남은 선거운동기간만이라도 인권에 관한 건설적인 공약이 나오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interpia.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7년 10월 8 일(수)

제 980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철거현장 폭력·성추행 되풀이 속옷 차림에 집단구타

재개발지구 강제철거 과정에서 또다시 살인폭력과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다. 더욱이 이번 행당 1-2 재개발지구 사건은 적법한 집회신고를 하고 주민들이 집회참석을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벌어졌다. 이런 정황 등으로 볼 때, 이번 사건은 사전에 성동구청·성동경찰서·재개발조합·적준용역이 치밀하게 계획한 것이 아닌가는 의혹이 짙어 더한 충격을 주고 있다.

당국·조합·적준용역 공모 의심
이번 일은 지난 9월 30일 오전 8시50분 행당 1-2 재개발(행당동 128번지 일대) 지구내 잔여 세입자 43세대 중 27세대 가옥에 대해 가옥명도 집행을 빌미로 성동경찰서 경찰 3백여 명과 재개발조합이 고용한 적준용역 소속 철거폭력배 1백여 명, 가옥명도 집행고용원 5백여 명이 강제철거를 강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세입자대책위 주민들은 사고당일인 9월 30일 오전 8시10분경 허가된 장소로 이동하던 중 이같은 사태가 발생한 것을 알게되고 급히 돌아왔으나, 적준용역 등이 생가(살고있는 집)를 마구 부수기 시작했고, 전투경찰 3백여 명은 주민들의 접근을 금지시켰다.

주민, 안면 18바늘 꿰매
당시 현장에서 강제철거에 항의하던 김동현(45·입원중) 씨등 주민 30여 명이 철거용역반원 50여 명으로부터 1시간 이상 전신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돌과 주먹 등으로 폭행을 당했다. 현재 김동현 씨가 전치 6주 진단을 받은 것을 비롯해, 김용길(37·전치 3주) 씨가 안면을 19바늘 꿰매는 등 주민

10여 명이 전치 6주에서 1주 진단을 받았다. 특히 김아무개(40·여) 씨는 세입자대책위 사무실에서 팬티와 브래지어만을 남기고 옷이 다 벗겨진 상태에서 집단구타를 당했는데, 철거반원은 이를 말리던 하수복(세입자대책위)위원장 등에게도 구타를 가했다. 또한 철거반원들은 김 씨를 밖으로 끌어낸 뒤에도 옆에 있던 주민이 덮어준 잠바마저 벗기고 다시 구타했다.

항의주민, 불구속 입건
약 2시간 동안의 살인적인 폭력사태를 치르고 난 뒤, 주민 1백 명은 성동구청으로 찾아가 폭력사태와 가옥명도에 대한 철거집행을 강행하지 않겠다(5월16일 세입자대책위와 재개발조합

합의)는 합의서 불이행에 대한 항의를 벌였다. 하지만 주민 30여 명은 긴급 동원된 전경에 의해 강제연행되었으며, 이들중 하수복 위원장 등 5명이 불구속 입건조치를 당했다.

주민들, 적준용역 등 고소
오후 6시경 주민들이 임시거처로 천막을 설치하려 하자 또 다시 40여 명의 철거반원들이 물려와 "전농동에서 사람(박순덕 열사)이 죽었어도 까딱없었다"며 20여 분간 온갖 협박과 욕설을 퍼부었다. 이 때 주민들은 4차례나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주민들이 무차별 폭력을 당했을 뿐 경찰들은 끝내 출동하지 않았다. 현재 행당 1-2지구 27세대 주민 1백10명은 비닐천막을 치거나 노숙하며 지내고 있다.

한편 9월30일 폭력사태와 관련해 이날 폭행을 당한 김용길 씨 등 주민 10명은 6일 적준용역과 예동해 재개발조합장을 성동경찰서에 고소했다.

"군사독제하 한국인권의 전달자" 소마 노부오 주교 별세

국제평화와 인권을 위한 활동에 오랫동안 관계해온 일본인 소마 노부오(81·相馬 信夫) 주교가 6일 새벽 1시, 급성심부전으로 세상을 떠났다. 소마 주교는 김대중 납치사건,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비롯한 70년대 이후 90년대 초까지의 한국 민주화와 인권회복에 크게 기여했으며, 특히 군사정권 하 한국내 인권탄압을 전세계에 알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아울러 한국문제 외에도 필리핀 주민운동 지도자 고문에 대한 항의활동, 걸프전쟁 난민 구호운동, 동티모르문제 등에 힘을 썼으며, 일본에서는 중증 장애인, 알코올·약물중독자,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활동에 앞장서 왔다.

이돈명 변호사는 "소마 주교는 김지하 양심선언문과 변론요지, 미문화원 방화사건 피고인 진술서와 변론요지 등 한국 인권관련 자료들을 일본으로 보내 이를 영역하여 전세계에 알림으로써 한국인권향상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며 그의 죽음을 애도했다.

소마 주교는 동경대학 이학부 천문학과와 동경 카톨릭대학 신학원을 졸업한 후 60년에 사제 서품을 지내고, 일본 천주교 나고야 교구장(69-93)과 일본 천주교 정의와평화협의회 회장(81-93)을 지냈다.

민주택시연맹 최도근 위원장 분신 민주노총, "분신책임은 정부당국"

민주노총 산하 민주택시연맹 광주지부본부 송광교통노조 최도근(47) 위원장이 7일 오후 '택시완전월급제 시행'을 요구하며 분신했다. 최 위원장은 7일 오후 현재 전남대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었으나, 전신 3도 화상을 입고 생명이 위독한 상태이다.

7일 오후 3시 민주택시연맹 광주지역 본부는 "건설교통부 장관 퇴진과 완전월급제 쟁취를 위한 결사투쟁 결의대회 및 광주지역 택시장례식"을 광주역 전에서 열고 집회후 시청 앞까지 평화행진을 벌였다. 시청 앞에서 정리집회를 하던 중 오후 5시20분경 최도근 위원장이 "정부는 택시 완전월급제 즉각 시행하라" "전조직은 총파업으로 완전월급제 쟁취하라"고 외치며 분신했다.

민주노총은 7일 오후 성명을 내고 "최 위원장의 분신 원인은 바로 정부가 '운송수익금전액제'에 따른 택시제도 개혁과 완전월급제 실시를 계속 외면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정부는 '전액관리제' 위반업체를 처벌하고 완전월급제 시행지침을 즉각 시달할 것 △법규를 위반하고, 법집행을 포기한 이환균 건설교통부 장관을 즉각 문책할 것 등을 촉구했다.

또한 민주노총에 따르면 지난 84년 완전월급제 쟁취를 위한 택시노동자대투쟁 이후 지난 13년간 박종만 씨를

비롯해 무려 13명의 택시노동자들이 분신으로 목숨을 잃었다.

지난 10여년간 택시노동자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94년 입법, 공포되고,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9월1일부터 시행되려던 '운송수익금전액관리제'가 정부의 무성의와 법규위반으로 인해 무용지물이 되고 만 것이다.

여연, 여성문화한마당

한국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 지은희 등, 여연)은 오는 18일부터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대통령 선거에 즈음해 여성유권자들의 정치의식을 높이고 개혁적인 여성정책 확보를 위한 '여성문화한마당'을 연다. 18일(토) 오후 2시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야외무대에서 수도권지역 '97 여성문화한마당'을 시작으로, 19일 청주, 25일 제주, 26일 포항, 30일 경남지역 등 전국 5개 도시에서 여성문화한마당 행사를 개최한다.

여연은 △무의식적으로 습관화된 여성의 비주체성을 인식하고 대선에서 여성유권자들의 정치참여 의식을 고취

시키며 △여성할당제의 정당성을 알려 내며 △여성정책 10대 과제를 선전한다는 목적으로 이 행사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행사와 동정

■ 광진구 아파트 공동체 생활에 대한 시민학교

- 때 : 7일-28일 매주 화요일 저녁8시
- 곳 : 광장종합사회복지관 (201-1333)
- 주최 : 참여연대 · 광진시민모임

■ 꽃다지 라이브 콘서트

- 때 : 9 - 19일 평일 7시 30분, 토·일 4시, 7시 (12일은 7시 공연 없음)
- 곳 : 대학로 라이브극장 1관

■ 국민복지예산확보방안 포럼

- 때 : 11일(토) 오후 2시
- 곳 : 국회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
- 주최 : 국민복지예산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521-5364)

■ 87년 노동자 대투쟁 10주년 기념 전국노동자 문화제

- 때 : 12일 오후 2시
- 곳 : 보라매 공원
- 주최 : 민주노총

■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토론회

- 때 : 13일(월) 오후 6시
- 곳 : 지식인연대 사무실
- 내용 : 유럽통합과 유럽좌파의 대응전략 개괄

인권영화제 항의 연장상영

인권영화제 탄압에 항의하는 연장상영이 명동성당 입구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권영화제는 여러분의 발걸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9일(목요일)까지 매일 저녁 7시 인간을 위한 영상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상영작>

10월 8일(수) 외투/사랑해요/퓨마의 딸
10월 9일(목) 레드헌트/델타포스

제2회 인권영화제 <http://www.arumnara.com/shuriff>

전노사면 반대 캠페인 국민승리21

「국민승리 21」이 주최한 '전·노사면 반대 서명운동 및 캠페인'이 7일 오후 12시부터 여의도 국회 의사당 주변 장기신용은행 앞에서 있었다. 「국민승리 21」은 "앞으로 전노사면 지지 특별위원회를 선거대책본부에 설치하고, 이날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전국적이고 대대적인 사면반대 서명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interpia.net · http://www.interpia.net/~rights

1997년 10월 9 일(목)

제 981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요원한 재소자 치료보장의 길 성동구치소, "외부진료는 본인부담"

재소자 치료비 부담은 과연 누구의 몫인가. 시국 사범을 비롯한 일반 재소자들의 외래치료비는 거의 대부분 자기 부담이었다. 그런데 96년 3월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병원치료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했다. 또한 97년 초 군산교도소에 수감중인 이동주(26·집시법) 씨의 경우 오른쪽 눈 수술비 비용일체를 교도소측이 부담했다.

전행란 씨, 치료비 문제로 올음 성동구치소 수감 중 심한 하혈 증세를 보여 입원 치료를 받은 전행란(23·목포대 환경공학과 4년) 씨가 지난 7일 구치소로 재수감되었다. 전 씨는 '자궁내막증식증'이라는 진단과 함께 이후 6개월간 약물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다. 전행란 씨의 경우 또 다시 치료비 부담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구속집행정지처분 마지막 날인 7일 전행란 씨는 결국 울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다. 이는 당일 오후 4시경 성동구치소로 재수감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해민병원측이 3백만원 가량의 치료비를 전 씨와 가족에게 청구해왔기 때문이다. 광주에 사는 전 씨 가족은 가정형편도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당장 치료비를 지불할 수 없었는데, 이에 병원 원무과 직원이 입원실로 전 씨를 찾아와 병원비 지불을 독촉한 것이다. 그 직원은 "환자측이 병원비를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구치소측에서 부담한다는 확답을 받아달라"며 치료비를 내지 않을 경우 '약을 줄 수 없다'는 태도를 취했다.

성동구치소 의무과 한 직원은 "외부 진료인 경우 본인 자비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 게다가 전 씨는 평소 앓아오

던 지병으로, 수감중 어떻게 발전했지는 알 수 없으나 상태가 악화돼 구치소측이 검찰에 구속집행정지를 청구했다. 따라서 구치소 소속이 아닌 상태에서 외부전문에게 진료를 받았으므로 당연히 본인 부담"이라고 밝혔다. 구치소측의 주장은 먼저 이번 치료가 구치소 수용중 발병한 것이 아니라 지병이라는 것과, 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 치료받은 것이기에 구치소 소관이 아니라는 이야기이다.

감시 이유로 특실 불가피 하지만 이에 대해 전씨의 가족들은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큰언니 전애란(28) 씨는 "행란이의 병은 지병이 아니다"고 말했다. 해민병원 담당의사가 말했듯이 심리적·정신적 압박을 받은 상태에서 악화된 것으로, 행란 씨는 목포에서 자취를 하면서 씨를할동도 할만큼 건강하게 대학생활을 해왔다는 것이다. 평소 잘먹고 편안하게 생활하면 괜찮은데, 구치소 수감생활을 하면서 석 달 동안 하혈을 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구속집행정지 부분에 대해서도 병원에 갈 당시만 해도 "병원에 다녀오자"는 식으로 동생을 데려갔고 그곳에서 열혈결에 입원을 하게되었다는 데, 가족이 입원사실을 안 것도 이틀이 지나서였다고 말했다. 전애란 씨는 "전경들이 병실 밖에서 감시하고 형사가 간병인용 간이침대를 쓰고 있는 상황에서 가족들은 병실에 있을 수조차 없었다.

의료보험 혜택이 안되는 특실 대신에 일반실을 사용하려고 했으나 병원측은 결국 형사들 때문에 특실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전행란 씨는 한총련 출범식 참가와 관련해, 지난 6월 4일 기차교통방해 및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이번 병원치료는 지난 9월 심한 하혈증세를 보여 20일간 구속집행정지처분을 받아 이루어졌다. <인권하루소식 10월7일자 참조>

서준식씨, 경찰 출두조사

제2회 인권영화제 상영과 관련해 흥익대학교측으로부터 '현주건물침입혐의'로 고소를 당한 서준식(50·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집행위원장이 8일 마포경찰서로 출두해 7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다. 한편 이번 사건 담당으로는 공안검사가 배당된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 장관 직무유기 고발예정

7일 오후 택시완전월급제 시행을 요구하며 분신, 3도 화상을 입은 민주택시연맹 광주지역본부 송광교통노조 최도근(47) 위원장의 회복여부는 오늘이 지나야 판가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역본부 대책위와 서울본부는 8일 오후 전남대 병원과 여의도에서 집회를 가졌다. 또한 10일 오후 3시 대규모 조합원 집회를 가질 계획이며, 건설교통부 장관을 직무유기로 고발할 예정이다.

인권영화제 항의 연장상영
9일(목) 오후7시 명동성당 입구 "퓨마의 딸/레드헌트"

행당 1-2지구 폭력·성폭행 현장 증언

“우릴 발가벗겨 거리로 내모는가!”

지난 9월 30일 오전 8시50분경 성동구 행당 1-2 재개발 지역 내에서 벌어진 강제철거는 일반인들의 상식수준을 넘어섰다. <인권하루소식>에서는 8일 이 사건을 보도한 데 이어 당시 현장에서 팬티와 브래지어만 남긴 채 폭행을 당한 김아무개(40·여) 씨와 임아무개(48·여), 윤아무개(43·여) 씨에게서 그때의 참혹한 상황을 들어보았다<편집자주>.

김: 성동구청 부근으로 선전전을 하러 마을을 빠져나가는데 예감이 이상했다. 택시를 타고 세입자대책위원회 사무실로 돌아오니 막 (철거)집행이 시작되는 것 같았다. (산동네 맨 꼭대기에 세입자대책위 사무실이 있는데) 밑을 내려다보니 새까맣게 (용역깡패들이) 몰려오고 있었다. 어느새 용역깡패들이 대책위 사무실까지 들어왔고 나 역시 앞다투어 사무실로 들어갔다. 할머니, 아기를 등에 업은 아줌마들을 포함해 여자들이 10여 명 있었고, 용역반원들은 40-50명 가량 있었다.

그 다음엔 유리창을 집어던지고 난리가 났다. 내가 “말로 하자”고 말하자 “개 같은 년들 전부 다 내버려!”하고 소리쳤다. 나 역시 그대로 물러설 수가 없어 그중 한 명의 혀대를 잡아당겼다. 그러자 3명이 달려들어 “눈알을 다 빼버린다”면서 안경을 확 낚아채 던져 버렸다. 그리고 4명이 웃웃을 벗기기 시작했다. 그 뒤 어깨죽지와 가슴을 만지고, 이불을 뒤집어 씌우고 짓밟았다.

“벽쪽으로 던져졌고, 기절했다”
윤: 김씨가 당하는 것을 말리자 한 용역반원이 떠밀어 벽에 부딪쳐 잠시 기절했다. 그 뒤 음부를 얼마나 잡아뜯던지 너무 아팠고, 또 너무 비참했다.
임: 사무실로 들어서려는데 뒤에서 젓가슴을 양손으로 딱 쥐고 “이년이 망패막이야”며 끌고다녔다. 팔을 뒤로 꺾었는데, 내가 김 씨가 당하는 것을

보고 “사람 죽는다”고 소리치자 장갑끼 손으로 입을 막춰어 뜯었다. 그리고 끈 땅에 머리가 닿도록 목을 막눌렀다. 다시 할머니들, 애엄마들과 같이 팔짱을 끼고 사무실 2층 입구에서 막아서자, 손가락을 꺾어 버렸다. 이 엄지손가락이 지금도 아프다. 그리고 내 몸을 지그재그로 흔들며 대문쪽으로 던져버렸다.

집이 내팽개쳐질 때 평평 눈물나
김: 임화용(적준용역, 행당 1-1 소장)이 발로 가슴과 배 사이를 걷어차며 “저년은 (늘어) 여자도 아니다. 저년 하나 죽여도 된다. 내가 책임진다. 전농동 (박순덕 열사)에서도 죽었는데, 죽이는 건 문제도 아니야”며 소리쳤다. 다시 세입자대책위 마당에서 대문 밖으로 끌고 가면서 4명이 바지를 벗겨버렸다. “망신을 줘야 다시 덤비지 않는다”면서 마구 욕을 해대며 한결로 날 던져버렸다. 그리고 잠시 실신한 것 같다.

임: 맞을 때는 눈물이 안났는데 내가 피나게 장만한 것들이 거리로 내팽개

쳐지는 것을 보니까 평평 눈물이 났다.
김: 길바닥에 누워있다가 깨어나 보니 적준의 방 차장이 집을 하수도에 내팽개치고 있었다. “아무리 짐같지 않아도 여기다 던지면 어떡하나. 해도 너무한다”며 막 울음을 터뜨렸다. 너무 분하니까 저놈들이 하는 욕도 제대로 안들렸다. 다행히 아들은 수련회에 가서 그 난리가 난뒤 이틀뒤 밤에 돌아왔다. 전기, 전화선이 끊어져 동네 전체가 깜깜한데 저만치 아들이 서있었다. 그 애가 날 보고 “엄마 집이 어디 있어?” 하고 물었다.

“자식을 생각하면 물러설 수 없다”
임: 성동구내 인접 재개발 지역은 사업계획 고시일로부터 사업시행 인가일까지 기간이 짧게는 8개월에서 42개월 걸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받았다. 하지만 우리 지역은 그 기간이 무려 8년 8개월이 걸렸다. 그런데 이제 와서 철거깡패를 동원해 내쫓는 게 말이 되나. 구청은 맨날 법의 논리를 들이대지만 사람 있고 법 있는 것 아니냐. 법을 내세워 발가벗겨 우리를 내모느냐. 우리 세대에서 끝난다면 산동네라도 찾아갈 수 있다. 하지만 자식을 생각하면 물러설 수 없다. 대안이 있을 때까지 모두 각오가 되어 있다.

만화사냥방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interpia.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7년 10월 10 일(금)

제 982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내무부, 전자주민카드 재추진
공대위 “감시·통제 위험 그대로”

전자주민카드 도입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른다.
당초 ‘행정 및 주민편의’라는 내무부 측 명분과 ‘국민들에 대한 전자적 통제’라는 각계의 반발 속에 올 상반기 국회에서 논의가 유보됐던 전자주민카드 문제가 오는 16일 내무부 국정감사를 통해 다시 공식화될 전망이다.

현재 내무부는 각계의 반발을 의식해, 당초 7개 항목 35개 정보를 수록하려던 계획에서 한 발 물러난 수정안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회의 소속 국회의원측에 따르면, 내무부의 수정안은 △현행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내용과 주민등록증초본 사항으로 수록 내용을 축소하는 대신 △전산망은 전자주민카드용 전용망을 별도로 구축하고 △전자카드의 하드웨어 컴퓨터 칩은 계획된 방식 그대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내무부는 이같은 수정안을 가지고 국회 내무위원들을 상대로 개별 설득작업에 나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러나, ‘통합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측은 “내무부의 수정안도 본질적인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있는 만큼, 어떠한 수정안도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또다시 당국과 시민·사회단체들 간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컴퓨터칩”

내무부 수정안에 대해 공대위측이 지적하는 문제는 무엇보다도 “전자주민카드의 컴퓨터칩이 존재하는 한 전자

적인 방식에 의한 신분확인 기능은 전혀 달라지는 것이 없으며, 그에 따른 위험은 상존한다”는 데 있다. 또한 공대위측은 “수록내용이 축소되었다 하더라도 제도가 시행되면 그 수록내용은 언제든지 추가될 수 있다”는 지적과 더불어 “기술영향평가나 경제적 타당성 평가, 사회영향평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광범위한 여론수렴 없이는 어떠한 형태의 전자주민카드 도입도 반대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공대위측은 그밖에도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증초본만을 수록할 계획이라면, 구태여 ‘전자적 방식’을 도입할 이유가 없다는 점 △현 주민등록제도가 위험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만큼, 전자주민카드제를 도입해서는 안된다는 점 △경제적 타당성은 물론, 행정능률 개선효과도 별로 없다는 점 등을 들며, “주민등록증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면 컴퓨터칩을 뺀 플라스틱

카드로 대체하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공대위측의 이러한 주장이 내무부의 수정안과 비교해 얼마나 국민적인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며, 따라서 내무부 수정안의 국회상정을 대비해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안전활동가 양성 강좌
노동과 건강연구회, 24-25일

노동과 건강연구회 부설 ‘한국산업안전보건교육연구소’는 오는 24-25일 대전 유성유스호텔에서 ‘2차 산업안전보건활동가 양성과정’을 개설한다.

이번 강좌는 노동조합에서 산업안전보건활동을 하는 간부를 대상으로 하며, △사회복지와 노동운동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무엇이 달라졌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노동조합 산업안전보건부의 일상활동, 해법을 찾는 다 등의 주제강의가 이어진다. 참가비는 1인당 5만5천원(1박3식)
문의:02-3273-6076~8(전수경)

인권영화제 연장상영 계속됩니다

명동성당 상영에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인권영화제(서울)는 다음주 17일부터 19일까지 명동향린교회에서의 상영을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지속적인 성원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향린교회 상영작

- <명성, 6일의 기록> <새의 노래> <갈릴리에서의 결혼> <양도살자> <천황의 군대는 진군한다> <르완다대학살> <시가라키에서 불어오는 바람> <미나마타> <레드헌트> <브라질 애비뉴> <루치아> <바이바이바브시카> <쇼아>

“이 땅에 강한 불신 생겨” 민가협 목요일집회, 조작간첩 폭로

대선이 불과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 때마다 어김없이 등장하는 ‘간첩’ 사건에 대한 우려가 또다시 고개를 내밀고 있다.

9일 오후 2시 탑골공원에서 열린 민가협 목요일집회에서는 최근 터진 부산 동아대 ‘자주대오’ 간첩사건과 93년 간첩조작사건으로 구속, 지난 9월 30일 만기출소한 김삼석 씨 이야기 등 간첩사건에 대한 보고가 중심을 이루었다.

동아대 사건과 관련, 이름을 밝히길 꺼려한 어느 한 직장인(수배자 가족)은 “동아대 사건을 발표하면서 1천만 원을 받고, 노동당원으로 가입했다고 증거를 대지만, 모두 자술서일 뿐 증거는 없다”며 사건이 조작되었음을 강조했다. 또 동생을 비롯해 함께 구속된 12명 모두 4박5일동안 일본 여행을 다녀온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맨 처음 구속된 학생이 어쩔 수 없이 간첩협의를 인정한 뒤 줄줄이 학생들이 엮여지기 시작했는데, 다들 대공분실에만 들어가면 ‘전 간첩입니다’고 자술서를 쓰게 된다”며 이번 사건은 온갖 협박과 감압수사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재삼 강조했다. 또 지금까지 자신은 이런 일과는 무관한 평범한 생활을 해왔는데, 이번 사건을 경험하면서 관계자 부모님을 모두 이 사회에 대한 강한 불신감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다.

김삼석(34) 씨는 문민정부 출범 후 첫 조작간첩이 된 자신이 대전교도소를 출감하는 날 그날 바로 동아대사건이 터졌다면, “김영삼 정부 5년 동안 4천여 명의 양심수들이 감옥을 드나들었고, 지금도 미행, 감시, 도청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 정부는 국민들이 민주화운동, 통일운동에 관심을 못 갖게하고 있다”면서 “이번 대선을 통해 심판하자”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이날 집회에서는 북한동포 돕기 사업과 관련해 구속된 나창순(범민련 소속) 씨가 재판과정을 통해 자신이 안기부에서 물고문 등을 당했음을 밝혔다는 사실이 전해졌으며, 또

수입개방 반대활동을 벌여온 ‘전국농학계대표자협의회’가 지난 9월11일 이적단체로 몰려 송태경(서울농대 졸업) 씨등 11명이 구속된 사실 등이 보고되었다.

“극우토론회 방영배경 밝혀라”
민언협, 방송3사 사과 촉구

8일 KBS, MBC, SBS 등 방송3사의 한국노동당 대선후보 토론회 생중계와 관련, 민주언론운동협의회(의장 김태진, 민언협)는 “방송 3사가 일제히 극우편향의 토론회를 방영한 저의가 무

엇인지 밝히고 시청자들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민언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토론회 방영이 방송외적 요인에 의해 강제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낮시간에 주로 텔레비전을 보는 가정주부, 노인층만을 겨냥, 특정 야당후보의 사상경력을 시비삼아 결과적으로 여당후보의 인기를 올리려 한 것이 아닌가는 의혹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가협 기금마련 장터

민가협은 서울대 대동제가 열리는 14-17일 학생회관 앞에서 기금 마련 장터를 갖는다. 이에 203회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석방을 위한 민가협 목요일집회는 16일 오후2시 서울대 학생회관 앞에서 열린다.

국정감사 <문민정부 철거현황>

김영삼 정부 이후 철거된 지역은 얼마나 되는가. 또 철거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한 폭력사태는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현재 재개발로 인한 철거가 진행중인 지역현황과 2천년까지 철거예정 지역은 얼마나 되는가.

국정감사 기간중 건설교통부 주택재개발과에서 추미애(내무위, 국민회의) 의원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이중 특히 철거폭력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적준개발에 관한 부분을 짚아보았다(편집자주).

지구명	건축물(동)	거주가구수		비고
		가옥주	세입자	
전체 (38개지구)	25,661	21,591	31,335	폭력행위발생 5개지구
(주)적준 (17개지구)	12,685 (49.43%)	11,703 (54.20%)	16,749 (53.45%)	폭력행위발생 2개지구

지구명	철거대상(동)	철거용역금액(천원)	비고
전체 (34개지구)	26,283	66,955,372	
(주)적준 (17개지구)	12,744 (48.48%)	31,405,972 (46.90%)	

지구명	건축물(동)	거주가구수		비고
		가옥주	세입자	
전체 (47개지구)	19,250	16,511	26,818	폭력행위발생 1개지구
(주)적준 (19개지구)	8,509 (44.20%)	6,712 (40.65%)	11,982 (44.67%)	폭력행위발생 1개지구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interpia.net • http://www.interpia.net/~rights

1997년 10월 11 일(토)

제 983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광주교도소 가혹행위 물의 도서열독권 침해 반발에 구타

교도소내 공안관련 재소자가 영치품과 관련한 마찰로 구타 및 가혹행위를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광주지역 인권단체 ‘인권지기’에 따르면, 광주교도소에 수감중인 박용(전남대 89학번), 조용근(동신대 90학번) 씨 등 양심수들은 9일 교도소측이 편지·책 등 개인 보관물품을 영치(교도소에서 보관)할 목적으로 검방(감방 검색)을 실시하려 하자, 이를 제지하던 과정에서 구타를 당했다. 특히 박 씨와 조 씨는 교도관들과 경비교도대원들에 의해 지하실로 끌려가 손과 발에 수갑이 채워지고 포승줄로 손과 발을 뒤로 묶인 채 30분간 감금당했으며, 20여 분 간에 걸쳐 발바닥과 배, 명치 부위를 구타당했다. 그러나, 광주교도소측은 구타 사실을 부인했

며, 다만 “검방을 거절했기 때문에 마찰이 있었고, 이로 인해 박 씨 등에 대한 조사가 10일 정도 결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사건의 발단이 된 영치품, 특히 책 보관과 관련해, 광주교도소측 관계자는 “도서를 10권 이상 보관할 경우 영치하도록 되어 있고, 이는 법무부령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무부 교정국 관계자는 “법무부 훈령에 그런 조항은 없고 이는 교도소 제람에 따른다”는 엇갈린 주장을 했다. 현행 행형법이나 행형법시행령 등은 이와 관련한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재소자들의 기본권(도서 열독권 등)이 교도소측에 의해 자의적으로 제한되는 상황인 것이다.

현재 광주교도소에서는 양심수들에

대해 일체 면회가 중단된 상태이며, 이로 인해 관련자들이 징계를 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한편, 재소자와 관련해 유엔이 1957년 결의한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을 보면, ‘수감, 연쇄, 차고 및 구속복 등 계구는 결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되며’(제33조), ‘모든 시설은 모든 범주의 피구금자가 이용할 수 있는 오락적, 교육적인 도서를 충분히 비치한 도서실을 갖추어야 하고, 피구금자들이 이를 충분히 이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제40조)고 명시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낮은 인권수준을 드러내주고 있다.

공안당국 “토론회도 안돼”

학생운동 혁신 토론회 불발 위기

‘학생운동의 혁신’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마저도 공안당국에 의해 사전에 봉쇄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이창복, 전국연합)과 서울대총학생회는 오는 12일 “21세기 민족의 진로와 학생운동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학교측이 불허방침을 내림에 따라 토론회의 성사가 불분명해졌다.

서울대총학생회측에 따르면 “학교측의 불허방침은 좌익사범 합동수사본부측에서 ‘한총련을 재건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토론회이므로 안된다’는 압력을 넣은 것”이라고 한다.

전국연합은 “한총련을 재건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는 공안당국의 주장은 사실도 아니며 설사 그런 의견이 토론회에서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민주적인 주장”이라며 공안당국을 강력히 규탄했다. 또한 “학생운동의 진지한 논의를 모아 보고자 마련한 토론회를 방해하는 것은 일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만화사냥방



-1997 광주교도소폭경

<인터뷰> 김삼석(남매간첩단 사건 복역) 씨 “김영삼 정부에 희망도, 기대도 없었다”

남매간첩단 사건으로 93년 9월 구속, 지난 9월 30일 대전교도소에서 출소한 김삼석 씨를 뒤늦게 만났다. '김삼석·김은주 남매간첩단 사건'은 김영삼 문민정부 출범 이후 최초로 터진 조작 간첩사건으로, 이 사건은 이후 안기부 프락치 배인오 씨의 양심선언 등으로 94년말까지 계속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편집자주>

1. 출소소감은

많은 양심수를 두고 나혼자만 나와서 미안한 마음 가득하다. 대전교도소만 해도 40년 이상 복역한 분들을 포함해 15명의 장기수가 있다. 그리고 딸아이 '하나' (구속당시만 해도 엄마 뱃속에 있던 아이가 어느새 다섯살이 되었다)를 실컷 안아볼 수 있게돼 기쁘다.

2. 감옥 생활을 통해 얻은 것과 잃은 것이 있다면

반반이다. 우선 잃은 것은 교묘한 김영삼 정권 내내 감옥 안에 있다보니까 더욱 치열하게 자주통일운동에 함께 하지 못한 것인데, 이 점에 대해 죄송하다. 또 얻은 것은 다양한 독서와 일반수의 생활을 보면서 사회의 다양한 면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것이다.

3. 문민정부 들어 안기부에 의한 첫 구속자인데, 4년이 지난 지금 문민정부의 인권상황 및 안기부의 변화에 대해 짚어본다면?

문민정부라 생각해 본 적이 단 한번도 없다. 김영삼 정부는 3당 야합을 통해 탄생한 정권이라는 태생적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기대나 희망을 건 적이 없다. 실제 지난 4년동안 60여 명의 열사가 문혔고, 4천여 명의 양심수가 발생했다. 김영삼정부 들어 첫 구속된 내가 나오던 바로 그날 동아대 자주대오 사건이 터졌는데, 집권 말기 간첩조작사건이 연이어 터져나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4. 당시 안기부 내에서 당한 불법수사

및 성추행, 잠안재우기 고문 등에 대한 기억을 떠올려 본다면(93년 12월 17일 첫 공판에서 김삼석 씨는 안기부 수사관들이 임신 8개월인 부인을 연행하겠다는 등의 협박과 구타, 잠안재우기, 성고문 등을 폭로하였으며, 검찰 또한 폭언과 강압으로 수사하면서 묵비권을 인정하지 않았고 증언했다)

몸은 그래도, 마음으로는 이겨내야겠다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다. 수사당국은 유도신문을 하면서 '협조해주면 동구라과에서 공부하게 해주겠다'는 식의 유혹을 했는데, 고문당한 사실보다도 수사를 당해본 경험이 거의 없어 고생을 많이 했다. 활동가라면 수사에 대한 기본지식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5. 김삼석 씨는 안기부의 강압적 자백 강요를 고발하기 위해 변호인 접견도중 벽에 머리를 들이박는 등 자해행위를 했다. 또 머리를 받고 쓰러지는 과정에서 고리뼈가 구부러졌고, 목에는 기부스를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앞서 말했듯이 수사에 대한 대응방법을 알지 못하다보니 너무 당한 측면이 있다. 몸이 고생한 것인데, 스스로 자해한 것은 나를 이기기 위한 하나의 행동이었다. 수사과정에서 묵비권조차 행사하지 못하고 유도신문에 대답하면서 수사양만 늘어나는 상황에서 수사를 축소·중단할 필요가 있었다. 더이상 안기부의 작품만들기에 맡겨들여선 안된다고 생각해, 그런 행동을 하게 됐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본다.

6. 결국 아무런 증거없이 재판을 받고, 국보법 위반으로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았는데, 억울한 생각은 없는지.

안기부가 언제 증거를 갖고 있었는가. 증거 자체도 조작이니까 말이다. 안기부는 김일성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 『김정일 선집』 등을 누군가를 시켜 우리에게 전달한 뒤, 이것을 증거로 만들었다. 이는 안기부 프

락치 배인오의 양심선언을 통해 드러났다. 프락치까지 이용해 증거를 만든 것이 아무런 도움이 안된 것이다. 늦게나마 국보법어기기 운동에 참여하게 된 것이 자랑스럽다.

7. 93년 9월 사건 발생당시부터 안기부의 프락치공작에 의한 사건이라고 밝혔고, 이후 94년 11월 독일 베를린에서 배인오(당시 '남누리 영상' 대표, 본명 백종용) 씨가 양심선언을 통해 김삼석 남매간첩사건이 조작된 것임을 밝혔는데, 왜 항소심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생각하는가

담당인 이기욱 변호사가 배인오의 양심선언 소식을 전해왔다. 하지만 정권에 대한 기대가 없었기 때문에 사법부에 대한 기대도 없었다. 안기부에서의 수사진술서가 검찰에 그대로 인용되고, 다시 그것이 판결문에 그대로 적용되었다. 이 사건이 조작되었다는 가족과 변호사의 변론은 재판과정에서 받아들여질 틈이 없었다.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 안기부의 프락치 작업이 백인하에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동식 사건, 김형찬 사건 등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제2, 제3의 배인오(프락치)가 항상 우리의 배를 같이 베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우리 곁엔 항상 안기부 프락치가 같이 살고있다고 본다.

8. 93년 10월 28일 [김삼석·김은주 간첩조작사건 대책위] 구성, 12월10일 일본 [김삼석·김은주 남매를 구원하는 모임] 등이 결성되어 지원사업을 해왔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일본 [김삼석·김은주 남매를 구원하는 모임] (대표 마찌이 시게끼, 변호사)과는 한 달에 한 번 편지를 주고 받았다. 그리고 그 모임회 회원들이 일본에서 시장바다를 돌아다니는 척택에 시장에서 일하시는 많은 재일동포들이 물문은 손으로 석방탄원서에 서명을 해주셨다. 그것은 나에게 많은 힘이 되었다. 일본 관련 구속자 뿐 아니라 다른 통일인사들에게도 뜨겁게 성원을 주셔서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다. 앞으로 지지과 성원을 바란다. 또한 인권운동사랑방을 비롯해 민가협, 민변 등 인권단체들에게 고마움을 느낀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interpia.net · http://www.interpia.net/~rights

1997년 10월 14 일(화)

제 984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통신인 61.6% '자기검열'

통신연대 설문조사...외부제재 경험도 30.4%

PC통신 공간에서 '검열'이 가져오는 위축효과는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보통신 검열철폐를 위한 시민연대(대표 장여경, 통신연대)가 천리안, 하이텔, 유니텔, 나우누리 등 4개 통신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13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 통신인들이 '자기검열'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유효데이터 2백73개 가운데,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글을 올릴 때 긴장감이나 구속감을 느껴 표현의 정도나 사용어휘를 조정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61.6%에 달했으며, 전체의 28%는 스스로 자신이 올린 글을 삭제한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설문조사팀의 이혁수 씨는 "통신인들이 일상적으로 외부 및 자기검열을 의식하고 있으며, 검열과 제약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또한 응답자의 30.4%는 통신서비스사나 정부에 의해 제재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밝혔으며, 제재받은 게시물의 과반수(52.1%)는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한 비판적 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응답자의 대다수는 '국가기관에 의한 검열은 절대로 안되고'(65%) '통신서비스사 검열도 불필요'(63.4%)하다는 반응을 나타냈으며, '전기통신사업법이 국민의 정보기본권과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없다'(76.2%)고 답변했다. 반면 검열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도 31.5%나 차지했는데, 초중고생 등 19세 이하의 다수가 검열의 필요성을 제기한 반면, 학력이 높을수록 검열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이

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특히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5-10% 포인트 이상씩 진보적인 의견을 나타내는 특징을 보였다.

통신사 '접속 차단 소프트웨어' 운영 한편, 통신연대는 "민변, 전국연합, 민주노동당과 공동으로 4개 PC통신사 앞으로 '검열'과 관련한 질의서를 보냈으나, 현재까지 답변서를 보낸 곳은 나우누리 뿐"이라고 밝혔다.

나우누리측은 답변서에서 "특정주소의 접속을 차단하는 소프트웨어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정보통신부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공문에 의해 처리된다"고 밝혔다. 그리고 "정규직 4명과 계약직 7명이 검열(모니터링)을 담당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나우누리측은 또 97년 동안 전기통신사업법 53조 및 54조에 근거해 외부에서 이용자 정

보를 요청한 건수는 84건에 달하며, 집시법 5조2항에 해당되는 게시물 43건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통신연대는 이러한 조사결과 등을 묶어 97년 검열백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고 박순덕·김준배 폭력살인 규탄대회

박순덕열사 비상대책위 등의 주최로 지난 11일 오후 1시 서울역광장에서 '철거민 고 박순덕·학생 김준배 열사 폭력살인 규탄대회'가 7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자리에는 철거민과 학생을 비롯해 광주지역에서 김준배열사 비상대책위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서울역 집회를 마친뒤 명동성당까지 가두행진을 벌였다.

한편 박순덕열사 비대위는 사회·민주단체에 철거민 고 박순덕·학생 김준배 열사에 대한 투쟁을 공동으로 벌이기 위한 전국비상대책위를 제안하고 나섰다.

제2회 인권영화제 연장상영

때: 10월 17(금)-19일(일)

곳: 명동 향린교회(명동성당 맞은 편 골목 위치)

날짜	대예배실	향우실
17일(금)	2:00 명성, 그 6일의 기록 3:30 새의 노래 6:00 브라질 예비뉴 7:30 양도살자	
18일(토)	2:00 레드헌트 3:30 천황의 군대는 진군한다 6:30 르완다 대학살	2:00 바이바이 바브시카 3:30 쇼아 1
19일(일)	2:00 시가라키에서 불어오는 바람 4:00 미나마타 6:10 루치아	2:00 갈릴리에서의 결혼 4:10 쇼아 2

김준배 유가족 탄원서 제출 "진상규명·특진제 등 폐지"

경찰의 검거과정에서 지난 9월 16일 숨진 김준배(27·한총련 투쟁국장) 씨 유가족측은 13일 청와대와 국무총리, 대검찰청,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앞으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보냈다. 유가족들은 탄원서에서 △진상규명 및 재수사 촉구 △수배자 검거경찰관에 대한 특진제 및 포상제 폐지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했다.

한편, 최근 들어 김준배 씨 시신이 안치된 전남대병원 영안실 주변에는 경찰측의 원천봉쇄 또는 불심검문이 삼엄하게 진행되고 있다. 김준배 열사 비상대책위 관계자에 따르면 집회가 있는 날에는 불심검문이 더욱 삼엄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12, 13일 불심검문으로 시민들의 영안실 출입을 통제해 한때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으며, 11일에는 경찰의 원천봉쇄로 국민대회가 무산되었다.

..... 주요 공판 안내

▶14일(화) 이선정/김량남(국보법 찬양·고무 등) 이일(한총련, 국보법 찬양·고무 등)

-이상 오전 10시, 311호, 합의21부, 선고 정영훈(국보법 찬양·고무 등) 박관조(한총련, 국보법 찬양·고무 등) 이천재(범민련, 국보법 간첩 등) 이종린(범민련, 국보법 찬양·고무 등)

-이상 오후 2시, 311호, 합의21부, 속행 김대완(한총련, 국보법 찬양·고무 등) 이경석(한총련, 국보법 편의제공 등) 송유진(국보법 간첩 등)

-이상 오후 4시, 311호, 합의21부, 신건 박휴상(국보법 찬양·고무 등) 원진욱(한총련,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이상 오전 10시, 319호, 합의23부, 속행 유석상/홍석범/최예경(고려대 '청년' 사건, 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후 2시, 319호, 합의23부, 속행 박상은(한총련, 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후 2시

홍성이(한총련, 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후 3시 -이상 319호, 합의23부, 신건

▶15일(수) 장전섭(한총련, 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후 2시, 오명록(한총련, 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후 4시, -이상 319호, 합의22부, 신건

강민구(한총련,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오전 10시, 합의 2부(항소심), 신건

▶16일(목) 장민호(간조불 침입) 오전 10시, 319호, 합의23부, 선고 장운영(국보법 등) 오전 10시, 522호, 8단독, 선고

▶17일(금) 오진석 외8(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 10시, 319호, 합의22부, 선고

장정일(음란문서제조 등) 오후 4시, 418호, 합의1부, 속행 박순봉(국보법) 오전 10시, 421호, 합의3부, 선고

김성규(국보법 등) 오전 10시, 302호, 합의2부, 선고 강순정(범민련, 국보법) 오전 10시, 403호, 합의4부, 신건

주/간/인/권/호/름

(97년 10월 6일부터 10월 12일까지)

◆6일(월) 병무청, 98년중 선거지 및 고위공직자의 병역사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분야를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확대하도록 법제화 방안추진중/국민승리21회원 50여명, 미국대사관 방문해 통상압력 중단요구 항의서한 전달

◆7일(화) 교육부 국감자료, 정신지체아 및 지체부자유아 등을 위한 7개 특수학교 주민반대로 설립 지연

◆8일(수) 시험가동 중이던 월성원전 3호기에서 8월 사고가 발생해/민주택시연맹 서울지역본부,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노조원 5백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건설교통부장관 퇴진 및 택시완전월급제 쟁취를 위한 투쟁출정식' 가져/부산지검 공안부, 자주대오 사건으로 구속된 동아대생 임주영, 서봉만 씨 2명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하면서 간첩혐의 삭제

◆9일(목) 내무위 국감자료, 지하철공사 등 시 산하 6개 지방공사의 장애인외고용률 47.5%불과/경찰, 청소년보호법이 본격시행된 9월 1일 위반사건 단속을 강화하라는 경찰청 지시내린 뒤 일상적으로 벌이는 불심검문 대상에 청소년 포함시켜/서울지법 민사5단독 조영철 판사, 지난 1월 노동자총파업과 관련해 경찰이 병영노련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자신의 엉덩이를 두세 차례 건드린 것에 대해 소송 낸 노동자영상사업단 소속 김아무개 씨에게 국가배상 판결/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 등 시민·사회·종교단체 '대선후보 사상검증 토론회'에서 주최측인 한국노동자 토론회가 이들 단체를 친북단체로 표현한 것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키로/국제노동기구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 국내 개설

◆10일(금) 97년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대인지뢰전면금지조약을 이끌어낸 민간단체 연합체인 지뢰금지국제운동(ICBL)과 이 운동의 대표인 조디 윌리엄스를 공동수상자로 결정/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 러시아도 국제대인지뢰금지조약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혀/환경부 조사결과, 일산소각장을 뺀 모든 소각장의 비산재에서 지정폐기물 관정기준치를 넘는 유해 중금속이 검출된 것으로 밝혀져/경기여상과 학교법인 경흥학원이 학교와 재단쪽에 비관적인 교사 5명을 한꺼번에 징계해 학생들이 수업거부/교육부, 한상권 교수 제임용 탈락과 재단의 대학행정 간섭문제와 관련해 학내분규를 겪고 있는 학교법인 덕성여대 박원국 재단 이사장의 임원취임 승인 취소

◆11일(토) '공유' 대체기관으로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 출범

◆12일(일) 김종필 총재 <한겨레> 후보초청 토론회에서 안기부의 수사권 폐지를 장기적으로 추진할 뜻 비취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interpia.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7년 10월 15 일(수)

제 985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가족있는 북한으로 보내달라"

출소장기수 함세환 씨 불구속기소

출소 비전향 장기수 함세환(66) 씨가 최근 보안관찰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되었다. 기소이유는 함 씨가 각종 집회 등에서 자신의 북한송환을 호소하고 다닌 것과 함께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으며, 출소장기수와의 만남을 계속했다는 것이다.

함세환 씨 보안관찰법 위반 대전지방법검찰청(검사 최진규)은 9월 12일자로 발부된 공소장에서 함 씨가 보안관찰법 제27조 제3항, 제19조 제2항, 형법 제37조, 제38조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함 씨는 수차례 보안관찰해당 범죄를 범한 자와 회합을 가졌으며(보안관찰법 19조 2항 1), 집회 및 시위장소 출입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동법 19조 2항 2) 대전 총련 출범식 등에 참가해 자신의 북한송환 촉구와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보안관찰법을 보면 이를 위반했을 경우 1년이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동법 27조 3항).

장기수들과의 만남 불허 한편 검찰측 불구속기소에 대해 함세환 씨는 "나는 전쟁포로로서 35년간의 감옥생활을 마치고 북으로 가고 싶은데도 가지 못하고 있다. 제네바협정 118조에 의하면 전쟁포로는 전쟁이 끝나면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보내주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한 것 역시 내가 현재 보안관찰법으로 묶여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한 것"이라며 "바로 내 문제를 알리러 갔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만화상황방



광주교도소 양심수 대량징계 "4일동안 포승에 묶여 밥도 못먹어"

광주교도소의 양심수 폭행 파문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9일 교도소 당국의 검방과 책 영치에 항의하던 양심수들이 교도관들로부터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어, 14일 현재까지 소내 10여 명의 양심수에 대해 면회가 완전 금지되고 있으며, 이들에게 징계가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본지 10월 11일자 참조).

14일 광주교도소측은 "박웅(전남대 89학번) 씨, 조용곤(동신대 90학번) 씨 등에 대해 한달 간의 징계가 내려졌으며, 면회는 11월 8일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씨와 조 씨는 9일 지하실로 끌려가 폭행을 당한 당사자들이며, 이 가운데 조 씨는 실신해 병원진료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 인권단체 [인권지기]에 따르면, 14일 현재까지 면회가 허용되지 않은 양심수는 정의찬, 박웅, 강성일, 조용곤, 박수기, 주창근, 이혁, 이현민, 강기훈, 조양주, 최민, 신영덕 씨 등 12명이며, 나머지 양심수들에 대해서는 13일부터 면회가 허용됐다. 그러나 면회가 허용된 양심수들도 이번 사건과 관련한 대화가 오가는 순간 면회실에서 끌려나가는 등, 교도소측은 진상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승철, 강제학, 진의학 씨 등 몇몇 양심수들은 폭행책임자의 처벌과 교도소장의 사과 등을 요구하면서 단식 투쟁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또 김양무(광주전남연합자동위원장) 씨는 13일 면회를 통해 "기결사동에 있는 6명과 미결사동에 있는 전체 양심수가 모두 (포승에) 묶였고, (나는) 4일 동안 묶인 채 식사조차 못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 양심수들의 가족과 민가협 회원들은 10, 11일 잇따라 교도소를 방문해 교도소 당국과 면담을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구타사건에 대한 공정하고 공개적인 진상조사 △구타 관련자 및 책임자 처벌 △폭행당한 양심수에게 외부 진찰 허용 △면회 즉각 허용 △교도소장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등을 촉구했다. 또한 이들은 14일에도 광주교도소 앞에서 저녁 늦게까지 농성을 벌였다.

제2회 인권영화제 연장상영

때: 10월 17일(금)-19일(일) 곳: 명동 향린교회

날짜	대예배실 (대)/향우실 (향)
17일	2:00 명성, 그 6일의 기록/3:30 새의 노래/6:00 브라질 예비뉴/7:30 양도살자(대)
18일	2:00 레드헌트/3:30 천황의 군대는 진군한다/6:30 르완다 대학살(대) 2:00 바이바이 바브시카/3:30 쇼아 1(향)
19일	2:00 시가라키에서 불어오는 바람/4:00 미나타/6:10 루치아(대) 2:00 갈릴리에서의 결혼/4:10 쇼아 2(향)

<편집자주> 인권하루소식 11일자에 실린 "광주교도소 가혹행위 물의" 기사를 읽고 컴퓨터통신을 통해 한 익명의 독자가 글을 보내왔다. 이 의견은 교도소측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나, 이를 통해 교도소내 실태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길 기대하며 신는다.

"부정적 비판보다 입법 개선 촉구"

1. 도서 소지의 제한은 전적으로 부당한가
중전에 재소자가 일시에 소지할 수 있는 도서의 수량을 제한했던 것은 수용시설의 협소 때문으로 88년 11월5일부터 시행되어온 재소자 열독도서관리준칙 제2조에 의해서 중전에는 재소자 1인이 동시에 소지할 수 있는 도서의 수량은 누진계급 1·2급 및 미결수용자의 경우 10권 이내, 누진계급 3·4급 및 기타 재소자는 5권 이내로 소지할 수 있다고 한 제한 규정은 완전폐지 되었다. 그러나 거실내(감방) 수용인원이나 도서보관시설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 그 소지수량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인권하루소식이 전한 바대로 사건내용이 맞더라도 교도소 측의 처분이 전적으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2. 고도관의 계호권과 계구 사용
(인권하루소식)에서는 유엔이 제정한 '피구금자처우최저기준규칙'을 인용하여 우리나라의 교정행정이 위의 기준에 미달한다고 하였으나 이는 세계각국에 권고한 사항일 뿐 아무 국제법적인 구속력이 없다. 그리고 이 내용은 거의 이상론적으로 작성되어 실제로 유엔의 규칙에 완전히 적합한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은 선진국에서도 거의 찾아 볼 수 없을 정도이다.

유엔의 '피구금자처우최저기준규칙'에서는 [규율 및 징벌] 편 제33조에서 수감, 연쇄(사슬), 각종 가(枷) 및 구속복 등과 같은 계구는 징벌의 수단으로 결코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으나 우리나라 형법 제14조(계구) 편 1항에는 수용자의 도주, 폭행·소요 또는 자살의 방지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계구(포승, 수감, 사슬, 안면보호구)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당시 광주 교도소에 수감 중인 시국사범들이 교도관들의 정당한 계호권에 항거했다면 수감 등으로 이를 제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된다.

교정시설이란 일반인들에게 잘 공개되지 않은 탓으로 불법과 폭력이 만연하리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진 터에 인권하루소식의 글을 보는 사람들은 더욱 국가기관인 교도소에 대해 혐오감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이곳에 근무하는 교도관 등 공무원들은 이런 점에 대해 무척이나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다. 특이나 시국관련 재소자들과의 사소한 마찰도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키므로 더욱 조심스러울 것이다. 이번 일도 그 내막을 공개적으로 알 길이 없으므로 본인도 무척 진실이 궁금하고 답답하다.

현행 형법 관련 법규가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많은 것은 사실이나 매년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정되고 있으므로 자주 부정적으로 비판하지만 말고 적극적인 입법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된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interpia.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7년 10월 16 일(목)
제 986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인권정책 공약 후보에 한표를

앰네스티, 대선 후보들에 공개서한

세계 최대의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국제사무총장 피에르 사네, AI)는 16일 한국의 모든 대통령선거 후보들에게 인권증진을 위한 구체적 조치를 대선공약화할 것을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내왔다. 또한 AI는 "현재까지 어느 후보도 인권의 주요 사항들에 대해 견해를 밝히지 않았다"면서, 대선 후보들이 이 서한에 대한 공개입장을 밝힐 것과 한국의 유권자들이 지지후보를 결정하는 데 있어 이들이 밝히는 인권정책을 고려할 것을 희망했다.

수단으로 남용되어온 국가보안법의 개정과 노동관련법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것 등이 지적되었다. 노동법과 관련해 AI는 ILO협약 제 87조(1948년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조약)와 제 98조(1949년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조약) 기준을 요구했다. 특히 98년은 한국정부 수립 50주년의 해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유엔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의 해로 "인권교육 및 훈련에 대한 개발을 공약화할 것"을 강조했다.

인권교육을 공약으로

AI가 대선후보들에게 요청하는 권고사항은 크게 △기본적 인권을 회복할 것 △인권보호장치를 증진할 것 △고문과 모든 형태의 가혹행위를 종식할 것 △인권을 위한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 △가압한 국제조약을 철저히 이행하고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 등이다.

AI는 모든 양심수의 석방과 장기수들에 대한 재심 실시, 전향제도 폐지와 아울러 인권에 대해 행정부와 인권단체들과의 공조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약속을 요구했다. 또 인권보호 장치 증진을 위해 과거 및 현재 한국에서 발생한 모든 인권침해에 대해 완전·공평하고 독립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함을 언급했다. 특히 80년 5월 광주에서 벌어진 살인행위를 비롯해 과거정권하에서 자행된 고문, 정치적인 체포, 불공정한 재판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인권보호 증진을 위한 '국민인권기구'를 설립을 위해 대중적 의견을 수렴할 것과 사형제도 폐지가 주요하게 요구되었다.

그밖에 모든 대통령 후보들은 고문과 모든 형태의 가혹행위 종식을 위해

"법집행 공무원들의 교육과정에 인권법에 관련한 교육을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강조했다. 96년 11월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등에서 제출된 권고사항이 여전히 이행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한국이 가입한 국제조약들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영화탄압·검열 항의

부산국제영화제 참석자

14일 영화인들과 관객 등 1백50여 명은 부산국제영화제 상영장 주변에서 인권영화제 및 큐어영화제에 대한 당국의 탄압과 부산국제영화제 사전심의에 항의하는 집회를 가졌다. 참가자들은 이날 오후 4시45분경 부산 아카데미극장 앞에서 집회를 가진 데 이어 PIFF 광장까지 행진을 벌였다.

납고생 90% "음란물 경험있다"

단속 대신 비판적 시각 키워줘야

서울시내 인문계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 5백2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바에 따르면 학생들의 상당수가 다양한 음란물을 접촉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471명(90.1%)이 성인용 만화책을 본 경험이 있으며, 성인용 비디오영화 4백50명(86%), 포르노 비디오 4백41명(84.3%), 음란 컴퓨터 프로그램 408명(78.0%)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략 중학교 시절 처음으로 음란물을 보기 시작했고, 대부분 친구에게 빌려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음란물을 본 뒤 모방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정도는 '매우 강하게 느낀다'고 답한 학생이 16.4%(85명)이나 되었으며, '조금 느낀다'고 대답한 학생이 34.9%(18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면에 계속)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검거현황

(97 국정감사 내무위 자료)

연도	구속	불구속	이첩	계
90년	349	110		536
91년	213	8		323
92년	193	73	11	277
93년	112	82	18	212
94년	338	107	21	466
95년	243	31	11	285
96년	460	54	21	535
97년	383	62	15	460
총계	2,291	527	97	3,094

재소자 구타 광주교도소 고발키로 변호사 "대한변협 정식 보고 예정"

광주교도소 재소자 폭행 사건과 관련해, 13일 박용(전남대 89학번, 폭행피해자) 씨를 접견했던 김균영 변호사는 "이 사건을 대한변협사협회에 정식 보고해 조사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본지 10월 11일, 15일자 참조).

김 변호사는 "접견을 통해 박용 씨의 거동이 불편하고 발바닥에 상처가 있는 것을 확인했으며, 이는 최소 전치2주 이상의 진단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소자들의 상처를 법원에 "증거보전신청하자"는 가족 및 인권단체측 요청에 대해선 "좀 더 검토를 해보자"는 미온적 태도를 보였다.

지난 9일 김방 및 물품영치를 둘러싼 양심수들과 교도관들의 마찰 과정에서 벗어난 이번 사건으로 박용 씨를 비롯한 양심수 12명에게 징계가 내려졌으며, 추창근(호남대) 씨의 이빨이 깨지는 등 양심수 다수가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광주지역 인권단체들이 진상조사 등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교도소 당국은 이들의 면담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 한편, 광주지역 변호사들이 이번 사건에 대해 소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가족들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사건 관련자가 십수명에 달하는 까닭에 가족 및 인권단체측은 다수의 변호사가 사건 해결에 나서줄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변호사들은 국가기관을 상대로 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재소자 가족들과 광주지역 인권단체 등은 관련 교도관 및 박광생 교도소장을 고소하기로 방침을 결정했다.

(1면에서 계속)

이는 14일 기독교연합회관에서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주최로 마련한 "건강한 청소년 성문화 창출을 위한 서울시민 대토론회"에서 '음란물과 청소년 성비행'의 주제로 발표된 김준호(교려대 사회학과)·김혜원(이화여대 심리학)

2천만 여성이 바라는 희망 12가지

한국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 지은희)은 15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2천만 여성들의 요구사항을 정리한 소책자를 펴냈다. 「여성유권자 지침」이라는 이 책자에 실린 여성들의 희망 12가지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1. 가정폭력·성폭력·학교폭력으로부터의 보호
2. 초등학교 완전급식 및 만 5세 아동 무상교육 실시/ 여성노인을 위한 장기요양 의료서비스 시설확대
3. 각급 선거에서 여성 30% 공천 및 국무위원 중 30% 여성 할당
4.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산업안전보건, 고용, 임금, 사회보장, 모성보호, 휴일 휴가 등에 대한 균등한 대우/ 가내노동자 보호법 제정
5. 출산비용 전액 의료보험에서 지급/ 여성노동자·농민, 가내노동자 출산시 90일 유급휴가 보장
6. 연금소득 부부공유재산으로 인정/ 1인1연금제 도입
7. 부계 혈통 중심 호주제 폐지
8. 여성농민에게 농업기술교육 참여기회 확대/ 보건소에 여성농민 평생건강관리 시스템 도입
9. 입시위주 교육제도 개혁/ 사교육비 절감 위한 공교육 기능 강화/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규제책 마련
10. 생필품 가격 안정 및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 활성화
11. 환경정책 수립 및 집행에 여성 참여 제도화
12. 한미행정협정 개정을 통해 미군에 의한 여성인권유린 방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 및 적극 외교 실시

씨의 조사결과이다. 김지혜(성폭력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씨는 "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를 청소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방치하거나 유통시키고, 게임으로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성인들이 존재하는 한 청소년들의 성문제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제껏 음란물에 대한 대책으로 항상 규제와 단속 및 심의부분에만 비중을 두어왔는데 이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면서 "이들 학생 스스로 자신들의 성에 대한 입장과 시각 및 당면문제에 대해 보다 능동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모색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행사와 동정

- 청년 1만인 선언 기자회견
 - 때: 16일 오후 2시
 - 곳: 여의도 여성백인회관 6층 강당
- 장애인종합법 제정을 위한 워크숍
 - 때: 17일(금) 오후 7시
 - 곳: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강당 (☎ 521-5364)
- 97 여성문화한마당 "우리 선택해요 평등여는 대통령을"
 - 18일 오후 2시 · 대학로 마로니에
 - 주최: 한국여성단체연합 (☎ 273-9535)
- 한반도와 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제2회 한일공동심포지움
 - 때: 21일(화) 오전 10시 - 오후 5시
 - 곳: 서울지방변호사회관
 - 주최: 한일공동심포지움 일본측 실행위원회, 전국연합 (☎ 921-4090)
- 2차 산업안전보건활동가 양성과정
 - 때: 24일 오후 1시-25일 오후 1시
 - 곳: 유성 유스호텔
 - 문의: 노동과 건강연구회 교육센터 (☎ 3273-6076-8)
- 50돌 맞이 제주 4·3 역사순례
 - 제주 4·3 제50주년 기념사업추진 범국민위원회는 98년 1월 16일(금)-18(일) 4·3 유적지 순례를 한다. 단 한라산 등반을 희망하는 사람은 1월 16-19일로 신청이 가능하다. (☎534-4843)
 - 국민승리 21 사무실 이전
 - 주소: 마포구 도화동 50-1 일진빌딩 406호
 - 전화: 701-9088 · 전송: 701-9087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interpia.net · http://www.interpia.net/~rights

1997년 10월 17 일(금)

제 987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안기부, 다시 물고문

범민련 나창순 씨 7일간 항의단식투쟁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유훈로 여겨지는 물고문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 지난 7일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 심리로 311호 법정에서 열린 재판에서 나창순(65·범민련 소속) 씨는 지난 7월 3일 안기부에 연행되어 20여일간 조사를 받으면서 물고문을 당했다고 폭로했다(관련진술 2면). 아울러 나 씨는 수사관의 가혹행위로 인해 19일 새벽 2-3시경 앵블런스에 실려 인근 병원에서 머리 초음파 촬영을 받았다고 밝혔다. 물고문을 당한 직후 나 씨는 이에 대한 항의와 차후 재발방지를 요구하며 일주일간 단식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상씩 조사를 받았으며, 이들은 자백을 강요하면서 삼각 췌만 남기고 옷을 다 벗긴 채 얼굴을 중심으로 모든 부위를 구타했고, 무릎을 꿇게 하고 두 손을 번쩍 들게 한 상태에서 허벅지를 밟았으며, 옆구리를 구두발로 찼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난폭한 욕설과 협박은 물론 얼굴에 가래침을 뱉기까지 했다고 나 씨는 밝혔다. 나창순 씨는 모두진술에서 "지치고 지친 몸이 되어 잠소구별없이 쓰러질 지경이고 살아있는 몸이 너무 구차스러웠다"고 토로했다.

물고문은 연행된 지 16일째 되던 7월 18일 피의자 조서에 서명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다.

나씨가 모두진술에서 밝힌 바에 따라

면, 저녁식사시간에 술을 마신 이들을 포함해 수사관 7명이 자신을 담요로 덮어씌우고 지하 골방으로 데리고 가 눕혀놓고 얼굴에 포폭처럼 물을 쏟아 부었다고 한다. 그리고 몸이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서 수사관은 강제로 피의자 조서에 무인(손도장)을 찍었다. 그 뒤 나 씨는 심한 호흡곤란을 일으키며 의자에서 쓰러져 몇 시간만에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밖에도 나 씨는 물고문을 한 7월 18일을 포함해 세 번 서초경찰서 유치장에 잠을 자러 가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튿날인 7월 19일 아침 8시경부터 나 씨는 안기부에서의 폭행과 물고문 등 가혹행위에 대한 항의와 이후 이런 일이 두번 다시는 되풀이되어선 안된다는 생각으로 25일까지 7일간 단식투쟁을 벌였고, 이러한 가혹행위 사실은 7월 재판과정에서 나 씨의 모두진술을 통해 외부로 알려졌다.

한편 나창순 씨의 다음 재판은 21일로 예정되어 있다.

북한동포돕기 관련 구속

나창순 씨는 지난 7월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가 북녘동포돕기 성금을 일본에 있는 범민련 공동사무국으로 전달한 것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혐의로 이종린(의장 권한대형) 이천재(부의장) 정효순(대전충남연합 의장) 씨 등 3명과 함께 구속되었다.

혐의사실에 대해 나창순 씨는 "북녘동포돕기 성금이 당연히 대한적십자사로 전달되는 것으로 알았으며, 범민련 공동사무국 박용이라는 이름도 안기부에 연행되어 처음 들었다"고 밝혔다.

안기부에 도착 당시부터 나 씨는 이 사실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안기부 수사관들은 "민자통 회원들에게 북녘동포돕기 성금을 범민련 공동사무국의 박용에게 송금한다는 것을 보고하고 모금을 했다"고 자백할 것을 강요했다고 밝혔다. 나 씨는 3일부터 계속 수사관 7-8명에 의해 하루 12시간 이

만화사랑방



<나창순 씨 모두진술서>

“열십자로 눕혀놓고 물을 얼굴에다
폭포처럼 쏟아 부었습니다”

저에게는 하루일과중 늦은 밤 10-11 시경에 서초경찰서 유치장에 들어가는 일이 유일한 또는 내집 안방에서 쉬는 것 같은 편안한 느낌의 낙원이었습니다. ... 17일 밤 이날 저녁 식사후 수사관 7명중 여러명이 술을 마시고 들어와 조사실에는 술냄새가 진동할 정도였습니다. 밤 11시경 저의 진술서로는 마지막 8권쯤으로 되어 보이는 것을 수사관이 다른 곳에서 작성해온대로 중간쯤을 제가 옮겨 쓰고 있던 중 수사관이 말하기를 진술서는 이만 다음날 쓰기로 하고 지금부터는 피의자 조서에 서명날인을 하자했습니다. 밤이 너무 늦었으니 수사관들만 믿고 (중략) 초고속으로 훑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속히 자필서명하고 무인으로 간인까지 찍으라는 제촉의 감압이었습니다. 제가 피의자 조서를 대충 읽어보니 처음부터 박용이라는 사람은 제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북쪽동포돕기 모금을 박용에게 송금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를 부인하니까) 술먹은 수사관을 합친 7명이 저를 둘러싸고 물을 여러병 담아와 지정된 의자에 앉아 있는 저를 한 수사관이 머리채를 휘어잡아 고개를 뒤로 제쳐 붙들고 있고 또 한 수사관이 코와 얼굴에 물을 마구 부어댔습니다.

밤 12시경 다시 7명의 수사관이 하는 말이 아래층 고문실에 가서 본격적으로 고문하자고 했습니다. 제가 사용하던 세수수건으로 제 눈을 가리고 저를 이끌고 조사실을 나갔습니다.

“아래층 고문실에서 본격적으로
고문하자”

숙직실 같은 곳에서 담요를 한장 가지고와 제 머리 위에서부터 덮어씌우고 ... 골방같은 곳으로 데리고 들어가 눈가림을 풀고 저를 열십자로 눕혀놓고 물을 제 얼굴에다 폭포처럼 얼마동안 쏟아 부었습니다. 그로부터 저는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얼마동안을 지났는지 정신을 차리고 보니 아래층 바닥에 눕혀져 있었습니다. 정신만은 총명한테 숨이 몹시 막힐 지경의 호흡곤란으로 몸은 완전히 늘어져 움직여지질 않았고 숨만 몹시 가빠 말을 전혀 할 수 없었습니다. ... 늘어진 제 팔을 몇 수사관이 붙들고 제 손 엄지에 인주를 묻혀 수사관의 일방적 의도대로 작성한 피의자 조서의 간인을 빠짐없이 찍었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위층 조사실로 7명의 수사관들이 떠메고 올라가 조사실의 제 지정의자에 앉히고 그 피의자 조서에 서명하라는 것입니다. ... 저는 심한 호흡곤란으로 몸을 가눌 수 없어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때 비로소 수사관들이 당황하여 천대에 눕히고 물에 흠뻑 젖은 추리닝 상하의를 벗기고 헝겊으로 제가 입고 온 남방셔츠로 하의는 조사실의 유니폼인 다른 추리닝으로 갈아 입히고 물이 줄 줄 흐르는 추리닝 상하의는 의자에 걸쳐 넣어 말리고 있었습니다. 호흡곤란으로 숨이 차 말 한마디 못하고 잠도 못이루면서 몇 시간 된 숨소리가 계속 나니까 그때 비로소 의사를 불러 몇 번씩 왕진하는 등 난리법석을 부렸습니다. 현장에 의사가 와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느냐고 물으니깐 한 수사관이 아무일도 없었는데 조사를 받던 중 갑자기 충격을 받았는지 그냥 쓰러졌다고 했습니다. ... 새벽 2-3시경 앰블런스에 실려 가까운 병원에 도착하여 제 머리 부분을 여러 번 초음파 촬영을 하더니 머리부분에 이상이 없다는 진단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다시 앰블런스에 실려와 취조실까

오늘의 인권영화
2:00 <명성, 그 6일의 기록>
3:30 <새의 노래>
6:00 <브라질 예비뉴>
7:30 <양도살자>
곳: 명동 향린교회 대예배실
제2회 인권영화제는 오는 19일까지 명동 향린교회에서 계속됩니다.

지들 것에 들려왔습니다.
청년 1만인 선언운동
“전노 사면·정략적 개헌 반대”

80년대 민주화운동의 선두에 섰다가 현재는 각계에서 활동중인 청년들이 전두환·노태우 사면론과 정략적 개헌논의 반대를 위한 1만인선언 운동에 나섰다. 16일 오후 2시 여성백인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97 청년선언 발의자들은 “부패한 정치권과 보수회귀적인 움직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나섰다”며 오는 11월말까지 선언운동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1만명을 조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선언에는 권용목(전 민주노총 사무총장) 씨를 비롯해 노동·농민·정치·법조·언론·문화 등 각 부문에서 85명이 발의자로 참가했다.

김준배 씨 장례 18일 예정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전제

지난 달 16일 경찰의 검거과정에서 추락해 사망한 김준배(전 한총련 투쟁국장) 씨의 장례가 오는 18일로 예정되었다. 15일 기자회견을 가진 ‘김준배 열사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김준배 씨의 장례를 ‘민주국민장’으로 치르고 김 씨를 망월동 묘역에 안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비상대책위는 이번 사건에 대한 경찰의 책임있는 답변을 장례의 전제로 요구하고 있어 장례가 진행될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비상대책위는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16일 사망 및 부검, 17일 현장검증, 수사종결 발표 등 사망사고에서 찾아보기 힘든 신속한 사건처리는 사건의 축소·은폐 의혹을 부추기기에 충분한 것이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검거과정의 진상 규명 △도철호 씨 등 진압경찰 24명에 대한 구속수사 △경찰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시국사범 검거와 관련된 특별진급제와 포상제 폐지 △유가족 조문과 배상 등을 경찰에 촉구했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interpia.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7년 10월 18 일(토)
제 988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청송감호소 인권유린 추궁 법무부 국정감사, 조홍규·안상수 의원

독직폭행·직권남용 혐의
광주 교도소장 고발

17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조홍규(국민회의) 의원은 청송보호감호소의 인권유린 행위를 중단시키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청송감호소 출소자인 윤치고(43) 씨가 소내에서 교도관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하고 잠안제우기 및 1년간 독방에 감금되는 등 심한 인권유린 행위를 당했다”고 지적하면서 “윤 씨가 주장하는 고문과 폭행이 사실이 아니라면, 청송감호소측은 왜 윤 씨가 제기한 재정신청에 대해 허위로 지문을 조작해 재정신청 취하서를 냈느냐”고 추궁했다. 윤 씨는 감호기간 중에 자신이 당한 폭행을 검찰에 고소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아, 법원에 재정신청을 한 바 있다. 또한 지난 9월 23일 한국문서감정원은 재정신청 취하서의 윤 씨 지문이 다른 문서에서 베껴낸 것이라는 감정결과를 내놓았다.

것은 윤 씨에 대한 고문과 폭행을 감추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즉각적인 재수사를 법무부장관에게 촉구했다. 아울러 조 의원은 “고문·폭행과 허위문서 작성에 대해 청송감호소측의 책임을 묻고 관련자를 색출해 처벌하라”고 주문했다.

올해 징벌방 수용 3천7백여 명 또한, 신한국당 안상수 의원은 “97년 1월부터 8월 20일까지 교도소 징벌방에 수용된 연인원이 3천6백72명에 달한다”며 “징벌실의 구조를 밝히고, 식사제한 및 포승과 수갑을 채운 채 벌어지는 가혹행위 여부를 밝히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특히 청송보호감호소와 관련, △재소자 현황 △감호선고 당시 죄명별 분류 및 선고형량별 분류 △재소자의 연령별, 남녀별 분류 △재소자들의 감호소 수용기간 분류 △청송감호소 재소자들이 법무부나 검찰, 기타 인권단체에 제출한 진정서 내역 등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광주교도소 재소자 폭행 사건과 관련, 피해 재소자 12명의 가족들은 16일 박장생 광주교도소장 등 교도소 관계자들을 독직폭행 및 직권남용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가족들은 고발장에서 “교도소 당국이 9월 검방에 항의하던 수명의 양심수들을 폭행한 데 이어, 같은날 저녁 10시경 또다시 다수의 재소자들을 구타해 신영관(5036번) 씨의 이빨을 부러뜨렸고, 장형욱(5028번) 씨가 눈을 다쳤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도소측이 구타사건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재소자들의 접견을 금지시키고 있다”며 “교도소내 인권침해와 폭력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벌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광주지방변호사회는 이 사건을 인권위원회(인권위원장 임원배 변호사)에 공식적으로 내려보냈으며, 이에 따라 인권위원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원회는 오는 20일 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폐업출판사 사장 등 3명 국보법 구속

92-94년도에 출판된 책을 문제삼아 현재는 영업을 중단한 출판사 사장 등 관련자를 구속하는 ‘황당함’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9일 정우창(현 회사원·구 이웃출판사 사장), 김남중(현 하원운영, 영업부장), 이민재(현 회사원, 편집부장) 씨 등 3명은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연행·구속되었다. 문제의 책자는 이웃출판사가 발행한 『사실주의 서정시 강좌』(92년 발행) 『조국통일론』(93년) 『통일만들기』(94년) 『벗이여 어서 오게나』(94년) 등 4권이며, 이웃출판사는 94년 이후 재정상의 이유로 책 출판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국 지난 7월 문을 닫았다. 출판된 지 3-5년이나 지나, 절판되어 구하기조차 어려운 책을 문제삼아 관계자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시킨 이번 사건은 경찰의 건수올리기 수사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인권영화제 연장공연
장소: 명동 향린교회
▷ 18일(토)
·대예배실- 2:00 레드헌트/ 3:30 천황의 군대는 진군한다/ 6:30 르완다 대학살
·향우실- 2:00 바이바이 바브 시키/ 3:30 쇼와 1
▷ 19일(일)
·대예배실- 시가라키에서 불어오는 바람/ 4:00 미나미타/ 6:10 루치아
·향우실- 갈릴리에서의 결혼/ 4:10 쇼와 2

“일본 가서 답판 짓겠다” 한국후포구, 명동성당 농성 93일째

한국후포구 노동자들이 일본원정에 나설 예정이다. 이들은 “회사내 용역강제의 즉각 철폐” 등을 요구하며 17일 현재 93일째 이르는 명동성당 농성투쟁을 벌여왔다. 또한 노동부 국정감사 등을 통해 회사측의 불법용역고용 사실이 드러나고, 회사와 용역강제 등이 검·경에 고발되어 있지만,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다.

노동부 국감에서 사실폭로 이에 따라 후포구 노동자들은 회사지분의 80%를 가지고 있는 일본후포구 사장 가와모토 씨와의 답판 및 일본 내 여론작업 등을 위해 직접 일본으로 갈 계획이다.

한편, 후포구 노동자들은 지난 12-14일 울산지역을 순회한 데 이어, 오는 20일부터 [전국 구속·수배·해고노동자 원상회복을 위한 투쟁위원회]의 순회투쟁에 함께 하면서 전국에 걸친 홍보작업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또한 지난 12일부터 시작한 [용역강제 철폐와 공장폭력 근절을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 역시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전자적 국민감시체제 구축” 개인정보보호 제도보완 시급

「통합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공동집행위원장 김기중, 이대훈)는 17일 행정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공동이용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5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전산망에 수록된 개인정보가 국방부, 안기부 등 행정기관들 사이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진 데 따른 것이다. 공대위는 “경찰전산망을 다른 기관이 마음대로 열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나 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산망 상호연결계획은 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또한 “형편없는 전산망 보안체계와 부실한 개인정보 보호제도, 행정부의 비민주적 태도 또한 국민의 안정된 생활에 직접 위해를 가하는 첩해행위”라고 말했다.

공대위는 국감에서 밝혀진 행정기관의 전산망 관련 위법행위는 지금까지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국가전산화 사업을 시행해온 데 따른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전산화 사업, 특히 개인정보를 다루는 전산화 사업과 전산망 구축계획은 엄격한 법적 절차와 시민의 참여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목적의 사용을 금지하면서도 위법행위에 대한 아무런 제재수단이 없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컴퓨터 통신인 18일 집회 “구속자 석방·통신자유” 촉구

최근 PC통신 이용자들의 잇단 구속과 관련, 통신인들이 집회를 갖는다.

[정보통신단체 연대모임] (대표 장여경)과 [통신자유를 위한 모임] (대표 최두열) 등 통신인 단체 회원들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서초동 법원 입구에서 집회를 갖고 “구속된 통신인들의 석방과 통신인론자유의 보장”을 촉구할 예정이다. 지난 2일 서울지검 공안부는 통신망 게시판에서 정치토론을 한 이용자 가운데 이도재, 장윤중, 홍동완 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으며, 9명을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97 국정감사 자료

97년도 대학가 서점 압수수색 현황

부서	일시	서점	소유자	압수도서	서점주 사법처리 및 압수도서 조치
계		4개소		총 182종 474권	
제주청	97. 4. 9	책발서점	김창삼	이적도서 『김일성 평전』(북한연구소 발간) 등 101종 133권	대표 김창삼은 범죄혐의없, 고의성 없어 내사종결, 압수도서는 검찰지위에 의거 전량 폐기처분
보안3과	97. 4. 15	그날이 오면	유정희	이적도서 『주체사상 연구』(태백출판사 발간) 등 38종 185권	서점주 유정희 구속, 남편 김동운 불구속, 압수도서는 검찰에 전량 송치
.	.	풀무질	은종복	『마르크스주의와 당』(도서출판 책갈피) 등 8종 40권	서점주 은종복 구속, 압수도서는 검찰에 전량 송치
.	.	장백서원	김용운	이적도서 『노동자의 철학』(도서출판 거름) 등 35종 116권	서점주 김용운 구속, 압수도서는 검찰에 전량 송치

공안문제연구소 담당 연구원 명단 및 경력

위 사항을 이적표현물로 감정한 연구소는 경찰대학 부설 공안문제연구소등이며, 담당 연구원의 명단 및 경력은 다음과 같다(괄호안 학력 및 학위). 소장 김윤근(대학원졸), 연구부장 윤은식(박사), 연구관 백병훈·김승호·최경환·조용관·이조원(이상 박사), 김용규·장관영·유동열·김윤영(이상 석사), 오문균·유지웅(이상 대학원졸)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interpia.net · http://www.interpia.net/~rights

1997년 10월 21 일(화)

제 989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고용안정, 해고자복지” 촉구

전해투 전국순회투쟁 20-30일

전해투가 다시 전국순회투쟁에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해고자복지투쟁특별위원회(전해투, 위원장 나현균)는 20일 오후 1시 명동성당에서 97 전국순회투쟁 발대식을 갖고 오는 30일까지 전국 10개 지역을 순회하기로 했다.

93년부터 시작된 전해투의 전국순회투쟁은 올해 역시 해고자 복지와 노동법 개악 저지를 목표로 진행된다. 또한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노동자의 정치세력화에 대한 각 지역 노동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그러나 올해 순회투쟁은 무엇보다도 고용안정 촉구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이후 고용불안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고, 특히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을 비롯한 자본 진영에서 지난 9월부터 정리해고제의 도입을 재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롯된다. 이에 따라 전해투는 정리해고제 도입 반대 의사를 확산시키면서 민주노총의 총파업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발대식에 참석한 김영대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대량 실직과 해직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며 “해고자의 원상회복 뿐 아니라, 앞으로의 고용불안을 저지하고 노동법 개악 음모를 분쇄하는 선두에서 달려라”고 당부했다.

20일 안산으로 이동한 순회투쟁단은 인천, 대전, 전주, 순천 등을 거쳐 30일 울산지역 순회투쟁을 끝으로 상경하게 된다. 또한 지난 1월 총파업 이후 각 사업장의 노동조건이 오히려 악화됐다는 판단 아래, 한국후포구, 대

전성모병원, 부산 국민캠프, 대우전자 노조 등과의 공동집회와 투쟁을 통해 노동자 생존권 보장을 촉구할 계획이다.

김준배 씨 33일만에 장례

전국연합 “한총련 탄압 중단” 촉구

지난 9월16일 경찰의 검거과정에서 사망한 김준배(한총련 투쟁국장) 씨가 숨진 지 33일만인 19일 망월동 구 묘

역에 안장되었다. 장례식은 이날 오전 10시 전남대 병원에서 발인을 시작으로 진행되었으며, 광주대 영결식 과정에서 광주대 교직원들이 정문을 막아 다소 마찰이 있었으나 큰 무리없이 치루어졌다. 또한 오후 2시경 광주는행 사거리 노점에서 1천여 명의 학생·시민이 참석해 고인의 죽음을 애도했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삼임의장이창복)은 유가족들에게 조의를 표하며 “학생들의 자치조직을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힘으로 와해시키겠다는 발상이 급기야 학생들을 죽음으로 몰아갔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검찰과 경찰당국에 한총련에 대한 감압적인 해체와 탄압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주요 공판 안내

- ▶ 21일(화)
 - 나창순(범민련, 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후 2시, 311호, 합의21부, 속행
 - 민경우(범민련, 국보법 간첩 등) 오후 2시, 311호, 합의21부, 속행
 - 정석인(한총련, 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후 2시, 311호, 합의21부, 신건
 - 유덕상 외5(업무방해 등) 오후 2시, 317호, 3단독, 속행
 - 김신우(한총련, 특수공무방해치상 등) 오전 10시, 319호, 합의23부, 재개
 - 정명아(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 10시, 418호, 합의4부, 선고
 - 강덕영(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 10시, 421호, 합의2부, 선고
 - 신민자(한총련, 기차교통방해 등) 오전 10시, 303호, 합의3부, 신건
 - 정세영/곽정현(한총련,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오전 10시, 303호, 합의3부, 신건
 - 김태형/안상원 외3(한총련,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오전 10시, 303호, 합의3부, 신건
- ▶ 22일(수)
 - 이지웅(한총련, 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 10시, 319호, 합의22부, 재개
 - 이영두(국보법) 오후 2시, 526호, 11단독, 속행
- ▶ 23일(목)
 - 김숙현/조성협(한총련, 특수공무방해치상) 오전 10시, 303호, 합의3부, 선고
- ▶ 24일(금)
 - 윤석진(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후 4시, 425호, 합의5부(항소심), 속행
 - 이교관 외1(사사저널 기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오전 11시, 525호, 10단독, 속행
 - 현준희(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오전 11시, 317호, 9단독, 변경
 - 유병서(한총련, 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 10시, 319호, 합의22부, 선고
 - 류응범(국보법 간첩 등) 오후 2시 319호, 합의22부, 속행

아마가타 영화제를 다녀와서

김태일 (푸른영상 사무국장)

세계 여러나라에서 제작된 다큐멘터리만을 가지고 영화제를 10일씩이나 한다.

영화제는 아마가타시가 스폰서로 되어 있다. 25만의 시에서 세계적인 다큐멘터리 영화제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지 않겠지만 5백명의 자원봉사자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영리목적이 아닌 다큐멘터리를 가지고 돈을 투자하면서까지 영화제를 만들어가는 아마가타시의 능력은 정말 대단하다.

네덜란드 감독이 만든 인도네시아에 관한 작품이 세관 검열에 걸려 12초나 잘려나갔다. 인도네시아 원주민들의 집단 목욕장면이었는데 일본 영화법은 남녀의 성기부분에 대해서 완고하다고 한다. 그렇다고 우리처럼 정치적인 검열은 없다고 한다. 감독은 영화제 내내 검열의 부당함을 제기하기도 했다.

출품된 작품들은 주제보다는 표현방식에 대한 논의가 중심될만한 작품들이 많았다. 그러나 여전히 열악한 상황속에 놓여 있는 아시아권의 캄보디아나 필리핀 등지에서는 개인과 개인의 관계보다는 사회와 국가, 정치와 인간의 문제에 집중하고 있었다. 이것은 다큐에서 사실을 기록한다는 본연의 임무가 여전히 중요하다는 뜻일 것이다. 특징적인 것은 가난한 나라에서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이 어린아이라는 사실이었다. 한국의 6, 70년대를 연상케 하는 사회적 상황과 아이들의 열악한 모습을 담은 작품들이 많았는데 주로 자국의 현실을 친진난만한 아이들의 인터뷰를 통해 잘 드러내고 있었다. 인도네시아 작품은 먹을 것이 없어 도시의 중산층에 일하는 아이에 관한 작품이었다. 돈이 있으면 먹을 것을 사서 배가 터지도록 먹고 싶다는 대목에서 아시아의 가난한 아이들의 심정을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있었다. 때론 마약까지 서슴치 않는 빈곤층 아이들의 인권은 어디에서도 보장받을 수 없는 절박한 상황들이 작품속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일본의 짧은 친구가 만든 '한국 BC전범에 대한 기록'은 구성이나 내용이 흠잡을 데가 없었다. 21살의 어린나이에 무게있는 역사문제를 다룬 일본 친구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시아지역을 배낭여행하면서 지역민들로부터 일본인들이 전쟁기간 동안 얼마나 잔혹한 행위를 했는지 알았고, 이것을 다큐멘터리로 만들어 일본 젊은이에게 보여주겠다고 오랜시간 자료조사와 당시 한국인을 찾아서 작품을 만들었다고 한다. 그는 특히 한국인들이 이런 사실을 모른다는 것에 너무 놀랐다고 말한다. 이번 영화제기간 본 작품중 가장 큰 감동을 받은 작품이었고 역사적인 문제에 대한 어린친구의 가상한 노력을 대하고 계단은 바가 많았다.

우리의 경우 영화제가 우후죽순처럼 개최되지만 정말 영화제의 기본에 충실한 영화제를 찾기가 쉽지 않다. 검열없이 표현의 자유를 누리면서 감독의 이야기가 영화에 묻어가는 장소가 되는 아마가타 영화제는 부러웠다.

주/간/인/권/호/름

(97년 10월 13일부터 10월 19일까지)

- ◆13일(월)

김영환(국민회의) 의원 발표, 정부기관이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전산망을 인터넷 등 상용망과 접속해 사용할 경우 안기부 승인 얻어야/비전향 장기수 함세환 씨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당한 사실 뒤늦게 확인/고 김준배 씨 유가족 청와대·대검찰청 등에 제수사촉구 탄원서 발송
- ◆14일(화)

부산국제영화제서 독립영화인 검열철폐 시위/유가족 등 열사·희생자들에 대한 명예회복을 대선공약화할 것 촉구/영국 국제전략연구소 발표, 96년 세계 무기수출 8% 증가해 399억달러 규모
- ◆15일(수)

인천시교육청, 98년부터 2001년까지 17곳 폐교 예정/국무총리 자문기구인 의료개혁위원회, 의약분업시행방안 확정/시각장애인 위한 '현지팡이의 날' 기념식 장충단 공원서 열려/경찰청 국감에서 김충조(국민회의) 의원, 경찰청이 경찰전산망을 조회할 수 있는 전용단말기 284대와 전산망을 이용할 수 있는 ID 360개를 안기부, 기무사 등 8개 정부기관에 제공한 사실 확인/환경부가 여천공단 주변 주민이 환경성 질환을 앓고 있다는 역학조사 보고서 받고도 이 내용을 뺀 채 주민들이 환경오염 피해를 보지 않았다는 최종종합보고서 낸 사실 밝혀져/청와대 고위관계자, 대선전 전·노 사면 가능성 부인/미국 정부, 사상 처음으로 중앙정보국(CIA) 등 13개 정보기관의 97 회계연도 예산총액 226달러라고 발표/국제 엠네스티, 각 대선후보들에게 인권정책 관련 공개서한 보내
- ◆16일(목)

법무부, 집단소송에 관한 법률 제정 예정/보건복지부 발표, 충남 서천군 유부도 내 정신질환자 수용시설인 '장항수심원'이 수용자들에게 수감 채워 폭행하고 강제노역 시킨 것으로 드러나/광주교도소 재소자 폭행사건 관련 재소자 12명 가족, 광주교도소장 등 독지폭행 및 직권남용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발/범민련 나창순 씨 안기부서 물고문 등 가혹행위 당한 사실 뒤늦게 밝혀져
- ◆17일(금)

이웃출판사 관련자 3명 국가보안법 혐의로 9일 구속된 사실 확인
- ◆18일(토)

북녘동포돕기 전국대학생연대회의 1백여 명 탑골공원 앞에서 북한돕기 캠페인 벌여/진보통신단체 연대모임 등 PC통신 관련자들 최근 잇단 통신인 구속에 항의집회
- ◆19일(일)

정보통신부, 미국 PC통신업체의 인터넷 사이트에 북한 관련 정보가 실려 있다(국가보안법 위반)는 이유로 접속 차단 조치/서울지법 형사6단독(김형진 판사), 직원 20여 명에게 임금과 퇴직금 5천여 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출판업자 조강호 씨에게 징역 6월 선고/한총련 투쟁국장 김준배 씨 장례식 치뤄

인권 시평

욕망사회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바야흐로 대중소비사회이다. 과거 어느 때보다 물건이 넘치고 사람들은 포식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인은 정말 풍부해졌는가? 노동시간은 줄지 않고 있으며 생활은 정신없이 바빠지는데도 욕구는 충족되지 않고 짜증만 확산되고 있지 않은가? 한편 과잉을 괴로워하는 지구상 인구는 한층에 지나지 않으며, 그 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기아의 공포에 떨고 있는 것이다.

대중소비사회의 상징적 상품들은 대체로 그 과잉 때문에 인류의 미래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상품들이다. 혹은 이런 대표적 상품으로서 ① 내구소비재, 특히 자동차 ② 쇠고기와 새우 그리고 ③ 포르노를 꼽는다.

내구소비재의 특징은, 기본적인 생활 필수품과는 달리, 사람들이 정말 그 상품이 자기에게 필요한 것인지를 쉽게 판단할 수 없다는 데 있다. 그래서 생산자는 끊임없이 광고, 세일즈활동, 월부판매 방식 등을 통해 인간에게 본래 필요없는 것이나 해로운 것에 대한 욕구와 수요를 인위적으로 만들어 나간다. 그 전형적인 예가 자동차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자동차는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고 쾌감을 주는 외에 '스테이터스 심벌'로서의 가치를 갖는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이점은 특권적 소수자만이 자동차를 보유할 경우에 타당하며 자동차의 대중화에 따르는 '마이 카'시대가 도래함으로써 사정이 크게 달라진다. 우선 자동차의 전면적 보급은 교통사정의 악화를 가져오게 되며 따라서 '편리함'도 '쾌감'도 사라진다. 누구나 다 자동차를 갖게 됨으로써 '스테이터스 심벌'의 가치도 없어진다. 일상적인 교통사고로 인한 누적된 사망자수는 과거 어느 전쟁 사망자수도 능가할 지경에 이르렀고 자동차는 '살인기계'라는 이름을 얻었다. 게다가 자동차는 석유를 비롯한 자원을 낭비하며 대기를 오염시킨다.

자동차 보급에 밀려 대중교통수단은 쇠퇴하고 대중교통수단이 상대적으로 불편해짐으로써 자동차가 필요해진다. 도로를 걷는 일이 위험해지고 공기가 나빠져 사람들은 더욱더 자기만의 안전을 위하여 자동차를 원한다. 마약중독자가 자꾸만 마약을 원하는 것과 같은 악순환이 아닐 수 없다.

18·19세기의 쇠고기가 귀했던 시대 이래 쇠고기는 부와 권력과 민족적 우월과 남성지배를 상징하는 음식물이었다고 한다. 그것이 대중화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말, 미국 백인들이 서부대초원을 원주 인디언으로부터 빼앗고 영국자본을 받아들여 대규모로 목축사

업을 시작하면서부터였다. 쇠고기가 대중적으로 보급된 일은 일단 환영할만 하지만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우선 현재 대부분의 소가 곡물사료로 사육되고 있는데 그 사료는 10억인 정도의 인간을 먹일 수 있는 분량이라고 한다. 이 사료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소의 증가는 기아 인구의 증가와 함수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게다가 쇠고기를 먹을 수 있는 선진자본주의국 주민과 개들은 쇠고기 섭취로 인한 심장병, 뇌졸중, 암, 당뇨병 등에 (높은 의료비를 쏟아 부으면서) 시달리고 있으며 쇠고기를 먹는 한편은갖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하는 말세적 현상을 보인다. 오늘날 맥도날드 햄버거는 중남미의 열대우림을 집어삼키면서 무서운 속도로 전세계에 퍼지고 있다.

성의 상품화가 지구를 휩쓸고 있다.



현대세계를 대표하는 대규모 산업중 하나가 포르노산업이다. 미국에서 포르노산업은 보통의 영화나 음반산업을 능가하여 연간 80억달러의 이익을 올리고 있다고 한다. 포르노가 아무리 '성의 해방'과 '성의 자유'를 내세워도 그것의 해악은 첫째로 여성을 폄하하면서(남성)지배와 (여성)종속을 노골적인 성묘사를 통해 미화한다는 데 있다. 또한 포르노는 성적 욕구에 기인하기는 하지만 성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의사체험에 의하여 성에 대한 욕구불만은 더욱더 커지고 더 강한 자극을 바라는 욕구를 만들어낸다. 성범죄는 늘어나고 악질화된다.

자동차가 선진국에 의한 자원의 낭비를 전제로 하고 쇠고기 소비가 기아와 함께 늘어나듯이 포르노는 여성에 대한 차별과 착취를 그 존립근거로 하여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생산되고 생산이 새로운 욕구를 낳는다. 생산력이 발전함에 따라 욕구는 다양화하며 이런 과정 속에서 인간으로서의 여러 능력이 발전해간다. 그리하여 미래 어느 날인가 욕구는 완전히 충족될 것이다... 이런 게 우리 모두의 '희망사항'이었다. 그러나 지금 눈부시게 생산량을 늘리는 현실의 자본주의 속에서 우리는 이런 기대가 어딘가 잘못된 것이었음을 깨닫고 있다. 상황이 아무래도 절망적인 것임을 깨닫고 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자동차를 줄이고 대중교통수단을 늘릴 수 있을까? 쇠고기 소비량을 줄이고 기아를 없애기 위하여 농업구조를 바꿀 수 있을까? 인위적으로 대중의 욕구를 만들어 내는 일을 그만둘 수 있을까? 포르노가 없어질까? 제품들의 모델체인지 주기를 획기적으로 늘리고 제품을 그 수명이 다할 때까지 쓰도록 AS를 보장할 수 있을까? 생산의 증가에 따라 노동시간도 단축할 수 있을까? 도대체 자본주의에는 희망이라는 게 있는 것일까...?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interpia.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7년 10월 22 일(수)

제 990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안기부, 공중전화 수십곳 감청 범민련, 북한동포돕기 '간첩지원' 혐의

21일 서초동 서울지방법원 311호 법정에서는 안기부의 놀라운 감청 사실이 확인됐다.

간첩(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민경우(범민련 사무처장) 씨에 대한 직접심문 과정에서 검사 민 씨와 일본에 거주하는 박용(범민련 공동 사무국 사무처장) 씨와의 전화통화 내용을 하나하나 열거해 나갔다.

"O년 O월 O일, 사당역 4거리 공중전화에서 박용 씨에게 전화를 걸어... 한총련, 전국연합, 민족회의 등과 관련, ...을 보고했죠?"

"충현교회내 공중전화에서..."
"중앙대 정문 옆 공중전화에서..."
"밤배동 국민은행 지점내 공중전화에서..."

공소장에 따르면 민 씨의 통화를 감청한 것은 1년여 동안 수십 건에 달했다. 물론 검찰의 의도는 두 사람간의 통화 사실과 내용을 통해서 간첩 혐의를 입증하려는 데 있었다.

그러나 검찰이 제시한 내용은 오히려 안기부의 불법감청에 대한 시비를 불러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 씨의 담당변호사인 김병주 변호사는 "아직 녹취서를 제출하지 않아 검찰이 통화내용에 대한 기록을 갖고 있는지는 아직 불분명하다"며 "하지만 안기부가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상태에서 감청을 했다면, 이는 위법행위이기 때문에 증거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민 씨는 이날 박 씨와의 통화 사실(국보법 상 회합·통신 혐의)은 인정했지만 기밀누설(간첩 혐의)이라는 검찰측 주장은 부인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역시 주목을 끈 것은 범민련의 북한동포돕기 모금운동

의 성격을 둘러싼 심문이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범민련은 모금액 1만 달러를 북한으로 송금할 계획이었다"며 북한동포돕기운동을 조종한 및 북한과 연계시키려 했다. 그러나, 민 씨는 "모금액을 일본의 공동사무국으로 전달할 계획이었을 뿐"이라며 "검찰이 과도한 확대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창순 씨 안기부 가혹행위 대한변협, 진상조사 벌이기로 또한 안기부에 연행된 뒤 물고문을 비롯한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범법진술한 나창순(범민련) 씨 재판도 속행되어 관심을 모았는데, 나 씨는 "안기부 주장과 달리, 범민련의 모금이 일본의

공동사무국으로 전달됐는지조차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나 씨의 범법진술과 관련,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함정호 변호사)는 안기부의 고문행위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일 방침인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민경우, 나창순 씨와 함께 북한동포돕기운동과 관련해 구속된 이종린(범민련 의장대행), 이천재(범민련 부의장) 씨의 공판은 오는 28일 같은 법정에서 열리게 된다.

범민련 노수희 부의장 구속

범민련 부의장 겸 전국노점상연합회 상임고문인 노수희 씨가 안기부에 연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주의민족통일서울연합은 "노 씨가 지난 15일 원주에서 안기부 수사관들에 의해 연행됐으며, 17일 노 씨 집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연행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만화 사랑방



교사 자율성 보장과 교원노조 희망 전교조, 현직교사 1천명 설문조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김귀식, 전교조)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초·중등학교 교사 1천 명을 대상으로 지난 14-16일 실시한 설문조사 따르면 현직교사들은 교육개혁의 성공을 위해 '교사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자율성이 보장되는 제도의 마련'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해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75.0%를 차지했으며, 전교조 합법화의 장애요인에 대해 응답자의 35.1%가 '정치권의 이해관계'를 들었다.

사교육비 해결은 '입시제도 개선' 또한 사교육비 문제해소의 가장 효과적인 해결방안으로 58.3%가 입시제도 개선을, 26.8%가 학교교육의 질 향상을 지적했다.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데 가장 우선적인 과제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9.9%가 거대학교와 과밀학급의 해소를, 30.6%가 학교시설 개선을 들었으며, 멀티미디어 설치는 9.0%에 불과했다. 이는 최근 정부가 교단선진화라는 명분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학교에 각종 기자재 및

멀티미디어 시설을 들여놓은 것과 좋은 대조를 이루었다. 결국 과밀학급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멀티미디어 시설을 갖추는 것은 재정부담이라는 지적이다.

이밖에도 현장교사들이 교직생활에서 가장 불만인 점은 과중한 업무부담(41.2.%) 낮은 임금수준(23.0%) 교원단체활동 등 자율성 제약(20.0%) 등으로 조사되었다. 교사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교원의 근무여건 중 교수활동 이외의 업무경감(47.8%) 교육활동 등에서 자율성 보장(20.0%)을 꼽았다. 이에 전교조는 "교육개혁 추진으로 교사들에게 전신행정식의 행정업무만 늘어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연구활동과 수업준비 시간을 빼앗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영화제 10개 지역상영 10월 23일-11월 30일

당국의 탄압 속에서 진행된 제2회 인

권영화제가 서울 상영을 마치고 23일부터 인천지역을 시작으로 11월30일까지 10개 도시 전국 순회상영에 들어간다.

지역 상영 일정(때, 곳)

- ▶ 인천 10월 23- 27일 인하대학교 학생회관 회의실/소강당 문의: 032) 761-0861
- ▶ 수원 11월 6-8일 대한성공회 교동성당 문의: 0331) 213-2100
- ▶ 광주 11월 12-15일 전남대 VTR실 문의: 062) 529-7576
- ▶ 안양 11월 7- 9일 가톨릭 안양군로사회관 강당 문의: 0343) 44-2876
- ▶ 전주·군산 전주: 11월 11-14일 군산: 11월 20- 21일 문의: 0652) 76-1253
- ▶ 구리·남양주 11월 14- 16일 장소: 미정 문의: 0346) 69-9134
- ▶ 대구 11월 15- 23일 열린공간 큐 문의: 053) 742-7456
- ▶ 제주 11월 27- 29일 예인 아트홀 문의: 064) 22-2701
- ▶ 원주 11월 24- 30일 원주 가톨릭센터 강당 문의: 0371) 45-2355
- ▶ 마산·창원 11월 13- 15일 창원대 학교 소강당 문의: 0551-61-4807

97년 국정감사(내무위)

현정부 이후 집회금지 건수 및 사유

연도별	구분	신고건수	금지건수	금 지 사 유				
				공공질서 위협 (5조1항2호)	금지장소 (10조, 11조)	교통소통을 위한 제한 (12조 1항)	보안통고 불이행 (7조 1항)	집회신고 경합 (8조2항)
계		14,085	206	109	39	18	39	1
93년		1,787	27	13	8	4	2	
94년		2,271	60	27	15	4	13	1
95년		3,509	50	30	11	3	6	
96년		6,068	69	39	5	7	1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검거현황(89.1.1-97.7.31)

단위:명

년도	계	89	90	91	92	93	94	95	96	97	
구분	계	7,156	1,670	1,548	1,078	456	136	473	371	816	608
	불구속	16,895	3,261	3,121	1,556	805	720	1,189	764	4,411	1,068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 rights(천,하) · E-mail: rights@interpia.net · http://www.interpia.net/~rights

1997년 10월 23 일(목)

제 991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민병일 씨 사망 '국가 책임'

경찰관 단순과실만 인정

'경찰에 의한 폭행치사'로 결론이 난 민병일 씨 사망사건과 관련, 국가가 유족들에게 7천여 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16일 수원지법 제9민사부(재판장 김기봉 부장판사)는 민병일 씨의 유족 홍소미(아내) 씨가 국가 및 관련 경찰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판결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파출소내에서 민 씨를 폭행, 사망케 한 채규근 상경 및 동료경찰 백용운 경장과 관련 해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민 씨는 지난 2월 경기도 용인 신갈 파출소내에서 쓰러져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15일만에 사망했으며, 수원지법은 지난달 26일, "채 상경이 민 씨를 밀어 사망케했다"며 채 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날 판결을 통해 민 씨 사망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인정됐지만, 민사재판

부 역시 유족들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둔기를 사용한 폭행'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김동균 변호사는 "부검결과 등을 통해, 둔기를 이용한 폭행이라는 추론이 가능했지만, 뚜렷한 목격자와 증거가 확보되지 못했다"며 "경찰측의 주장을 뒤엎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밝혔다.

현 대법원 판례는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가 있을 경우에 한해 공무원이 직접 책임을 지도록 하며, 단순과실일 경우엔 국가만이 그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행당동 철거민 항의 잇따라 적준용역 사장등 구속 촉구

지난 9월30일 성동구 행당1동 행당 1-2 재개발지구에서 발생한 철거 성폭력 사건에 대한 항의가 계속되고 있다. '주거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성

동 동대문지구 행당 1-2지구 세입자대책위'는 20,22일 항의집회를 가진 데 이어 23일 집회를 가진다.

22일 오후 3시경 명동입구에서 행당 1-2지구 세입자대책위 소속 철거민 40여 명은 2시간 동안 항의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철거폭력을 휘두른 적준철거회사 사장 정숙중 씨와 성폭력을 지휘한 김영배(본명 김윤재), 임화영 씨 구속 △폭력집단을 고용한 행당 1-2재개발 조합장 예동해 씨 구속 등을 촉구했다. 또 성동구청측에 행당 1-2지구에 대한 무기한 철거사업중지 명령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또한 23일 오후 2시 종로5가 기독교회관 강당에서 기자회견 및 KNCC 공동주관으로 목요기도회를 갖는다(인권하루소식 10월9일자 참조).

삼미특수강 43명 목숨건 단식 노조 238일 상경투쟁 마무리

고용승계 보장을 위해 3월말부터 상경투쟁을 벌여온 삼미특수강 노동자들이 지난 9월 17일자로 2백38일간의 긴 투쟁을 마치고, 또다시 지난 16일부터 목숨을 건 집단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아울러 창원과 마산 시내를 중심으로 선전전을 벌이는 것 외에도 신한국당, 노동부 등으로 항의방문을 벌이고 있다.

22일 현재 창원지역 삼미특수강 회사 앞에서 텐트를 치고 농성노동자 1백40여 명 가운데 김창남 위원장을 포함한 43명의 노동자들이 무기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방서부 노조 부위원장은 "창원지역에 삼미특수강 문제를 널리 알려내고 지역 시민·노동자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단식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또한 "8개월이 넘게 상경투쟁을 벌이는 등 할만큼 다했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 물러설 때가 없다"며 투쟁결의를 다졌다.

일본 요시마쯔 목사 등 강제출국

제일동포 양심수 지원활동 이유

제2회 한일 공동심포지움에 참석차 20일 방한한 요시마쯔 시게루(64·한일 공동심포지움 대표단 단장) 목사와 발제를 맡은 기타가와 히로카즈(44·월간 <일한분석> 편집인) 씨가 입국직후 김포공항에서 강제출국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요시마쯔 목사와 기타가와 씨는 한일 공동심포지움 일본 참석자 12명과 함께 20일 김포공항에 도착했으나 공항에서 정부당국에 의해 곧바로 출국당했다. 요시마쯔 목사는 70년대부터 제일동포 양심수 석방을 위해 활동해 왔으며, 현재 '제일 한국인 정치범을 지원하는 전국회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데 이러한 활동과 관련해 강제출국당한 것으로 보인다. 또 기타가와 씨는 지난해 방북한 사실이 문제가 된 것으로 잠정된다.

제2회 한일 공동심포지움은 민주주의 민족통일전국연합과 한일 공동심포지움 일본측 실행위원회 공동주최로 21일 서울지방변호사회관 대강당에서 1부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의한 배상책임과 아시아 평화', 2부 '4자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3부 '아시아 지역 평화와 진보를 위한 연대'의 주제로 열렸다.

에서 남자는 "사실 우리들은 북에서 왔다. 정 선생님을 오랫동안 보아왔는데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다"며 협조를 요구했고, 여자는 "정 선생님의 글도 많이 보아 감명을 많이 받았다. 공화국에 같이 갈 수 없나 해서 찾아왔다"고 말했다. 이에 정 씨는 "할말이 없다"고 말한 뒤 김훈 씨와 함께 다방을 나온 직후 울산연합 사무실에 도착해 112 신고센터와 울산 중부서 정보과에 신고한 뒤 조사를 받았다.

기자회견을 통해 정 씨는 "본인은 국민으로서 의무와 협조를 다할 것"이라고 밝히며 "당국은 신속한 수사를 통해 간첩으로 추정되는 두 사람의 검거에 최선을 다하고, 대선을 앞두고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거나 민족민주운동을 탄압하는 발미로 삼아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민승리21(공동대표 이창복·권영길)은 22일 성명을 통해 "대선을 앞두고 이러한 일이 벌어진 사실에 우려를 금치 못한다"면서 경찰과 관련당국에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국사회의 이해』 10차 공판

1년 9개월만에 재개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 10차 공판이 23일 오전 10시 창원지방법원 제123호 법정에서 형사 제2부(재판장 안영률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이번 공판은 지난해 1월 25일 창원 지방법원 대법정에서 9차 공판 이후 1년 9개월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작년 2월 이 사건의 담당 재판부가 김진권 판사에서 안영률 판사로 바뀌고 난 이후 처음 재판이 시작되는 것이기도 하다.

『학문·사상·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9차 공판에서는 『한국사회의 이해』에 대한 감정을 쓴 유동렬(공안문제연구소 연구원)을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을 벌일 예정이었으나 증인이 출석하지 않아

공판이 연기되었다고 전했다. 따라서 이번 공판에서는 증인 유동렬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의: 0591-751-5770, 5749)

행사와 동정

■ 지구촌 좋은 이웃되기 제10차 시민 포럼-버마의 정치·사회와 인권 실태

· 때: 24일(금) 오후 7시
· 곳: 참여연대 모임방
· 주최: 참여연대 국제인권센터(문의: 김은영 723-4255)

■ 삼미특수강 투쟁 홈페이지 시연회

· 때: 24일(금) 오후 5시-7시
· 곳: 한국소프트웨어지원센터세미나실
· 내용: 삼미특수강 투쟁보고/ 투쟁 홈페이지의 의미와 활용방법(프리젠테이션)/ 홈페이지 시연 및 설명회/ 참가자와의 방담
· 문의: 노동정보화사업단(285-2139)

■ 여성의 전화 쉼터 10주년 기념

『여성운동과 사회복지-학대받는 여성의 쉼터 연구』 출판기념회 및 심포지움 '학대받는 여성과 쉼터, 그 현황과 대안'

· 때: 24일(금) 오후 2시-5시
· 곳: 기독교연합회관 4층 중강당
· 주최: 사단법인 한국여성전화

■ 바람직한 유아교육 체제 마련을 위한 토론회

· 24일(금) 오후 2시 · 종로성당
· 주최: 여연, 한국보육교사회
· 문의: 조영숙(273-9535)

■ 전환적적 생산, 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

〈여성 캠페인〉
· 때: 26일(일) 오후 2시-4시
· 곳: 대학로 쉼터사(파랑새극장 앞)
· 주관: 한국여성단체연합

〈청소년·어린이 캠페인〉

· 때: 25일(토) 오후 2시-4시
· 곳: 대학로 쉼터사(파랑새극장 앞)
· 주관: 그린패밀리운동연합

■ 장애인종합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 때: 27일(월) 오후 2시
· 곳: 국회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
· 주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521-5364)

97년 국정감사 자료

<경찰관 관련 주요 사망사건>

(95. 10-97.2, 내무위)

일시	변사자	수사결과
95. 10. 2	노병우 (38)	순경 이영현 상해치사죄로 구속기소 재판계류중 가혹행위 발견할 수 없으나 감시소홀책임으로 경정 최성규 등 3명 계고
95. 10. 13	박석배 (20)	자살 판명 내사종결
95. 12. 30	최학민 (20)	자살사건으로 내사종결
95. 12. 30	김영철 (44)	자살사건으로 내사종결
96. 1. 17	유진남 (40)	음독자살한 것으로 내사종결
96. 8. 3	김관수 (43)	부검결과 외상없고 급성심부전증에 의한 사망으로 판명되어 내사종결
96. 10. 29	손기홍 (39)	자살로 판명되어 내사종결
96. 12. 6	차명조 (34)	자살한 것으로 내사종결
96. 12. 16	노영환 (18)	피해자가 달아나다 사망한 것으로 내사종결
97. 2. 2	민병일 (38)	의경 채규근 폭행치사 혐의로 징역 1년6월 선고
97. 2. 13	이종호 (36)	순경 안재화 직위해제하고 형사입건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interpia.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7년 10월 24일(금)

제 992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세계무대로 알려진 폭력철거

강제철거 감시단, 주거권 보장요구

행당 1-2 재개발 지구 성폭행 및 강제철거에 대한 규탄시위가 연일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 사건이 아시아주거권연합 등 국내외 인권 및 주거권 관련단체로 확산되고 있다.

'아시아 주거권연합-한국 강제철거 감시단' 환경섭 부단장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정의와 인권위원회 주최로 23일 오후 2시경 기독교회관 강당에서 열린 목요기도회에서 "행당동 소식을 각국 관련단체에 알리고 강제철거 당사자에 대한 항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국 강제철거 감시단(단장 박문수 신부, 감시단)은 행당동 강제철거 사건이 발생한 이튿날인 지난 10월 1일 사태개요서를 접수받고, 긴급히 '행당 1-2 폭력철거사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활동에 들어갔다. 감시단은 지난 3일부터 14일까지 폭력철거 사태와 관련해 피해주민·성동구청·성동경찰서·행당 1-2 재개발조합 방문 등을 통해 객관적인 조사작업을 벌였다. 이어 감시단은 지난 9일 진상조사활동 중단 결과서를 구청·경찰서에 보냈고, 16일 1차 보고서를 국내외 인권 및 주거권 관련기관에 보냈다. 또한 18일 서울지법 동부지원장 앞으로 피해주민 진정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했다.

"강제철거, 유엔 인권정신 위반" 감시단 진상조사위원회는 23일 발표한 진상조사활동 의견서를 통해 "강제철거는 명백한 인권침해이며, 주거권 침해라는 유엔의 인권정신에 따라 행당 1-2 폭력철거 사태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한 "이번 사태는 강제 명도집행이라는 형식을 갖고 있지만, 집행에 있어 폭력은 물론 성추행, 성폭언까지 서슴치 않는 등 무법천지 상태에서 법집행을 강행했다"며 불법성을 지적했다. 아울러 행정당국이 폭력현장에서 주민의 보호요청을 무시하고, 이를 외면·방치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결론적으로 감시단 진상조사위원회는 "어떤 사유든 강제로 철거된 주민들에게 신속히 안정을 취하도록 임시거처를 마련, 최소한의 인권과 주거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비인간적인 횡포를 벌인 적준용역은 반드시 없어야 할 대상이며, 폭력적인 강제철거는 허용되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철거현장 조직적 대응 기대 이번 행당동 폭력철거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활동을 시작으로 한국 강제철거감시단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는데, 감시단 구성으로 이후 철거현장에서 신속하고 조직적인 대응이 기대되고 있다.

감시단은 5월 23일 「아시아 주거권연합 한국위원회」 결정으로 구성되었으며, 아시아 각국 감시단과 정보교환을 하는 협력관계 속에서 우리나라의 강제철거 사건을 객관적으로 조사·홍보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감시단은 박문수(서강대 사회학과 교수) 신부를 단장으로 김진홍(주거연합 공동대표) 하성규(중앙대 교수,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김경남(목사, KNCC 정의와 인권위원회 사무국장) 김동주(전주교 서울대교수 빈민사목위원회 실행위원) 씨등 14명으로 이루어졌다.

한편 오후 3시경 목요기도회를 마친 3백여 명의 참석자들은 탑골공원까지 강제철거 규탄 평화대행진을 벌였다.

만화사랑방



인천 인권영화제, 탄압 뚫고 성황리 개막 당곡 <레드헌트> 이적성 운운 압수영장 발부

제2회 인권영화제 지방상영의 첫 테이프를 끊은 인천에서도 서울과 마찬가지로 당국의 탄압을 뚫고 영화제가 개막됐다.

23일 인천-인권영화제 상영장소인 인하대 주변에는 경찰 수개 중대병력이 배치됐으며, 남녀를 불문하고 가방을 뒤지는 등 삼엄한 검문검색이 벌어졌다. 경찰은 상영작 가운데 <레드헌트>(제주 4·3항쟁 소재, 허낙영상 제작)가 이적성이 있다며 원천봉쇄 방침을 밝힌 바 있으며, 인하대 총학생회실과 인하대 김영규(인천 인권영화제 조직위원장) 교수연구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또한 인하대 측도 '불법' 영화제라는 이유로 상영예정장소였던 학생회관 회의실과 소강당의 문을 폐쇄하고 전기를 끊는 등 홍익대(서울 인권영화제 상영장소)와 똑같은 조치를 취하며 행사를 방해했다.

그러나 인천영상집단과 인하대 총학생회 등 영화제 주최측은 예정대로 <레드헌트> <외투> 등을 상영했으며, 매 작품 상영마다 4백여 명 이상의 관객이 몰리는 등 성황을 이루었다. 영화제 주최측은 학교와 경찰당국의 탄압을 미리 예상해 발전기를 준비했으며, 상영장소도 학생회관 로비와 야외

'놀이광장' 등 두 곳을 마련한 상태였다.

영화제탄압 항의 촛불시위

한편, 인하대 학생들은 당국의 인권영화제 탄압에 항의하는 뜻으로 오후 6시 30분경 학교 후문 앞에서 촛불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인천 인권영화제 주최측은 오는 27일까지 <쇼아>를 비롯한 21개 작품을 상영할 예정이며, 이어 인하대 총학생회는 28일 교내에서 인권문화제도 개최할 예정이다.

광주교도소 재소자 폭행사건

광주변호사회, 진상조사 나서

광주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위원장 임원배 변호사)가 광주교도소 재소자 폭행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인권위는 오는 27일 박용 씨 등 재소자들을 접견할 예정이며, 관련 교도관들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공문을 교도소측에 보내기로 했다. 이번 조사결과 교도소측의 가혹행위가 드러날 경

우, 변호사회는 △폭행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촉구 △교도관 징계 요구 △폭행피해자 손해배상소송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새정치국민회의 인권위원회(위원장 이원영)는 22일 광주교도소 박장생 소장을 면담하고 재소자들에 대한 징벌 해제를 요청했다. 박용 씨 등 양심수 12명은 지난 9일 검방 거부와 관련해 한달 간의 징벌조치를 받은 상태다. 이와 관련, 광주교도소측은 22일 이상경(재소자 이형민 씨 부친) 씨를 면담한 자리에서 "3일 내로 징벌을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교도소측은 이와 함께 가족들이 교도소를 상대로 낸 고발건을 취하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가족들은 징벌해제에 관계없이 재소자 인권유린 행위에 대한 검찰의 적극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타이어 성폭행 사건

국과수 감정결과 이번주 드러나

(주)한국타이어(사장 홍건희)의 인권유린 행위를 폭로하는 기사를 썼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국도일보(대전) 김동진 기자가 20일 검찰에서 1차 소환조사를 받았다. 김 기자는 "검찰이 기소할지 여부는 아직 모르겠지만, 양심에 따라 쓴 기사인 만큼 떳떳하다"고 밝혔다(본지 8월 19일자 참조).

한편, 김 기자가 폭로한 한국타이어 성폭행 사건은 현재 검찰 재수사에 들어간 상황이다. 지난해 5월 한국타이어 노동자를 돕던 박 아무개 씨가 괴한 2명에 의해 윤간을 당한 이 사건은 올 3월 수사가 종결됐지만, 피해자 및 인권·사회단체의 탄원에 따라 지난 9월 현장검증과 피해자 조사가 다시 이뤄진 바 있다. 당시 현장검증을 통해 채취된 머리카락 등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정밀검증을 받아 지난 21일 결과가 나왔으며, 이는 이번주중 검찰에 통보될 예정이다.

박 씨 성폭행 사건은 범인들이 피해자의 신원부터 확인한 뒤 윤간을 한데다 분실물이 없는 점 등에 비춰 보복감간이라는 의혹을 감하게 일으켰다.

남한조선노동당 사건 손민영 씨 만기출소

지난 92년 대선을 앞두고 이른바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으로 구속된 손민영(36) 씨가 24일 5년만에 김천교도소에서 만기출소했다.

손민영 씨의 가족은 분단체제가 낳은 대표적 희생자로 기억되고 있다. 당시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으로 아버지 손병선(60·당시 반핵평화운동연합 의장) 씨와 둘째딸 민영 씨가 구속된 것 외에, 남편 손 씨에 대한 불교지죄 혐의로 9개월간 수배생활을 하던 부인 성순희 씨가 지병이 악화되어 도담암으로 93년 7월15일 사망했다.

더욱이 성 씨가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하던 당시 김수환 추기경등 많은 사람들이 인도적 차원에서 남편과 딸의 특별면회를 탄원했으나, 대법원 형사2부(당시 재판장 김주원 대법관)는 구속집행정지 처분을 기각했고, 손민영 씨만 2일간의 구속집행정지로 징역식에 참석했다. 게다가 손 씨의 큰 딸 민옥 씨는 전교조 활동을 이유로 교직에서 해직당했으며, 셋째딸 민아 씨는 육바라지를 하던 중 대전교도소 앞에서 경교대의 폭력으로 머리에 부상을 당해 입원을 하기도 했다. 민아(35) 씨는 현재 민가협 간사로 활동 중이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interpia.net ·http://www.interpia.net/~rights

'인권영화제 죽이기' 극한

인천 집행위원 3명 긴급체포

인천 인권영화제 집행위원들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23일 밤 인하대학교에서 영화상영을 마친 뒤 귀가하던 이윤주(33·집행위원, 민예총 영화위원회 소속) 씨를 긴급체포한 데 이어, 24일 오전 인하대 교문 앞에서 영화제 집행위원장 이은주(33·노동정치연대 인천지부 의장) 씨와 이주섭(33·집행위원, 인천영상집단 소속) 씨를 역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이날 이윤주 씨의 집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했다. 경찰측이 김영규(인하대 교수) 조직위원장에 대한 긴급체포장을 발부했으며, 11명의 집행위원 전원을 체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영화제와 관련된 비디오 테이프와 기자회견 일체를 압수하겠다고 밝혔다.

조직위원장 긴급체포장 발부

확인된 바에 따르면, 경찰은 인권영화제가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점과 영화제 재원마련을 위한 모금활동이 불법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집행위원들을 체포하고 있으며, 또한 다큐멘터리 <레드헌트>의 이적성 여부도 계속 문 제삼고 있다. <레드헌트>는 이미 부산 국제영화제를 비롯해 각종 영화제에 이미 출품·상영된 바 있는 작품이다. 영화제 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김영규 교수)는 "인권영화제를 불허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표현의 자

바로잡습니다

본지 10월 24일자 손민영 씨 출소가사 가운데 출소교도소를 '김천교도소'로 고칩니다.

1997년 10월 25일(토)

제 993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의대회에 5천여 명의 노동자가 참석했으며, 명동성당까지 평화행진을 벌이던 중 노동자 35명이 연행됐다. 연행자들은 종로, 중부 경찰서 등에 분산 수용돼 조사를 받고 있다.

안기부 불법행위 규탄

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은 23일 안기부의 불법 수사와 인권유린 행위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국연합은 "지난 7일 범민련 소속 나창순 씨에 대한 1심재판 과정에서 물고문을 비롯한 가혹행위가 폭로됐고, 21일 민경우(범민련 사무처장) 씨의 공판과정에서 공중전화 불법감청 사실이 밝혀졌다"며 범민련 관련인사와 노수희 서울연합 의장 등에 대한 무리한 사건확대 기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성폭력예방 거리문화제

한국여성민우회 부설 가족과 성 상담소(소장 양혜경)는 25일 오후 2시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과 건강한 성의식 확산을 위한 거리문화제 '내 몸의 주인은 나'를 펼친다.

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어떠한 탄압에서도 끝까지 남은 입장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최측은 24일에도 오후 6시부터 학생회관 4층 로비 및 놀이광장(야외)에서 영화상영을 강행했다.

경찰폭력, 노동자 2명 중상 기아사태 관련 시위도중

기아 법정관리 철폐를 요구하며 시위에 나섰던 기아자동차 조합원 2명이 경찰에 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었다.

24일 민주노총 주최의 '기아 법정관리 철폐 및 강경시 장관 퇴진 촉구 1차 결의대회'에 참석한 구자오(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 씨는 울지로 입구 의환은행 본점 앞 연좌농성을 벌이던 중, 곤봉을 휘두르며 진압에 나선 경찰에 의해 머리에 심한 부상을 입고 백병원에 입원했으며, 김동휘(소하리공장) 씨도 왼쪽 어깨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이날 오후 2시 종묘공원에서 열린 결

북녘 어린이 참상 담은 자료집 출간

남북 어린이 어깨동무와 북한 어린이살리기 의약품지원본부는 북녘어린이들의 최근 모습을 담은 비디오 테이프와 사진자료들을 국제단체 등으로부터 긴급입수해 시각자료를 펴냈다. 비디오테이프는 월드비전(국제선명회)과 캐나다 곡물은평으로부터 최근 제공받은 비디오테이프와 미국 CBS-TV 방영분 등을 모아 편집한 것이다. 이 비디오테이프는 모두 지난 6월말-9월초 사이에 촬영된 것으로 극심한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북녘어린이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다. 사진자료집에 수록된 사진들은 캐나다 곡물은평, 세계식량계획, 유니세프 등이 지난 5-7월 찍은 것으로 모두 51점이다.

구입 문의: 706-6008/710-0709/741-5364

매맞는 여성 위한 쉼터 10주년 여성의 전화, 「여성운동과 사회복지」 출판

매맞는 여성들의 피난처 '쉼터'가 설립 10주년을 맞았다.

남편의 구타와 학대로 고통받는 여성들을 위해 지난 87년 한국여성의 전화(회장 신혜수)가 국내 최초로 설립한 쉼터는 현재 민간기관의 5곳과 정부기관의 7곳 등 모두 12군데가 운영중이다.

이와 관련, 한국여성의 전화는 '쉼터' 10주년을 기념해 '쉼터' 연구서인 「여성운동과 사회복지」를 출판했으며, 24일 기독교연합회관에서 '학대받는 여성과 쉼터, 그 현황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도 가졌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구타당하는 아내의 자녀 보호 방안 △피해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 △쉼터이후의 사후보호책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됐다.

쉼터가 걸어온 길

- 87. 3 사무실 한쪽을 개조 방 한 칸에 쉼터 마련
- 90. 4 독일 녹색당 산하 여성재단으로부터 쉼터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시작
- 91. 3 최대 10명 인원이 머물 수 있는 17평형 단독빌라 임대
- 92. 3 부산여성의 전화와 마산 가톨릭 여성회관 등 쉼터 개설
- 94. 4 '가정폭력 입법을 위한 추진위원회' 결성
- 94. 7 한국남성과 결혼한 중국교포들이 쉼터 찾기 시작
- 94. 10 인권변호사들의 '여성평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구성
- 96. 10 최대인원 20명이 머물 수 있는 현 단독주택으로 이동
- 96. 12 한국정부가 OECD에 가입함에 따라 독일 지원 마감
- 97. 4 쉼터에서 가정으로 돌아가는 비율이 70%에서 40%로 낮아지는 등, 이혼이 늘어나는 현상 나타남. 그 여성들을 모아 이혼그룹 구성
- 97. 10 쉼터 10주년 기념 출판기념회 및 심포지움 개최

"교육개혁 힘 모으자"

전교조, 교총에 면담 제안

2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김귀식, 전교조)은 창립 50주년을 맞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교총)과의 교육개혁안 마련을 위한 면담을 제의했다. 전교조는 "입시위주의 경쟁교육 속에

서 1년에 3백명이 넘는 아이들이 성적을 비관해 목숨을 끊고, 학부모들은 사교육비 부담으로 허리를 펼 틈이 없다"며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후보들에게 올바른 교육공약을 제시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자"고 제안했다. 더불어 전교조는 한국교총이 교원노조를 인정하고, 교사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각종 교육악법 개정운동에 함께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인권하루소식 10월 구독료
폭 납부바랍니다.

97년 국정감사 자료(내무위 제출)

97년 8월 현재 전국교도소(구치소) 재소자 현황

계	기결	미결	독거 수용인원
61,765	33,502	28,263	2,461

교정기관 교정공무원 정원 및 복무현황(97년 8월 현재)

정원	현원	결원	비고
12,158	11,997	161	

각 교도소 및 구치소에 배정된 의료비 및 집행실대

(97. 1- 97. 8월말 현재) (단위: 천원)

97 예산액	97. 8월말 현재 재배정액	비고
2,256,828	1,164,838	

▶ 수용자 1인당 의료비: 37,784원

▶ 기·미결 수용자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실대

의료보험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교도소 등에 수용된 자는 그 기간중 보험급여 정지대상자로서 의료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법무부에 접수된 재소자 청원현황(96-97년 현재)

수용자 청원의 총건수 및 처리현황

구분	계	가석방 등 요망	처우 개선 요망			기타
			처우 개선 요망	부당대우 시정요망	기타	
처리내역	33	5	12	7	9	
계	33	5	12	7	9	
처우반영	1		1			
기각 및 각하	32	5	11	7	9	

공안관련사범에 의해 제출된 청원의 처리현황은 총 7건이며, 청원내역은 처우 개선(3건), 전향제도 등 폐지, 가석방, 우편물 미송부 시정, 영치품 사용허가 요망 등으로 모두 기각됐다.

교도소내 재소자에 대한 징벌집행현황(96-97년 현재)

연도	계	금치				도서열람 제한	경고	기타
		소계	2월	1월	20일			
96년	6,592	6,171	3,156	2,808	207		421	
97년	4,065	3,671	1,762	1,749	160	1	393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interpia.net ·http://www.interpia.net/~rights

미군범죄 역사가 이곳에

백서 발간·희생자 추모제

"이제 우리 국민들은 더 이상 미군범죄로 인한 민족주권의 유린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민족의 자존을 되찾고자 하는 모든 국민들의 지혜와 힘을 모아 자주적이고 새로운 한미 관계의 실현을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는 선언문과 함께 93년 10월 출범한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상임대표 전우섭, 운동본부)가 창립 4주년을 맞았다.

92년 10월 28일 동두천 윤금이 씨 살해사건 이후 미군문제에 대한 상실대응기구로 출발한 운동본부는 미국의 부당한 인권·주권 유린행위를 사회문제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달려왔다.

그 활동도 △미군에 의한 살인·폭행 사건을 고발·규탄하는 시위에서부터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 개정운동 △미군 공여지 되찾기 운동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규탄 등 꾸준히 영역을 넓혀왔다. 운동본부가 94년 12월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용산미군기지 앞에서 실시하고 있는 '금요일시위'는 지난해 11월 1백회를 돌파하기도 했다.

운동본부는 이와 함께 지난 4년간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미군범죄백서 「민족의 주인됨을 위하여」를 발간하고 오늘 그 기념식을 갖기로 했다. 이 백서는 △92년 10월부터 97년 9월까지의 주요 미군범죄 일지 △미군범죄 통계 및 처리현황 △미군공여지 △미군기지 환경오염 △한미행정협정 제22조, 23조 △오키나와 미군기지 현황 등을 담은 90년대 미군범죄의 역사이다.

또한 운동본부는 백서 발간식에 앞서 오늘 오후 3시 종로5가 기독교회관에

1997년 10월 28 일(화)

제 994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서청협 의장 연행

서울민주청년단체협의회(서청협) 의장 전상봉(34) 씨가 27일 오전 남영동 대공본실로 연행됐다.

전 씨는 상도동 자취방에서 연행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가족 또는 동료들과 전혀 연락을 취하지 못했다. 경찰은 또 이날 오후 서청협 사무실(나라사랑청년회 사무실)에 대한 수색을 벌여, 자료집 〈서울청년〉 〈정치총회 자료집〉 등 51개 품목을 압수해갔다.

.....주요 공판 안내

- ▶ 28일(화)
 - 김광수/김태완/이경석(국보법 찬양·고무등, 한총련) 오전10시 합의21부 311호 선고
 - 구장주(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한총련) 오전10시 합의21부 311호 선고
 - 박관조/정영훈(국보법 찬양·고무등, 한총련) 오전10시 합의21부 311호 속행
 - 송유진(국보법 간첩등) 오전11시 합의21부 311호 속행
 - 이선정/김광남(국보법 찬양·고무등) 오후2시 합의21부 311호 속행
 - 이천재(국보법 간첩등, 범민련) 오후2시 합의21부 311호 속행
 - 이종린(국보법 찬양·고무등, 범민련) 오후2시 합의21부 311호 속행
 - 박상은(국보법 찬양·고무등, 한총련) 오전10시 합의23부 319호 속행
 - 유석상/홍석범/최예경(국보법 위반 찬양·고무등, 고려대 구국선봉대 청년) 오후2시 합의23부 319호 속행
 - 이용석(국보법 찬양·고무등) 오전10시 합의3부 303호 속행
 - 김민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한총련) 오전10시 합의3부 303호 신건
 - 박진호(국보법 위반) 오후2시 합의3부 303호 속행
 - ▶ 29일(수)
 - 나현균(폭력, 전혜투 위원장) 오후5시 4단독 524호 속행
 - 김선우의 1(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한총련) 오전10시 합의2부 302호 신건
 - 김종삼/조창목(국보법 찬양·고무등) 오후2시 합의2부 302호 속행
 - ▶ 29일(수) 서원복(전농동 철거민) 오전9시30분 북부지원 101호 선고
 - ▶ 30일(목)
 - 탁귀영(국보법 찬양·고무등) 오전10시 합의3부 303호 선고
 - 신민자(기차 교통방해등, 한총련) 오전10시 합의3부 303호 선고
 - 정세영/곽정현/김태형(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한총련) 오전10시 합의3부 303호 선고
 - 김명래의 2(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한총련) 오전10시 합의5부 404호 신건
 - 최승원(일반교통방해등, 한총련) 오전10시 합의5부 404호 신건
 - 홍성이/박효상(국보법 찬양·고무등, 한총련) 오전10시 합의23부 319호 선고
 - 원진목(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한총련) 오전10시 합의23부 319호 선고
 - ▶ 31일(금)
 - 강순정(국보법 위반 간첩등, 범민련) 오전10시 합의4부 403호 속행
 - 장진섭/오명록(국보법 찬양·고무등, 한총련) 오후2시 합의22부 319호 속행
- 서울지방법원 형사과 (* 표시는 서울고등법원 형사과)

‘탄압’에 잘려나간 인권영화

5일간의 일정으로 지난 23일 인하대학교에서 개막된 인천 인권영화제가 행사 3일째인 25일 경찰의 탄압에 밀려 조기 중단되었다.

경찰은 개막당일부터 인하대 주변에 병력을 배치해 출입자의 신원 및 소지품을 조사했으며, 김영규(인하대 교수) 영화제 조직위원장의 연구실과 인하대 총학생회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예고했다. 급기야 23일 밤과 24일 오전에 걸쳐 영화제 집행위원장 이은주 씨 등 주최측 관계자 3명을 긴급체포한 경찰은 협박과 회유의 양면전술을 통해 영화제 조기종결을 이끌어냈다.

우선, 경찰은 집행위원 전원에게 연행 방침을 흘렸으며, "이은주 집행위원장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24일 오후 김 조직위원장 앞으로 "영화제를 중단하면 연행자들을 석방하겠다"고 제의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영화제 주최측은 25일 긴급회의를 통해 3인의 석방을 조건으로 영화제의 조기종결을 결정했다. 영화제 조기종결이 발표되자 경찰은 이날 낮 12시경 긴급체포된 집행위원 3명을 석방했다.

한편, 영화제 조기종결과 관련해 인하대 총학생회는 "학생들이 주최하는 모든 행사를 가로막는 것은 학생자치권에 대한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인천 인권영화제 주최측도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사전심의제도와 이를 근거로 인권영화제를 탄압하는 공안당국, 사람을 인질로 협박하는 경찰의 부당한 탄압에 의해 조기 종결에 이르게 됐다"며 "다른 장소로 구해 중단된 영화제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제2회 인권영화제 집행위원회(집행위원장 서준식)도 27일 성명을 통해 "물리력을 앞세워 인권영화제를 막으려고 하는 것은 인권영화를 통한 인권교육의 확산을 두려워하는 정부당국의 무지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이후 광주, 대구 등 전국 10개 도시에서 지역 인권영화제를 반드시 치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지령 1천호

「인권하루소식」이 만난 사람들

오는 11월 5일 <인권하루소식>이 지령 1천호를 맞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지령 1천호를 맞아 문민정권의 허물을 보여주었던 인권피해자들, 인권의 이정표 하나하나를 세웠던 승리자, <인권하루소식>에 뜻과 지혜, 박수를 보태주셨던 분들을 모시고 조출한 기념식과 함께 <인권하루소식>과 함께하는 '인권의 밤'을 갖고자 합니다.

- 때: 11월 5일(수) 오후 6시
- 곳: 기독교회관 2층 대강당(종로5가 옛 기독교방송국)

주간/인권/호/름

(97년 10월 20일부터 10월 26일까지)

- ◆20일(일)
 - 민주노총 해고자복지투쟁특별위원회, 명동성당서 전국 순회투쟁 발대식 갖고 전국 10개 지역 순회투쟁 돌입
- ◆21일(화)
 - 북한 방문한 토니 홀 미국 하원의원, 미국 의회에서 가진 기자회견 통해 북한주민을 살리기 위해 종합전략 필요하다고 강조
- ◆22일(수)
 - 기아자동차와 아시아자동차의 2만5천여 전 직원, 정부의 기아 법정관리신청 결정에 반발해 전면파업 돌입/박정수 국회의원 부총재, 전·노 전 대통령을 사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회의원회 집권시 대서면 단행하겠다고 발표/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한국기자협회·한국방송공로투서연합회 등 언론 3단체, <한겨레>의 북녘동포 취재 및 캠페인팀에 제3회 통일언론상 대상 수여 결정

◆23일(목) 제2회 인권영화제-인천 개막/경찰, 인천 인권영화제 집행위원 이은주 씨 등 3명 긴급체포/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이근용 부장판사), 강원도 양양군 서면 남대천에 건설중인 한국전력의 양수발전소 사업으로 생태계 파괴가 우려된다고 박태수 씨 등 지역주민과 생태학자 및 환경단체 회원 1백16명이 통상산업부를 상대로 낸 발전소사업 계획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 각하/민주당 이명경 의원등 여야의원 28명 일본의 군위안부 강제동원에 관여한 일본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국회재출/정기국회 내에 법제화할 예정이었던 외국인 연수취업제도 도입 연기/한국공원에 솔선협회의 심의위원 및 위원회 운영규정 확정/20-23일 경기도 남양주시 덕릉교에서 진행된 예비군훈련 중, 북녘동포돕기운동을 비난하고 이 운동에 동참하지 말 것 종용하는 교육훈련 진행된 것으로 확인

◆24일(금) 민주노총 중요공원서 기아자동차 노조원등 5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집회 갖고 기아 법정관리 철회 촉구, 집회서 기아자동차 노조원 2명 중상/대검찰청, 윤락업소에서 13살 미만의 미성년자를 상대한 사람에 대해서는 형법상 강간죄 적용키로

◆25일(토) 여성의 전화, 매맞는 여성들의 피난처 쉼터 설립 10주년 기념 심포지움/장제민 중국 국가주석,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유엔 인권조약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혀 /프, 도시 주변 지역의 치안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치안위원회를 총리실 지속기관으로 설치키로

◆26일(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남도연맹, 내년도 추곡가 10% 이상 인상 요구/한국고엽제피해자전우회 조사발표, 지난 7-8월 두달동안 주소가 파악된 3천명의 전우회원 가정을 대상으로 자녀들의 질환·장애실태를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3백29명의 자녀 5백24명이 이상있는 것으로 조사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interpia.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7년 10월 29 일(수)

제 995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한타 합의 안한만 못해

노조민주화운동 사실상 공중분해

노동자들에 대한 테러, 업무평가에 빌미로 한 부당징계와 해고, 심지어 해고자를 도운 한 여성에 대한 보복강간 등으로 물의를 빚었던 한국타이어(대표이사 홍건희) 신탄진 공장.

이러한 회사측의 탄압과 인권유린 행위에 맞선 한국타이어 노동자들의 투쟁은 각계의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내며 지난 8월 23일 회사측과의 합의서 작성을 통해 일단락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최근 한국타이어 출신 노동자는 무척 우울한 소식을 전해왔다.

당시 민주노총의 중재로 노사 양측이 합의한 사항은 △10월까지 해고자 7명 복직 △손해배상소송 철회 △쌍방 계류중인 고소사건 취하 △복직후 일주일 내 위로금 지급 등이었지만, 이행된 사항은 '손해배상소송 철회' 건뿐이다. 특히 한국타이어 인권유린 행위를 알리기 위해 전국을 뛰어다녔던 박용(해고자) 씨는 여전히 수배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복직과 위로금 지급 건도 10월까지지라는 시한을 남겨두고는 있으나 해고자들은 반신반의하고 있다.

합의 이후 노동조건 악화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들을 좌절하게 만드는 것은 8월 합의와 동시에 노조민주화운동이 사실상 와해됐다는 점이다. 합의서는 노동자측 요구 외에 "합의사항을 악용하기 위한 과대·왜곡 선전을 금한다"는 회사측 요구를 담고 있으며, 이것이 노동자들의 입과 손을 봉쇄 버린 것이다. 이에 대해 한 해고자는 "민주노총의 중재에 따른 것이라 합의를 거부하기가 어려웠다"고 밝혔

다. 소식을 전한 노동자에 따르면, 8월 합의 이후 신탄진 공장내 노동조건과 인권현실은 오히려 악화되었다. 변칙적인 변형근로가 도입된 이래 임금책정 없는 잔업이 일상화되고, 생산라인의 노동자 숫자가 줄어드는 등 노동강도는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심지어 지난 9월 김 아무개(27·TBR2과) 씨가 간부에게 잔업의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다 석방처로 머리를 얻어맞는 일까지 발생했다고 한다.

또한 회사측은 어용노조의 회지를 이용해 △회사를 두둔하거나 △변형근로를 합리화하는 등 회사측 입장을 선전·주입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으며, 일체의 반대 목소리를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공장 현실에도 불구하고 노조민주화운동을 벌였던 해고자들은 입조차 뱉곳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복직되더라도 각 지역으로 분산

동시에 10월까지 복직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해고자들은 서울·순천·부산 등지로 분산되며, 이는 한국타이어 노조운동의 공중분해를 의미하게 된다. 「한국타이어 노조민주화추진위원회」 소속 노동자 등 한국타이어 해고자들은 지난 6월 11일부터 '해고자 복직·손해배상소송 철회 및 고소 철회·폭력테러 및 성폭행 진상규명' 등을 주장하며, 두 달 이상 농성투쟁을 벌였다. 그러나 이들에게 돌아온 것은 낮은 일터로의 취직과 몇 푼의 위로금이며, 민주적인 노사관계를 일구려던 노력들이 수포로 돌아갔다는 허탈함뿐이다.

10월 하루소식 구독료

납부 잊지마세요

만화사랑방

이 동수



고려대 '청년'에 무리한 이적단체 규정 구속자 25명중 3-4명만 구성원 혐의

고려대 '구국선봉대-청년'은 과연 이적단체인가.

28일 오후 2시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주심 최세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석상(24·구국선봉대 청년 대장) 최애경(23·96년 총학 선전국장) 홍석범(22·96년 총학 정보통신부장) 씨 재판에서는 구국선봉대 청년의 이적성 여부와 함께 검찰의 무리한 구속수사에 대한 부분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다.

이날 검찰은 유씨에게 이적단체 구성과 이적표현물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유 씨와 그의 변호인 선병주 변호사는 무죄임을 주장했다.

선 변호사는 "청년을 이적단체로 규정한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는 청년의 결성 동기과 과정, 강령과 규약을 비롯해 활동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청년 기관지 <청년의 길> 등을 이적표현물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다"고 말했다. 유석상 씨도 "공개활동 조직인 청년의 활동이 반국가단체를 이롭게하고 동조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면서 "청년의 활동은 이 사회를 살아가는 젊은이가 할 수 있는 당연한

행동이었다. 매주마다 토론마당인 '청년광장'을 통해 학생과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등 학생운동이 이 사회에 기여하는 방향을 찾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주민과의 토론이 이적활동(?)

이날 검찰은 홍석범 씨와 최애경 씨에게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구형하기에 앞서 홍석범 씨 공소사실 가운데 이적단체 구성원 혐의를 철회했으며, 최애경 씨의 경우 이적단체 구성원 혐의를 철회하는 대신 이적단체 동조 혐의를 첨가했다. 최애경 씨가 청년 출범식에 총학생회 간부로 참석한 것이 '동조' 혐의를 받은 것이다.

최 씨는 "6월 구속 당시부터 청년 활동을 한 적이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그리고 재판과정에서 이 주장이 증명되었음에도 출범식에 갔다는 이유만으로 이적단체 동조죄를 씌운다는 것은 너무나 억울하다"고 말했다. 또한 "청년사업은 아침마다 청소를 하고, 주민들과 토론광장을 마련하는 것이었는데 이때 잘한다고 박수를 쳐준 시민들에게도 이적단체 동조혐의를 씌워야 하는가"고 반문하기도 했다.

97년 국정감사 자료(외무통일위 제출)

범죄유형별 미군인 범죄 발생현황

구분	계	범죄유형별 미군인 범죄 발생현황						
		도로교통법 위반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관세법 위반	절도	기타	
'96	건	526	313	100	80	4	19	10
	명	578	313	100	106	10	37	12
'97 (1-8월)	건	366	210	64	62	3	13	14
	명	393	210	64	80	3	19	17
계	건	892	523	164	142	7	32	24
	명	971	523	164	186	13	56	29

형사재판관할권 행사실적

구분	계	배경		미군인 범죄에 대한 행사(%)		한·미 행정사건 전체 범죄에 대한 행사(%)	
		미군인	미군속등	대행(%)	대행(%)	대행(%)	대행(%)
'96	건	702	526	176	18 (3.4)	194 (27.6)	194 (27.6)
	명	767	578	189	23 (4.0)	212 (27.6)	212 (27.6)
'97	건	480	366	114	25 (6.8)	139 (28.9)	139 (28.9)
	명	526	393	133	29 (7.3)	162 (30.7)	162 (30.7)

홍 씨의 변호인 차홍권 변호사는 변론을 통해 "검찰의 공소 취소에서 확인되듯이 청년과는 아무런 관련없는 홍석범 씨에게 무리한 수사를 한 것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최 씨의 변호인 전해철 변호사 역시 "당초 청년 구성원으로 24명이 구속되었는데, 재판이 거의 끝나가는 지금 구성원으로 밝혀진 것은 서너명에 불과하다"며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꼬집었다.

아울러 "청년을 반국가단체로 보는 것은 지나치다"며, 최애경 씨에게 적용된 이적단체 동조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또한 <청년의 길> 등을 이적표현물로 규정한 것과 관련해 이적성에 대한 분명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선고는 11월13일 오전 10시 319호 법정

"검열 중지, 표현자유 보장" AI, 인권영화제 탄압 비난

국제 엠네스티(AI)는 한국 정부의 제2회 인권영화제 탄압을 비난하며, 정부에 대한 항의에 동참할 것을 전세계에 호소했다. AI는 각국 인권단체들에게 인권영화제의 탄압과 관련해 한국 정부를 비롯한 경찰청·법무부·문화체육부 등에 항의서한과 팩스를 보낼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측에 현범에 보강된 표현의 자유 존중과 정치적 검열 중지, 그리고 인권영화제의 지방상영을 허락할 것을 요구했다.

과거청산위, 사면주장 비난

[5·18 완전해결과 정의실현, 희망을 위한 과거청산 국민위원회] (과거청산위)는 28일 5·18민중항쟁구속자회가 "전·노를 조건없이 용서한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논평을 발표했다. 과거청산위는 "5.18구속회의 주장은 가해자의 참회가 없는 상황에서 평화란 이름으로 자행되는 타협행위이자, 정략적 주장에 투항하여 5.18정신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사면주장을 철회할 것을 5.18구속회에 촉구했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 rights(천,하) · E-mail: rights@interpia.net · http://www.interpia.net/~rights

대학교재까지 이적표현물 적용 대학가 서점 4곳 대표 연행·압수수색

지난 4월초 고려대 앞 '장백서점' 등 대학가 사회과학 서점 세 곳이 압수수색을 당한 데 이어 또다시 성균관대 앞 '논장' 등 서점 4곳이 압수수색을 당하고 사장이 연행되는 일이 발생했다. 29일 낮 12시40분경 경찰청 산하 남영동 대공본실 소속 수사관들은 일제히 서점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판매혐의로 서점대표 4명을 연행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을 당한 서점은 '논장'(사장 이재필), 연세대 앞 '오늘의 책'(전 사장 김봉환, 현재 조합형태로 공동운영), 서강대 앞 '서강인'(사장 신영균), 고대 앞 '장백서점'(사장 김용운) 등이다. 이 가운데 장백서점 사장 김용운 씨는 지난 4월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바 있다.

이날 압수된 책 목록을 보면 '한국

민중사 I, II』(풀빛출판사) 『세계철학사 I- III』(녹두출판사) 『사람됨의 철학 I』 『북한현대사』 『소외된 삶의 뿌리를 찾아서』 『녹술은 해방구』 등 대부분 출판된 지 10여 년이 지난 것들로, 경찰이 새삼 문제를 삼는 것은 또다시 '건수올리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89년부터 서울대학교에서 교재로 사용되고 있는 『자본론 I- III』(비봉출판사)도 압수목록에 포함되어 있어, 이적표현물 적용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자의적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자본론』은 서울대 경제학부 전공선택 과목

1997년 10월 30 일(목)

제 996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인 '마르크스 경제학'의 교재로 사용되고 있으며, 가을학기 수강인원은 3백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서울지역 인문사회과학서점모임은 "이번 사건은 국민의 기본권인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도전이자 민주사회의 지적풍토를 파괴하는 몰상식한 처사"라고 비난하며 "총체적인 정권의 위기를 구시대적 공안정국의 조성을 통해 회피하려는 모든 노력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장기수 왕영안 씨 별세

출소 비전향장기수 왕영안(71) 씨가 29일 오후 4시 30분경 지병으로 사망했다. 왕 씨는 1958년 간첩혐의로 구속돼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33년간 복역했으며, 지난 91년 위암 판정을 받아 형집행정지로 출소했다. 발인은 31일 9시 한일병원 영안실(995-3479)

삼성그룹 변칙·위법 세습 비난

59대학 경제·경영학 교수 337명 성명 발표

삼성그룹의 부당한 경영권 세습을 비난하는 전국 경제·경영학 교수들의 공동성명이 발표됐다.

29일 김균(고려대 경제학), 정광선(중앙대 경영대학장) 교수 등이 참가한 가운데 종로 YMCA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59개 대학 3백37명의 서명교수들은 "삼성전자가 이근희 회장의 아들인 이재용 씨에게 주식을 배정하기 위해 사모전환사채를 발행하여 수많은 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전환가격을 책정하여 이 씨에게 부당하게 이전시킨 것은 다른 주주들의 재산을 사실상 착취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어 서명교수들은 "삼성그룹은 위법적이고 편법적인 주주재산의 이전을 통한 경영권 세습의 기도를 중지하고

삼성전자의 주식을 무효화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정부는 위법한 수단에 의한 부와 경영권의 세습을 차단하기 위해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이재용 씨가 취득한 부당이익에 대해 정당한 세금을 부담하라"고 요구했다.

수원지법, 전환사채처분 금지 결정 이재용 씨의 전환사채 이전과 관련,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9월 30일 '삼성전자의 행위는 다른 주주들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위법한 것'이라며 전환사채처분금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판결 전달 기습적으로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했으며, 법원의 가처분결정이 내려진 이후인 10월 2일엔 전환한 주식을 전격 상장함으로써 비난을 가중시켰다.

전노 사면 등 현안에 목소리 내기 제1회 인권문화제 대성황

인천 인권영화제가 경찰의 탄압으로 조기중단 사태를 빚었던 것과 대조적으로 28일 인화대에서 열린 제1회 인권문화제가 2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대성황을 이루었다. 경찰은 인권문화제 행사에도 전경 3-4개 중대를 교문 3곳과 옆 정석항공고까지 배치해 불심검문을 벌였다.

이번 제1회 인권문화제는 인화대총학생회·인화대문화예술운동연합·제2회 인천 인권영화제 집행위원회 공동주관으로 인권영화제 기간동안 열릴 예정으로 준비되어 왔으며, 영화제 조기중단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치루어진 것이다.

행사를 준비해온 박종용(26·부총학생회장) 씨는 "비록 인권영화제는 조기중단되었지만 인권영화제의 의의를 살리고, 전노사면 반대와 양심수 석방, 국가보안법 철폐를 촉구하는 장으로 마련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대학문화를 새롭게 고민하고, 전·노사 문제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박 씨는 "내년에도 인권영화제가 열릴 것으로 생각하며 이와 함께 인권문화제도 준비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총련 사태 등으로 학생운동이 제 자리를 찾기조차 힘겨운 상황 속에서 이번 행사는 또다른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인화대 총학생회의 활동이 높게 평가되고 있다. 총학생회는 영화제 개최 20일 전부터 교내 선전직업 등은 물론, 3일동안 '인권영화제 및 인권문화제 탄압저지를 위한 서명작업'을 통해 4천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내는 등 학생들의 관심을 이끌어냈다. 그리고 영화제 기간인 지난 23일부터 3일동안 연인원 3백50여 명의 학생들이 경찰탄압에 대한 항의표시로 촛불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제1회 인권문화제에는 시나위·이상은·윤도현밴드·조국과 청춘·꽃다지 등이 대거 무료로 출연했으며, 초청인사로는 박정기(유가협 상임의장·고

박종철 열사 아버지), 배은심(유가협 공동의장·고 이한열 열사 어머니), 김진주(시인 박노해 씨 부인, 전 사노맹 중앙위원) 씨 등이 참가했다. 또한 인화대 영화연구회 '등대'가 제작한 제2회 인천 인권영화제 탄압 다큐멘터리가 상영되기도 했다. 이날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민·학생들의 가득찬 열기 속에서 인권문화제는 오후 5시부터 장장 5시간30분동안 진행됐다.

관선이사 파견 촉구

덕성여대 사태

이사장의 해임 이후에도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는 덕성여대 사태와 관련, 김창국(참여연대 공동대표), 주종환(동국대학교 명예교수) 씨 등 각계 인사 24명은 관선이사의 파견을 촉구하며 29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현 이사진이 사태수습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교육부는 덕성여대 전구성원의 반발을 사고 있는 현 이사진을 조속히 사퇴시키고 관선이사를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관선이사는 사태의 발단이 된 한상균 교수를 즉각 복직시키고 학내 전구성원이 동의하는 절차와 원칙에 따라 신임 총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덕성여대사태는 전 재단이사장 박원국 씨의 전횡과 한상균 교수의 제임용 탈락 등을 발단으로 시작되었으며, 교육부가 사태의 책임을 물어 이사장 승인을 취소했으나, 현재까지 교수들과 학생들은 '한상균 교수 즉각 복직' 및 '민주적인 관선이사 파견'을 요구하며 철야농성을 벌이고 있다.

전상봉 의장 석방 촉구

서울민주청년단체협의회

[서울민주청년단체협의회] (서청협)는 29일 전상봉 의장의 석방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서청협은 "시대착오적인 국가보안법이 선량한 민주통일양심을 가차없이 질식시키고 있다"며 냉전시대 유물인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고 주장했다.

27일 연행된 전상봉 의장은 현재 남영동 대공본실에 구금되어 있으며, 서청협 자료집(대의원대회 자료집, 회지<서울청년>)과 관련,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혐의 및 범민족대회 참석여부 등에 대해 조사받고 있다.

행사와 동정

■ 한국국제문제연구소가 발행하는 <아침세계소식>의 자료관리용 데이터베이스 [월드매치 1.0]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월드매치 1.0] 을 통해 <아침세계소식>의 제목검색과 주제어검색이 가능하며, 연구소측은 29일(수)부터 11월 5일(수)까지 1차 신청자를 접수한다.
· 접수방법: 전자우편-IPECK(나우누리, 천리안, 유니텔) TSIPECK(참세상) LIBERTAD(하이텔) 전화 986-0025 팩스 986-0065

□ 여성복지발전을 위한 포럼
· 때: 10월 30일(목) 오전 10시 30분
· 곳: 종로5가 기독교교회연합회관 4층 중강당
· 주최: 한국여성단체연합
· 내용: 여성복지정책의 현황과 발전방향(김인숙)/ 국민연금 설문조사에 나타난 1인 1연금제 도입의 필요성과 여성복지(조영숙)/ 여성복지예산의 현황과 전망(박수천)/ 98년 여성복지예산의 문제점과 대안(남인순)

□ 전국교사결의대회
· 때: 11월 2일(일) 오후 1시
· 곳: 종로3가 종묘공원
· 주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interpia.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7년 10월 31 일(금)

제 997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안팎에서 몰아치는 학생운동 탄압

경기대 언론사 기자 6명 단식투쟁

대검 공안부의 한총련 소속 대학생에 대한 검거작전으로 현재까지도 구속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대학당국의 학생 자치권 침해도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대(수원캠퍼스)에서는 권은경(학보사 편집국장)·장동욱(여자신문사 편집국장, 언론출판연합회 의장) 씨를 포함한 기자 6명이 30일부터 무기한 단식투쟁에 들어갔다.

단식농성자들의 요구사항은 △기사검열을 통한 삭제·수정을 즉각 중단하고 편집자유권을 전면 보장할 것 △기자 임명·해임에 관한 학교의 인사권 개입을 중지할 것 △재정지원 중단을 통한 대학언론 탄압을 중단할 것 △월권행위를 자행하는 학교당국과 주간교수는 1만2천5백 학우들에게 공개사과할 것 등이다.

여자신문의 경우, 학교측과 김경석(영문과) 주간교수는 지난 1학기 동안 신문사에 대한 기사검열권과 기사검열권을 자신들에게 일임할 것을 요구하며 재정지원을 전혀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자신문은 지난 1학기동안 2번밖에 발행되지 못했는데 그나마 신문사 기자들의 사비를 털어 발행한 것이며, 2학기 들어 현재까지 한차례도 발행하지 못하고 있다.

기사검열에 인사권까지 좌지우지 하보의 경우 기사 검열문제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경대학보>는 이미 2학기 개강호 '범민족대회와 한총련' 기사가 문제가 되어 학보배포 중단사태를 빚은 바 있는데, 또다시 학교당국과 이재인(국문과) 주간교수의 인쇄거부로 27일자 발

만화 사랑방



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 조사 거부"

광주교도소

지난 9일 발생한 광주교도소 재소자 폭행사건과 관련, 광주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위원장 임원배 변호사)의 재소자 접견요청이 교도소 당국에 의해 거부됐다.

27일 인권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은 사건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 징벌중인 박웅, 조용근, 추창근 씨 등 재소자 3명에 대한 접견을 신청했지만, 교도소측은 "인권위원회 차원의 접견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선변호사의 접견만 허용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교도소측은 소내 양심수 12명에 게 내린 한달간의 징벌조치를 29일 오전 풀었지만, 가족을 제외한 사람들의 면회는 제한하고 있다.

"언론출판 자유 보장하라"

사회과학서점모임 공동투쟁 선언

29일 발생한 서울시내 대학가 사회과학서점 4곳에 대한 압수수색 및 서점 대표 연행과 관련, '서울지역인문사회과학서점모임' (사회과학서점모임)은 당국의 탄압에 대해 단호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관련도서 목록·아래상자).

사회과학서점모임은 30일 긴급회의를 갖고, 연행된 서점대표들이 구속될 경우 서명운동과 규탄집회를 벌여나가기로 결정했다. 사회과학서점모임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사건은 단순히 이적표현물을 단속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현 정권의 총체적 위기를 구시대적인 공안정국의 형성을 통해 회피하고자 하는 음모의 일환"이라고 비난하며 △연행자 석방 및 압수 출판물 반환 △연행 사건 책임자의 공개 사과 △공안정국 조성시도 중단 등을 촉구했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도 성명을 내고 "경찰의 탄압은 국가보안법이라는 시대의 악법을 도구 삼아,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자의적인 적용을 통한 '건수율리기'식의 마구잡이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시내 대형 유통서점에서도 판매되는 도서들을 문제삼아 영세서점 대표들을 연행한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반상식적인 탄압"이라고 지적했다.

출판사 대표 국보법 위반 기소

한편, 지난 9일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혐의로 구속됐던 정

우창 씨 등 이웃출판사 관계자 3명이 29일 기소됐다(본지 10월 18일자 참조). 검찰은 이웃출판사가 93년 제작한 '조국통일론' 등 사회과학 서적을 문제삼아 이같은 혐의를 적용했다.

'폭력배동원 경찰' 고발

목포 대학생 검거과정서

목포민주시민운동협의회(공동의장 박광웅·박심배)는 지난 9월 4일 발생한 '목포경찰서의 폭력배 동원 학생검거' 사건과 관련,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27일 고발장을 접수했다.

목포민주시민운동협의회는 고발장에서 △검거과정 폭력배를 동원했다는 학생측의 주장과 이를 확인했다는 신문보도 사실에 대해 진상을 철저히 수사해 줄 것 △직권남용, 불법체포, 특수수거침입 등 이완섭 순경이 저지른 불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 등과 함께, 사건전모에 대한 구체적인 진상 규명과 범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책임자를 의법처리할 것을 요청했다. 덧붙여 "올바른 경찰상 확립과 민주적 범법행위를 통해 시민의 기본권 확보는 물론 극히 비정상적인 범법행위와 공권력과 폭력배 간 공생의 악습을 끊기 위해 고발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날 고발당한 이완섭 순경(목포경찰서 소속, 이후 경장으로 특진)은 9월 4일 새벽 한총련 출판법과 관련해 수배를 받아오던 목포전문대생 장재훈 씨등 5명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1인당

29일 압수된 주요도서 목록

'97새내기 책읽기 세상읽기' 『한국민중사 I, II』 『강좌철학』 『사람들의 철학 I, II』 『실천론, 모순론』 『공산당선언』 『철학강의』 『한국근현대 민족해방운동사』 『항일무장투쟁사』 『독술은 해방구』 『경제원론』 『꽃파는 처녀』 『소외된 삶의 뿌리를 찾아서』 『역사와 계급의식』 『NL론 비판』 『김일성선집』 『래닌자작집』 『북한현대사』 『민중의 역사』 『트로츠키』 『대중파업론』 『날세비키 당조직론』 『임노동과 자본』 『자본론 I, II, III』 『실천의 변증법』 『세계철학사 I, II, III』 『철학의 기초이론』 『사적유물론』 『당당하게』 (월간지) 『노동전선』 (월간지) (범민련 자료집) 등 40여종

30만원씩 주기로 하고 조직폭력배(속칭 오거리파)를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생 상대 도로위 충격전

경찰 위협적 검거 여전

한총련 투쟁국장 김준배 씨의 죽음으로 경찰의 무리한 검거작전에 대한 비판이 있는 지 얼마되지 않아 또다시 한총련 소속 대학생 검거과정에서 실탄이 발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8일 오후 10시 경찰은 한총련을 탈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배중인 경기대(수원캠퍼스) 인문대 학생회장 김학균(영문 93) 씨와 야간대 학생회장 이우진(산업공학 93) 씨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실탄 2발과 공포탄 2발을 발사했다. 이 사실은 김 씨 등과 함께 수원 중부경찰서로 연행되었다가 풀려난 한 학생에 의해 확인되었다.

이 학생에 따르면, 당시상황은 매우 위험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이들을 태운 승용차가 학교를 빠져나가 북수원 톨게이트 부근을 지날 무렵부터 2대 차량에 나눠탄 사복경찰이 뒤쫓기 시작했다. 인근 신호등이 모두 정지신호로 바뀐 상황에서 경찰은 총기를 발사하며 추격을 벌였고, 학생들은 2Km 정도 추격을 당하다 유턴하던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바람에 검거되었다.

지령 1천호

<인권하루소식>이 만난 사람들

오는 11월 5일 <인권하루소식>이 지령 1천호를 맞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지령 1천호를 맞아 문민정권의 인권피해자들, 인권의 이정표 하나하나를 세웠던 승리자들, <인권하루소식>에 담과 지혜, 박수를 보태주셨던 분들을 모시고 <인권하루소식>과 함께하는 '인권의 밤' 행사를 갖고자 합니다.

- 때 : 11월 5일(수) 오후 6시
- 곳 : 기독교회관 2층 대강당 (종로5가 옛 기독교방송국)